북한 이해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11

제2절 북한체제의 특징 14

제3절 북한의 딜레마 19

II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제1절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25

제2절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28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28
2. 주체사상의 한계 31
3. 선군정치의 부상 32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35

1. 노동당 36
2. 중앙기관 45

제4절 통치체제와 3대 권력세습 50

1. 김정일의 통치체제 50
2.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권력 재편 53

Ⅲ 북한의 대외관계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61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61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64

제2절 북한의 대외관계 66
1. 미국과의 관계 66
2. 일본과의 관계 74
3. 중국과의 관계 78
4. 러시아와의 관계 82
5. EU와의 관계 85

Ⅳ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91
1. 북한군의 성격 91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92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95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95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97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100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현황 103
1. 군사전략 103
2. 상비전력 및 장비 106
3. 예비전력 111
4. 핵개발 및 전략무기 113

제4절 대외 군사관계 및 대남도발 118
1. 대외 군사관계 118
2. 대남도발 122

CONTENTS

V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기조 137
1. 경제체제의 특징 137
2. 경제정책의 기조 139

제2절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146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147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54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161

제3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169
1.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정책 169
2. 총동원정책과 화폐개혁 173
3. 제한적 개방과 대중국 개방확대 정책 176
4.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178

VI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제1절 북한의 교육 185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85
2. 교육과정과 방법 195
3. 학교생활 203

제2절 문학과 예술 207
1. 문예정책 207
2. 분야별 실태 212

Ⅶ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

제1절 계층구조 225

1. 북한의 계층 225
2.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의 특징 229

제2절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231

1. 북한주민의 가치관 231
2. 하루생활과 생애과정 235
3. 의식주 생활 239

제3절 일탈과 사회통제 246

1.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246
2. 사회통제 252

제4절 북한의 인권 258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258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263
3.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266

CONTENTS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29
표 2–2	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41
표 3–1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71
표 3–2	6자회담 개최 현황	72
표 3–3	남북 수교현황	87
표 4–1	4대 군사노선	93
표 4–2	군 간부양성 과정	98
표 4–3	북한 지상군의 정기훈련 및 활동	100
표 4–4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105
표 4–5	남북 군사력 비교	108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112
표 4–7	북한의 미사일 제원	117
표 4–8	6·25 전쟁 초기 양측의 전력비교	125
표 4–9	국군 및 유엔군 인명피해	126
표 4–10	민간인 피해	126
표 4–11	1999년 이후 북한의 서해해상 도발 주요 사례	131
표 4–12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33
표 5–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47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148
표 5–3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151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155

표 Tables·그림 Pictures

표 5–5	북한의 식량수급량 추이	158
표 5–6	북한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의 비중	164
표 5–7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비중	165
표 5–8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167
표 6–1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196
표 6–2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198
표 7–1	북한주민 성분 조사사업	226
표 7–2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240
표 7–3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과 범죄명	248
표 7–4	북한의 주요 사회조직	253

그림 2–1	노동당 기구	40
그림 2–2	정권기관	49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	96
그림 5–1	북한 대외무역 추이	163
그림 5–2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172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188
그림 6–2	북한의 학제	190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 조직	211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제2절 북한체제의 특징
제3절 북한의 딜레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I

Key Point

+ 0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 02

북한은 당과 국가체제 위에 있는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서, 국가와 협동단체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03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성격을 가진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경제회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부작용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민에 대한 통제와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04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북한체제도 체제생존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체제의 안정과 유지에 주력하면서도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개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때로는 남남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 지닌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상생과 공영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하였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친 부자 권력세습이 이루어졌다. 북한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북한체제의 특징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식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령중심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 사회주의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체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는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다.

북한에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중심의 체제논리는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 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 개인에게 한정된 호칭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하고 1998년에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불렀으며, 김일성은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

은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거쳐 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가 수립되었듯이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통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제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를 이은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1]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2]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1_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백과전서』(제3권), 1983, p.530.

2_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경제사전』(제2권), 1970, p.118.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장마당과 암시장 등)에 기대어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이후 북한식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시장경제적 성격을 가진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포전담당제는 2004년부터 협동농장 분조관리제의 '분조' 규모를 7~8명에서 3~4명으로 축소하여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2006년 이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 전매제專賣制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2010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계획경제 강화에 주력했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통제 조치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켰고,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을 묵인하면서 통제를 완화해 왔지만 2011년 12월 김

정일 장례 기간 직후부터 다시 외환사용 통제 등을 가하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북한에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수령·당·인민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와 하급 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이러한 규범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체제가 돈과 정보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양상이 목격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관계망들이 일상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북한의 딜레마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전환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북한체제가 대내외적으로 경험해 왔던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체제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 및 체제 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국제질서에 적응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오히려 기존 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경제위기의 극복과 체제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북한은 외부적으로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에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만으로는 자신이 직면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곧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의 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부, 즉 한국과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첩경은 현재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란, 이미 위기로 치달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성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나타나게 될 제반 요소들은 북한의 현재 지도부와 체제의 생존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전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외부의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전략 속에 안주해 왔던 측면이 강했다. 나아가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 요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체제 유지 전략으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북한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주변국을 압박하고 때로는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서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북한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와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곤 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경우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김정일 사후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여 권력의 안정적 장악과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핵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즉,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문제를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흥정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와 식량 등을 외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측

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2006.10, 2009.5)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은 외부의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대북제재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010년 8월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8.27)에서 후진타오 주석도 개혁·개방이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결국 북한은 체제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또한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확립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강성대국의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했던 20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가 이후 북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1절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제2절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제4절 통치체제와 3대 권력세습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II

Key Point

+ 01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는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을 벌였으나,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다른 정파들을 제압하고 북한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 02

주체사상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선군사상이 부상하면서 사회적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은 개인의 권력독점을 통한 1인지배체제의 강화와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 03

북한은 당과 군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로 운영된다. 헌법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행정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내각 총리 등이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헌법의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함으로써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 04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공포정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유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사망 직전까지 3대 권력세습의 공식화와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2012년 김정은이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김정일의 직책을 모두 승계함으로써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출범시켰다.

제1절 북한의 정치체제 형성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북한의 각계 정파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의 건립을 주도하였다. 조만식이 앞장선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필두로 각 도, 시 및 군 지역에 유사한 건국준비위원회 혹은 자치위원회 등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지역에 군을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된다.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9.20)에 따라 소련은 1945년 10월 북한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 조직의 구성을 위해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소련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47년 2월에 창립된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어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 대의원은 같은 해 9월에 헌법을 최종 채택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기 위해 형식상 정권수립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미루었을 뿐이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남북한 대표의 선출을 위한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와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단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정권수립을 본격화함에 따라 남북을 통합한 단일 정부의 수립은 무산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정치지형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 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파로는 허가이 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무정 등의 친 중국 연안파 등이 정치의 중심 파벌들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김일성 등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 유격대 세력이 경쟁에 가담하였다. 그와 같은 38도선 이북지역에서의 정권수립을 위한 각축과정에서 결국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타 정파들과 경쟁 속에서 북한권력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3년여의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면서 전 국토의 피폐화를 초래하였다. 전쟁 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을 둘러싸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주창하던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한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외치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의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그 후 주체사상의 성립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 중앙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1인 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의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는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사회주의화의 초석을 이루는 작업은 경제생산활동의 협동화로서,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

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 전쟁 이후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며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은 개인들의 이기적인 근로동기를 배척하려는 사회주의적 가치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인민대중들의 근로를 촉진시킬 수 없었던 북한의 처참한 전후 경제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등이 있다.

1960년대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기반이 정착되어가는 시기로 김일성은 권력 독점적 단일지도체제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김일성은 지속적인 숙청작업을 통한 일인권력의 공고화 및 주체사상의 강화 작업 등으로 북한체제 내에서 결코 도전받을 수 없는 신적인 절대 권력자의 위치로 자리잡았다. 과도한 유일체제화는 북한체제에 안정성은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시대적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체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1972년 12월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드러난 권력구조의 특성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독재권력 강화,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 인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보유한 사회주의 독재체제 구축이다.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은 197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20년에 걸친 권력승계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반세기 통치의 김일성 체제로부터 김정일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2010년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제2절 통치수단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성립과 내용적 변화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주체사상이라는 명칭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에 접어들면서이며, 1970년 제5차 당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떨쳐내고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

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며 북한주민의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소련 및 중국 내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일인독재지배체제의 비판을 촉발함에 따라, 이 같은 비판의 유입을 대내적으로 차단하면서 북한의 독재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정치 이념적으로 표출된 측면도 있었다.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용	제기 시기	배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1955.12.28)	• 스탈린의 사망 • 당내 남로당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6.12.11)	• 대외원조 감소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 김일성 움직임 고조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1957.12.5)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1962.12.10)	• 중·소분쟁 심화 • 미·소 공존 모색 • 한국의 5·16 군사쿠데타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1966.10.5)	• 중·소분쟁의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1967.5.28),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2.12)	• 김일성 1인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온 사회 주체사상화 강화	제6차 당 대회(1980.10.10)	•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	• 3대 세습체제 공식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일지도사상화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 김정은 체제 출범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이론적 변환작업을 시도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

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가 전개되었다.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수령론'의 내용은 인민대중들이 개별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상호 극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수령의 올바른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세습수령에 대한 지속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작업이 더해졌다. 주체의 위업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대를 이어가며 주체의 위업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유래가 없는 부자 세습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습 전제왕조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시각까지도 바꿔놓은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연속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북한은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체제수호를 위한 대안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된 주체사상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한 동구권 사회주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난제에 직면하면서 실리적 사고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이념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의 기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사회적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2 주체사상의 한계

북한의 주민들은 학습과 교화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일상화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적 사회건설의 기초를 이루며,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토대라고 주창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며 무오류의 사상으로서 그 현실적 실천성을 확보한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경제난국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동 강령적 성격의 슬로건들이 정치적 기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최고 지도이념이라는 공식적 위상과는 별도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간혹 생필품 수급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된 개인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생존의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정당화 논리로 주체의 의미를 활용하는 풍조가 북한사회 내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체의 기치가 내실없는 외형적 슬로건으로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대두는 불가피할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의 극

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우상화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수령론'의 근저에서 인민대중은 주체가 상징하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였다.

3 선군정치의 부상

주체사상이 김일성 지배시기의 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기에 추가된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북한의 지도이념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어 2010년에는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고 언급되었듯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이 국가 제반 부문의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이 준비되던 1995년 초에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 기치로 정착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며 북한사회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공하는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군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투영시키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당이 주민에게 기본적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주민은 정권에 대한 지지 및 정통성을 부여해 왔

던 사회주의적 후원주의 체제를 와해시켰다.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의 내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는 군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군을 주민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군에 대한 주민의 의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가 아닌 군이 사회 내의 방대한 연결고리를 토대로 다각적 사회통제를 시도하는 당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군과 주민의 일원화를 추구한다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는 지도자와 주민 사이에 사회 외부적 조직인 거대한 군이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북한의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의 발현을 후원하는 내적 요인들이다. 이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와의 체제 경쟁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보존하는 군사 부문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 또한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 요인이다.

경제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직면하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자기 존립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김정일 정권에게 선군정치는 정권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선군정치는 산적한 대내외적 문제들 속에서 정권 유지의 불안감을 지닌 김정일 정권이 체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도 경제 난국과 국제적 고립의 두 가지 핵심적 난제로 인해 체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도 헌법 개정 및 2010년도 당 규약 개정시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바 있다. 반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문화하고 김정일 시대의 지배이념으로 '선군사상'을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 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는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2012년 4월 헌법 개정시 서문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제3절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사회 내 부분이익들을 대변하는 파당들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한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가 극도의 사회유기체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사회와는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1998년의 개정 헌법은 김일성 시대의 독점적 일인권력지배를 상징하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대신 국방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내각 총리 3인에게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맡기고,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은 내각 총리에게 부여하는 한편,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형식상의 기능분립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조항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장은 공석으로 하고, 2012년 헌법의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하였다.

북한은 3개의 거대한 관료 조직을 보유하며, 이들을 통한 국가주의적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당 조직과, 인민군 조직,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정부 조직은 북한체제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1 노동당

(1)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북한은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노동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라고 규정했던 종전과는 달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성격을 근로대중의 정당에서 김일성 개인의 정당으로 변화시켰다. 한편, 당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영도 조직으로서의 노동당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 최고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영도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북한 내부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의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업 달성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3부 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유일수령의 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당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되는 셈이다.

결국 노동당은 개괄적 수준에서는 북한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의 수령중심체제 하에서 노동당은 계급정당이지만 동시에 수령의 당으로서 일인지배를 후원하는 사당私黨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은 노동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은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

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그 핵심 업무로 관장하게 되었다.

노동당의 의사결정구조와 집행체계는 레닌이 고안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레닌이 자신의 독재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반대자들을 '인민의 적'이라는 미명하에 숙청하는데 활용한 제도로서 높은 악명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일인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써 기능한다. 결국 하의상달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흔적을 감추고 상의하달의 중앙 집중주의 원칙만 남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인독재에 호응하는 제도로 전락하였다.

아울러,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일반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서 더 나아간 퇴행적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까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당과 군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으며, 주체사상 및 그 하위이론인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통해 김정일 및 그 일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고, 일인지배를 정당화하였다.

(2) 당 조직체계와 기능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 대회이다. 당 규약은 당 대회가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 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0년간 당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정권은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개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 중앙위원회가 당 대회를 소집하며 소집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및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열리지 않고 있었다.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이다.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 대표자회 소집을 결정한 것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는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를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총비서의 지위를 명기하고

당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림 2-1 노동당 기구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13. 2.

표 2-2 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기간	주요안건
제1차 당 대표자회	1958.3.3~6(4일)	• 인민경제 5개년 계획 • 당의 통일과 단결 강화 • 당 조직문제 등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10.5~12(8일)	• 현 정세와 당의 과업 •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당면과업 • 조직문제 등
제3차 당 대표자회	2010.9.28(1일)	•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제4차 당 대표자회	2012.4.11(1일)	• 김정일 영원한 당 총비서 추대 •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당 중앙군사위원장 겸직) • 당 규약 개정 ※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지도사상 명문화 •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보선·선거·임명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당 정치국과 그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집중되지만,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당 내부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로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외에 2012년 12월 현재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등 9명의 비서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은 3대 세습의 사실상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당 대표자회 및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2차 전원회의를 통해 그 동안 공석이었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였다. 종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사망),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사망), 리영호(해임)

등 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특히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부위원장제를 신설하여 김정은을 부위원장에 선출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두고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을 당 제1비서(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직),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에 추대함으로써 당·군의 최고직위로 등극시켰다.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서문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며, 김정은 영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룡해(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치국 위원으로 장성택, 당 중앙위원회 비서에 김경희가 선임됨으로써 일단 김정은 체제의 당적 권력구도가 확립된 점이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은 2012년 7월 리영호가 해임되면서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등 4명이다. 아울러 2012년 11월 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체육강국'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에 장성택이 선임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당의 지방 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의 당 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 같은 중첩적 위계구조는 당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에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도 동시에 지닌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최하 기층조직인 당 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 위원회의 책임비서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이념 강조, 당 총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당私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북한의 권력구조는 집중적 권력을 지닌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 관료가 행정 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의 당내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며, 추진된 정책은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군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당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 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부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 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한편, 당 지도부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군 내에 조직되어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강한다.

이러한 당-군 관계는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

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어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의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나, 핵심 참모들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비서국을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는 반박되기도 한다.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한편,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준국가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도 유명무실한 단체로서 기껏해야 노동당의 위성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사실상의 준국가기관으로서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제한적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중앙기관

(1) 국방위원회

1992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하여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그리고 2009년 헌법 개정에 이르러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그 밑에 1인의 제1부위원장(공석), 4인의 부위원장과 5인의 위원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해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고, 제1부위원장직은 폐지하였다. 또한 최룡해,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를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임명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위원장의 명령 및 국방위원회의 결정·지시·집행의 감독,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하며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또한 외국과의 중요 조약의 비준 및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한다.

(2) 최고인민회의

공식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1~2차례의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대

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이하 주요 행정 각료, 최고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헌법 서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을 서술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공표와 조직문제(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 보선 및 최고인민회의 예산위 위원장 교체) 등 2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과 폐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발표,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등 일반적인 대외업무도 수행한다.

(3) 내 각

내각은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3년 1월 기준 8위원회, 30성, 1원, 1은행, 2국 총 4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내각의 수장은 내각 총리로서,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 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추진한다.

(4) 사법기관

① 검찰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 감시와 더불어 체제 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최고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최고검찰소는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일체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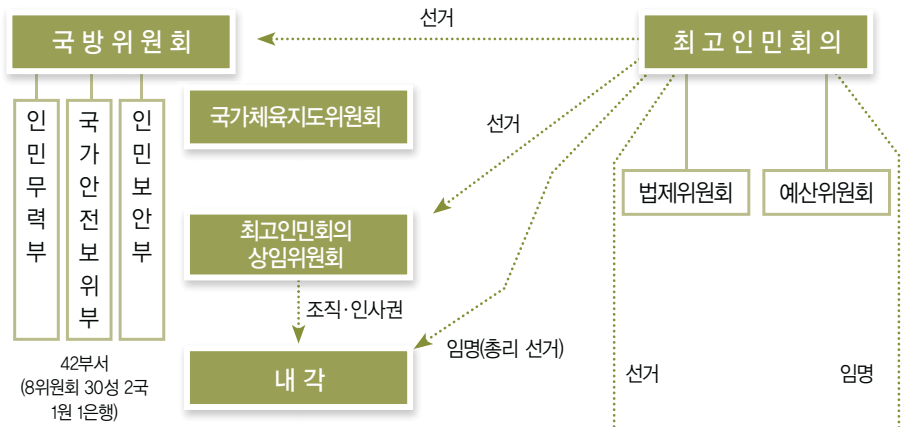
최고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검찰소가 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②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기관은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하부 기관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 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그림 2-2 정권기관



교육 위원회	국가가격 제정위원회	국가계획 위원회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국가검열 위원회	국가품질 감독위원회
수도건설 위원회	합영투자 위원회	건설건재 공업성	경공업성	국가건설 감독성	국가자원 개발성
국토환경 보호성	금속 공업성	기계 공업성	노동성	농업성	도시 경영성
무역성	문화성	보건성	상업성	석탄 공업성	수매 양정성
수산성	식료일용 공업성	외무성	원유 공업성	육해운성	임업성
재정성	전력 공업성	전자 공업성	채취 공업성	철도성	체신성
체육성	화학 공업성	내각 사무국	중앙 통계국	국가 과학원	중앙은행

도(직할시·특별시) 인민위원회

평 양 시	나 선 시	남 포 시	강 원 도	양 강 도	자 강 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13. 2.

제4절 통치체제와 3대 권력세습

1 김정일의 통치체제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독점적 단일지배체제를 구축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는 부자 권력세습을 단행하였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와 내각 등에서 업무경험을 쌓고 31세의 나이에 당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1980년의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과 군 양자를 주도하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핵심적 대외이슈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김일성의 공식적 후계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1980년대 김정일은 북한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 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앙양',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이 있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91년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김정일의 주도적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은 군사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듬해 12월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할 무렵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소조원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이 2~3년간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 각급 기관 및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 간부,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후, 1993년의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군통수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위상으로 자신의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다. 3년여의 체제 정비작업 이후 1997년 말 김정일은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개정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올라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출범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최근까지 심각한 경제난과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비교적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유지하며 북한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일은 사망하기 전까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의 안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의 통치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별화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특성은 독특한 일인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인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념체계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특성은 군사 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 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군후로'先軍後勞, '총대가정론'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는 북한의 대표적 슬로건들이다.

나아가,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 정치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이끌어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 슬로건도 선군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의 기치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군부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확장하며 그 영향력을 사회 내에 증대시키고 있다. 군부는 주요 건설사업에도 자체 병력을 투입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은 군 주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 침체된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훈련된 군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의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서 노동의욕을 상실해버린 북한주민들을 산업현장에 재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의 선도적 모범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북한 핵위기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조가 대내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의 기치가 북한사회를 이끌면서 군부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위기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강성대국론'을 내세웠던 점을 들 수 있다.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체제의 위기시대를 넘기면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주민의 결속과 재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강성대국론

은 사상·정치의 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실현하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다.[3]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적 슬로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책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올바른 사상적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종자론'을 내세우는 것도 개혁과 개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대미관계와 대남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면서 체제생존의 힘든 해법을 찾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자력으로만 극복하기는 힘들며 외부의 광범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외교적 환경의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만 할 숙제이며, 향후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국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권력 재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신체제는 후계자 지명, 후계체제의 형성 및 공식화 단계를 거쳐 구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독점, 군부숙청 등을 통해 세습권력을 공고화하였다. 김정일 사후의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구축을 위해 이미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세습절차를 후계자 지명 및 3대 세습체제 구축작업을 토대로 3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3대 세습에 기초한 김정은 체제

3_강성대국론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 등장한 것으로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1년 들어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격하시키고,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였다.

구축과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부터였다. 예컨대, 2010년 초부터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당과 군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등장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데 이어, 2010년 10월 5일 군인들의 협동훈련 참관을 비롯하여 2010년 말까지 38회의 공개 활동을 실시하는 등 권력세습을 위한 후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한편, 북한은 제3차 당 대표자회 개최 1주년을 맞아 일심 단결의 정신, 불굴의 강행군 정신, 계속혁명의 정신 등 '당 대표자회 정신'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의 관철을 통한 김정일 영도력 및 당 영도체계 강화, 김정은 3대 세습 공고화 등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망(2011.12.17) 이후 북한정권은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 당 정치국 회의(2012.7.15) 등을 통한 김정은 중심의 권력 재편 및 체제출범을 계기로 군에서 당과 정치국으로의 권력이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주도의 권력체제의 특성에 맞추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 및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통상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6·25 전쟁 참전세대인 혁명 2세대(3대혁명소조 지도세대), 1940~50년대에 출생한 혁명

3세대(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세대)로 나뉜다. 현재 80대인 혁명 1세대는 권력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혁명 3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엘리트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체로 김정일 정권 말기에 재편된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전문성을 가진 김정일의 측근세력으로서, 김정일과 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갖는 대학 동기나 당 조직지도부 동료들 그리고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엘리트 집단을 다수 포함하는 50대에서 6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1960년대 후반 이래 김정일을 보좌해 온 측근들로 당 정치국과 비서국 및 국방위원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북한의 권력계층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는 주석단 서열, 직책, 현지지도 수행 빈도, 김정일 부자와의 관계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지표가 주석단의 서열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이후 북한의 주요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주석단 서열을 분석해 보면 군부인사의 상위권 진출이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동당 간부들의 주석단 서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1993년 이래 당 정치국의 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위상 약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김정일 체제에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지위 상승이 당 정치국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당 대표자회 결과를 통해 볼 때, 당 중앙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재편을 통해 당 정치국의 위상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 수준으로 복원되었으며 당 지도기구가 정상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의 권력 정비를 통해 당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주석단의 20위권 안팎의 서열을 대부분 차지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김정은에게 대장 직위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당

과 군의 핵심인물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요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의 권력구조가 현재와 같이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출범을 알린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개최를 통해서였다.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규약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조직문제와 관련 직제는 물론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는 비로소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정권으로서는 김정일 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정치과정에 매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정권은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하였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아울러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김정일 유훈통치,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군·보위기관의 김정은 선군영도 결사옹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및 경공업·4대 선행 부문·대외무역, 자주통일과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강조한 '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발표(2011.12.31)하였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정들에 포함된 정신은 궁극적으로 2012년 4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그것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 선언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에 따라 북한정권은 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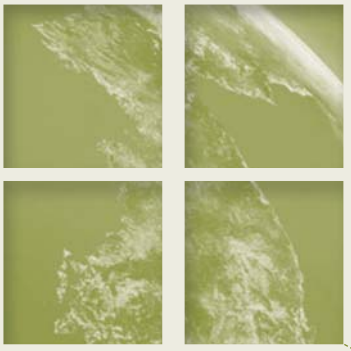
충성을 강조하는 포스터

차 당 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직위에 추대함으로써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또한 북한정권은 김정은 체제구축을 위해 김정은에게 이미 부여된 당·정·군의 최고직책과 함께 당 정치국 회의(2012.7.15)를 통한 리영호의 해임 및 김정은의 공화국원수(2012.7.18) 등극을 발표함으로써 공고화된 권력에 기초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북한의 3대 세습은 그간에 어떤 독재체제에서도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행위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북한이 겪을 변화는 김정일이 남겨준 유산들 간의 상호관계 및 작용 그리고 외적 변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은 북한 내부의 가변적 정치상황, 북한내부 경제여건의 개선 여부, 국제적인 환경의 조성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 '김일성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 조선', '김일성 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또 한분의 김정일인 김정은"과 김일성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했듯이 대를 이어 김정은에게도 충성을 다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세습 과정에 있어서 현재 북한정권과 김정은이 처한 객관적·주관적 조건이 과거 김정일로의 세습 때와 많이 다르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북한 이해

2013

NORTH KOREA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제2절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II

Key Point

+ 01

냉전시기 북한의 외교활동은 한반도 공산화와 대남 우위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탈냉전 이후에는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등 외교를 다변화하고 있다.

+ 02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생존의 핵심 관건으로 보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본과는 식민지배 보상금 등 실리확보 차원에서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대미·대일관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03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긴밀화하여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제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는 고위급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04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수단으로 하여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제1절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냉전시기 북한의 외교는 한반도의 공산화와 대남 외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의 안정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는 국가생존과 체제유지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

냉전시기 북한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구조와 이념적 갈등요인 때문이었으며,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한국과 수교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강화하는 등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 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때 소원했던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결상황 속에서도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식량, 원유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체제안정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와 대일관계는 미·북관계의 종속 변수로 보고 미국 등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수교를 추진하여 선진기술 도입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동남아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등 체제생존을 위한 실리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결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매개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고 2003년부터는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국면 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09년 5월에도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2010년 11월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여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살상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1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을 도발적이고 위험한 국가로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5년간 북한은 이와 같은 대남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그간의 정책실패를 남측에 전가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북한이 대남·대외적으로 '대화공세'와 도발행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한·미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압박 정책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2010년 5월과 8월 그리고 2011년 5월과 8월 등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세 차례의 정상회담(2010.5, 2010.8, 2011.5)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 북한 외무성 대표단과 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적 원조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2년 7월 30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의 북한 방문시 김정은이 왕자루이 단장을 접견한 것과 2012년 8월 중순 장성택 노동당 부장을 중심으로 한 북·중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보다는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 대외정책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합동조사단 활동과 대북제재조치에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기구와 유엔을 통한 대북규탄을 이끌어내는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적 조사결과에 불신을 표명하였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의 조치들에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

을 거듭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상반된 입장들은 동북아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국익이 상충되는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북한은 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교정책노선으로는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증진,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집행되어 왔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적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국제담당 비서와 비서국 산하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고지도자가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 상의하달 방식과 당·정·군의 실무 엘리트집단이 정책 입안 이후 검토·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집행자들, 당 중앙위원회 비서·부장, 내각 총리, 인민무력부장, 외무상 등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최고지도자의 비준 및 재가를 받은 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하의상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대외정책을 당·국가·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정당외교는 당 국제부가, 의회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

당하는 외무상과 다수의 부상들이 30여 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민간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교업무는 당과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 의해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외교실상과는 달리 북한의 헌법을 보면, 대외정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직책이 없어지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국가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특사권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문화하였다.

제2절 북한의 대외관계

1 미국과의 관계

북한이 대서방접근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 간의 화해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의 대미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써 왔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 policy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여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하여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관계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1968년 7월에 조인되어 1970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5년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언하고 같은 해 6월에 탈퇴를 유보하였으며, 2003년 1월에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미·북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1993.3)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4년 10월에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및 특별사찰 수용,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 후 제3국으로 이전, 미국은 북한지역 내 경수로 발전소 제공, 경수로 1기 완성 시까지 연간 중유 50만 톤 제공 등이다. 그러나 북한이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의 추진으로 미·북 제네바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합의사항 이행이 중단되었다.

개선을 위한 협상틀을 유지해 왔다.

1999년 9월 미·북 간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한국·일본과의 공조 하에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으로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 미군 신원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미·북 간의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초기에는 미·북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양측 합의사항 준수를 미국에 촉구하는 한편,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강경한 입장으로 변하였다.

특히,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반테러 협력에 집중하고 있던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로 규정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크게 반발하였다. 더욱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IAEA의 감시 하에 있던 핵 관련 시설의 동결을 2002년 12월에 해제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는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미·북 제네바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쌍무적 약속뿐 아니라 NPT, IAEA 핵안전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 위반 행위이므로, 북한의 핵 포기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중재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포기'를 강조하였으나 북한은 '선先 미·북 회담, 후後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CVID하도록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갔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틀에서 논의·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5월에 발족한 국제협력체제이다. WMD 비확산을 위해 가입국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만이 문제 해결의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와 같이 미·북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다자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그 다자회담이 바로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6자회담의 주요 추진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보장 및 정치·경제적 혜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 포기에 필요한 조치를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하여 이행해 나가자고 맞섰다.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완전한 핵 폐기의 첫 단계조치로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용 핵만 동결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핵 동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보다 융통성 있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기 준비단계 3개월 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핵 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이를 전제로 핵개발을 동결하면,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매달 수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임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후 2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은 북한체제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미·북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여 경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며, '핵 동결 대 보상 방안'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200만 kW 상당의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수용하면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

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 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공동성명의 이행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화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를 동결시켰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였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조치를 이행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2006.10.9)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이다. 동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는 물적 규제(재래식 무기, WMD 관련 물자, 사치품), 금융 규제, 출입국 규제, 화물 검색 등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BDA 문제로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북한은 양자접촉을 가진 결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BDA 해결을 전제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을 지향하는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2007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실무그룹 보고를 청취하고 초기 조치 이행 및 다음 단계 행동계획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표 3-1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9·19 공동성명 (2005.9.19)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침공 의사 부재 확인 –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보유,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에 동의 • 관계 정상화 – 미·북은 상호 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조치 – 일·북 관계정상화 조치 • 대북 국제적 지원 –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 한국은 200만 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 직접 당사국들 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이행원칙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2·13 합의 (2007.2.13)	• 초기단계 이행계획 : 60일 이내 –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 미·북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일·북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 중유 5만 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 다음 단계 이행계획 :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차 장관급회담 개최 :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체제 : 직접 관련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협상
10·3 합의 (2007.10.3)	•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이전 금지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 •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 지원

또한 2007년 6월에는 그동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BDA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자,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IAEA 관계자들을 초청하였고, 영변 5MWe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 동결을 시작하였다.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 제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10·3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의 5MWe 원자로와 핵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을 12월 31일 이전에 불능화하며 핵 물질이나 핵 기술, 핵 지식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표 3-2 6자회담 개최 현황

구 분		개최기간	주요 결과
제1차 회담		2003. 8.27~29	•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2차 회담		2004. 2.25~28	•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제3차 회담		2004. 6.23~26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의 필요성,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제4차 회담	1단계 회의	2005. 7.26~8.7	• 9·19 공동성명 채택
	2단계 회의	2005. 9.13~19	
제5차 회담	1단계 회의	2005. 11. 9~11	•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 의지 확인
	2단계 회의	2006. 12.18~22	•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재확인 및 이행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
	3단계 회의	2007. 2. 8~13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
제6차 회담	1단계 회의	2007. 3.19~22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2단계 회의	2007. 9.27~30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프로그램 신고 목표시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월 26일 핵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0월 11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100일을 앞두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해결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였으나, 북한이 같은 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북한 핵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즉각 보도하고 6자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 채택(2009.6.12)

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관계개선의 기대감을 표명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 핵 확산 의혹 해소 등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대미 강경태도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또한 북한은 5월 25일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9년에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하고, 2010년도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핵 능력 강화를 추진하며 미국을 압박하여 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이다. 결의에서는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11년 7월과 10월에는 미·북 간 두 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잠정중단조치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의 선행조치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을 고집하였다.

당초 12월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3차 회담은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연기되어 2012년 2월 23~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월 29일 미·북 양측은 제3차 회담의 합의내용을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우라

늄 농축프로그램 유예,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비롯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 톤에 해당하는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4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대북제재 단체 및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시 상응하는 조치를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9개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추가제재를 결정하였다. 북한 외무성에서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2·29 미·북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도발로 보고,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핵보유국 지위 요구와 평화협정 공세를 위한 강력한 협상카드를 확보하려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 19일 미얀마 양곤 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간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87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12)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 안보리 결의 제1718호와 제1874호의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해 2013년 1월 2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이다. 결의에서는 제재 대상의 확대, 금융기관 활동 감시 강화, 대북 수출통제 강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 일본과의 관계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일본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부터 쌍방 간에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간의 데탕트와 특히 미국과 중국의 우호협력관

계의 발전, 남북대화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개선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과 북한 간의 수교회담은 1991년 1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까지 11차례 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문제, 북한의 핵사찰, 일본인 납치자 등 현안문제에 있어서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진행된 접촉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던 일·북 관계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일·북 평양선언'[4]을 발표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이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 대해 일시 고향방문을 허용하여 이들의 일본 방문이 실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주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양측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년 만에 제12차 수교회담을 개최(2002.10.29~30, 쿠알라룸푸르)하였으나, 일본의 핵개발 포기 요구 및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차기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2004년 5월 22일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납치생존자 가족 8명중 5명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고 미군 탈영병 가족인 젠킨스씨 가족은 나중에 제3국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일본이 납득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 대신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북한이 '일·북

4_일·북 평양선언을 통해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정상화 후 대북 무상자금 및 인도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키로 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제재법안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사망한 후 2004년 12월 일본으로 송환된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었고, 북한은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2006년 재개된 제13차 수교회담(2.4~8, 베이징)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였으며, 회담 결렬 이후 일·북 간에는 대화 채널이 단절되고 상호 비난을 강화하는 등 대립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일·북 간 전세기 일본 착륙 금지, 북한당국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모든 북한상품 수입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2·13 합의 제2조 4항에서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8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북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항공기 '요도호'의 납치범 및 가족을 일본 정부에 인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대북제재 조치 가운데, 인도적 물자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및 일·북 간 인적 왕래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출범한 아소 정권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일·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2009.6.12)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북수출 전면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이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선 북핵·납북자문제 해결, 후 관계 정상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불참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일본에 대해 6자회담 참가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2010년 6월 간 나오토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일본과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의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또한 2011년 8월 노다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조하며, 남북대화와 미·북회담, 6자회담 등과 관련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북 간의 직접교섭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대일외교는 2008년 8월 일본인 납북자문제 협의 이후 4년 동안 정체되었다가, 2012년 8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북 간 적십자회담으로 재개되어 일본 측이 요청한 북한 영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8월 29일 일·북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이 열린데 이어, 2012년 11월 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였으나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 측이 "납치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회담은 진전 없이 마무리되었다. 12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국장급 회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일본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핵이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12월 2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북 관계는 향후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신조가 최근까지

밝힌 대외정책 공약들을 보면 일본 군대의 재무장 추진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경 보수 일변도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별도로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 중국과의 관계

북한정권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때로는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脣齒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적 토대 위에서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세계사적인 탈냉전의 상황에서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커다란 곡절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 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속에서 유지해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8년 여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는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타

개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김정일은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양국 간의 상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일은 상하이 푸동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한 다음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이루어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2001.9.3~5)은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쌀·석유·비료 등 지원과 대북협력을 약속하고, 양국은 당적 유대 강화를 통한 정치적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

2003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대북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실질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하였다. 4원칙은 고위층 상호방문 전통 지속,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영역 확대, 경제무역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경제 중심도시(베이징, 광둥, 선전 등)의 기업과 연구소 등을 방문하였다. 이때 박봉주 내각 총리, 박남기, 리광호 노동당 부장 등 경제 관료들이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는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중 친선의 해'中朝友好年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고위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1.22~24)과 원자바오 총리(10.4~6)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총리가 수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3.17~20)하였다.

이러한 북·중 관계 속에서도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으로 양국관계는 불편한 국면을 맞고 있으며,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동참하였다.

김정일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 수요가 많이 발생했음을 반증한다.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단동, 대련, 베이징, 심양 등을 방문하였으며,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층 교류 지속, 경제무역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중국 측에서 발표했다. 2010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길림, 장춘, 하얼빈 등을 방문하였으며, 장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6자회담, '장길도(장춘, 길림, 도문) 개발계획' 등 경제적 협력과 지원 문제에 대해 지난 5월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의 연계선상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연이은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모두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방문 기간(5.20~27) 중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친선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 등의 사안에 공감하고, 2010년 8월 장춘 합의 이행 노력 인정,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에도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며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하여, 3대 세습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2012년 강성국가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적으로는 미·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을 시도하여 국제적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김정일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공식발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일의 사망이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공동보조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외교는 '북·중친선우호협력'의 명목 하에 더욱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2년 7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30일~8월 3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장성택(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중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 및 관리, 나선 경제무역지대 항구 및 산업구 투자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문 등이 조인되었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기조에 대해서는 유감과 비판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국제적 조치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

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2·29 합의를 유지·이행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2년 11월 등장한 시진핑 지도부도 대북정책에서 기존의 후진타오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채택에 찬성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모든 당사국에게 역내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은 남북 간에 먼저 문제를 푸는 것이 한반도 상황개선의 첫 걸음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관계의 특수성과 중국의 자국안보 우선시 인식을 고려할 때, 북·중 우호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러시아와의 관계

탈냉전 이전 시기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호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고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긴밀화되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1961년 7월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1965년 5월 「조·소 군사원조 협정」이 체결되고,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 경제지원 등을 받았다. 1970년대 데탕트시기에 김일성은 등거리외교로 중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 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적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고려연방제 지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 체결에 이어 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과 푸틴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5]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 미국에 대한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합의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 러시아를 방문(8.20~24),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5_북·러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쌍방의 협조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북·러 신조약 정신 확인, 상호 침략 또는 안전 위협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접촉, 유엔헌장 목적·원칙 존중과 이 헌장을 위협하는 힘의 사용·위협 반대, 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준수, 북한 미사일의 평화적 성격 강조, 아태지역의 전역 미사일 방위체계(TMD)구축 반대, 국제 경제협조와 확대, 쌍방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연계 적극 발전 등이다.


북·러 나진-핫산 철도 현대화 공사

2007년 3월에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고, 10월에 북·러 차관급 협의회도 4년 만에 개최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과정에서 북·러 간의 전통적 선린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러시아가 미·일 경계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였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안보 후견국으로 러시아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속되었다. 2008년 4월 모스크바에서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북·러 협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초 평양에서 나진-두만강 철도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북·러 수교 60주년을 맞아 10월 4일 나진-핫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도 러시아 외무상의 방북 등 교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5.25)으로 러시아는 핵실험을 공개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동참하였다.

2010년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다소 소강상태였으나, 2011년에는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8.20~25)하였다. 8월 24일 울란우데 군부대 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 가스 수송관 건설 문제 등을 합의하였으며, 2011년 12월 13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항공운수국 대표단과 북·러 간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북·러 관계는 친선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구소련 시기에 제공한 차관

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재조정 협정을 통하여 전체 채무(110억 달러)의 90% 정도를 탕감 받았다.[6]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같은 3자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실리를 취하는 한편, 남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치적·경제적 질서를 만들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5 EU와의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2000년 1월 4일 EU 회원국이자 서방선진 7개국G7인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접근의 발판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EU 15개국 회원국 중 외교 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EU도 북한의 제의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독일·스페인 등이 대북 수교방침을 천명하면서 양자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제3차 ASEM회의 시 여러 EU 국가가 대북 수교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EU 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 대표단이 방북, 서방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 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

6_2012.9.18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사이의 이전 소련 시기에 제공된 차관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에 진 빚 조정에 관한 협정이 1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EU 개별국가와의 관계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10년까지 프랑스,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EU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EU 국가와 경제면에서 관계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 유럽순방에 나선 리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이 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영국 등 4개국을 방문,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찰 및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수시로 단기 연수생들을 EU 국가에 파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토대를 닦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대외 결제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EU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7]

EU의 대북 경제관계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EU가 2004년부터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워크숍을 북한과 공동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주한 EU 대표부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및 북한 외무성이 공동 주최하고 북한에서 EU를 대표하는 주북한 영국대사관이 지원하며 EU 회원국들이 경제전문가와 외교관들을 참여시켜 이루어졌다. 제1차 워크숍은 2004년 8월에 개최되어 북한의 경제변천 과정을 개관하고 2002년 이후 변화를 논의하였다. 제2차 워크숍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제운영에서 국가의 역할, 외국투자 유치전략, 국영기업과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들을 다루었다. 북한 측에서는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서 약 100여 명, EU 측에서는 8개 회원국의 경제 전문가, EU 외교관과 평양 주재 외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8]

또한 EU는 북한과 정치대화를 지속하고 인권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나 북한의 개선조치가 없자,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

7_「러시아의 소리방송」은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공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구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 내 모든 은행들은 달러 구좌를 유로 구좌로 이전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2002.12.2)

8_박영호 외, 『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p.245.

상하여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EU는 총회에서도 주도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 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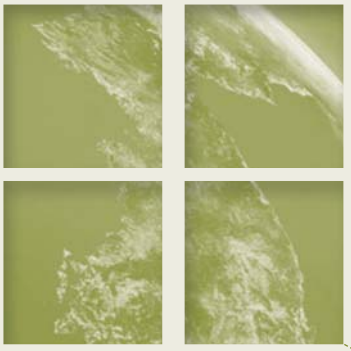
2005년 11월 EU가 유엔에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과 EU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으나,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합의된 이후 북한과 EU 간의 공식 대화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유럽의회는 6월 17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EU와의 관계 증진으로 경제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핵과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 3-3 **남북 수교현황(2011년 12월 기준)**

지역	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주	36	25	25	11	0
미주	34	24	23	11	1
구주	53	49	48	5	1
중동	20	17	16	4	1
아프리카	46	46	46	0	0
계	189	161	158	31	3

주 : 한국은 세계 총 191개 유엔회원국(남북한 제외)중 188개국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과 수교
– 미수교국 :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출처 : 외교통상부, 『2012 외교백서』, pp.284~285.



북한 이해

2013

NORTH KOREA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현황
제4절 대외 군사관계 및 대남도발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Ⅳ

Key Point

+ 01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02

북한의 군사전략은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해 왔으며, 현재는 특수부대, 전자전 등 특수전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개발 행위는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전력 우위를 확보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도 악용함으로써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03

북한은 오랜 기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여 건물·교량·항만·도로건설·위탁경영 및 영농 관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군부대는 사금채취, 외화벌이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조직이 자체 조직생존을 위한 경제단위로 변모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등장 이후 군부의 이권사업과 큰 규모의 외화벌이는 당과 행정기구로 이전하는 등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04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측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기습공격하여 단기간에 주요 지역을 점령하려는 제한전과 지원 병력 도착 이전에 우리 측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전속결 군사전략도 유지하고 있다.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자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 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과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뿐이라고 생각하고,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은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소위 '선군정치' 이념체계하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군이 국가 제반 부문의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는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 영도자로 우상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주장하였고, 2013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군력이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북한에서 지금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반세기 전 북한은 정권수립(1948.9)보다 7개월 먼저 인민군을 편성·창건(1948.2)한 사실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군을 수령과 당의 혁명통일 무장력으로서 군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양성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선군노선을 강조하고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향후에도 권력 기반을 군대에 두면서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으로, 북한 헌법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표 4-1 4대 군사노선

노 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무장,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전민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89.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 헌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무력이라 함은 정규군 119만여 명은 물론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보위사령부, 인민보안부,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예비병력 770만여 명을 총망라한 무력이며,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함을 의미한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 전문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구축되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 12월 30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유훈(2011.10.8)에 따라 최고사령관으로,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의 군은 "군사력과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과 수표와의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사력 확보를 담보로 한 대외관계 유지와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군의 작업 모습

최근에는 경제건설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군병력을 대형건축물·문화회관·고속도로·발전소·수로공사·목장 및 양어장 등 각종 경제건설 현장과 위탁영농, 어로활동, 검문 등에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economy 현상으로 국가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스탈린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난 공격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나, 현재 북한사회에서 전형적인 경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군사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비 충당을 위해 주민의 담세율이 증대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군사의존도 강화로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민수자원 공급이 위축된다. 셋째, 완성재와 원료의 대부분을 비생산적 군비에 할당하게 된다. 넷째,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를 저해한다. 다섯째, 모든 분야에 군사기풍 강요로 자유롭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질서의 형성을 저해한다.

중국은 산업의 생산성을 중시하여 '경제의 군사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군수공장에서 민수품 생산 비중을 높여 1979년 8.1%에서 1987년도에는 직물, 생산기계, 포장 장비, 의료기, 자전거, 오토바이 등 7,000종 이상을 생산, 1990년에는 62%로 급증하였다.[9]

북한 경제를 파탄 상태로 이끌어가는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체제의 향후 존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9_미국 국방대학원, 『Chinese Views of Future Warfare』, 1998 참조.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군 총정치국, 군 총참모부, 국방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 시 신설된 이래,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 개정 시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8년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그리고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되는 등 점차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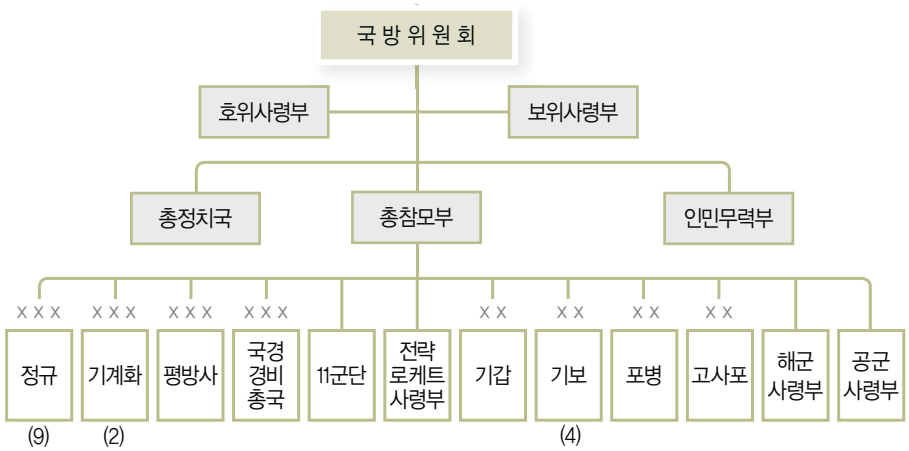
여기에서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바, 1948년 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하여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무력 일체를 장악, 감시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1982년 11월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아울러 총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군내에서 당의 정치 사업을 수행, 군에 대한 당의 통제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또한, 각급부대에는 정치위원이 파견되어 해당 부대의 사업 전반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부합되도록 장악, 지도하고 있다.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군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의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 임무 등을, 보위사령부는 반체제 세력을 단속하는 군 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1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



xxx : 군단, xx :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전략로케트사령부 : 구(舊)미사일지도국
고사포 사단 : 2011년 평방사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소속 변경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5.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5세가 되면 군 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검 합격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는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조건도 입영대상자 부족, 여군 비율 축소로 보다 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대상자 중에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으며,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대학생, 특수·영재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들은 정책적 이유로 입대에서 제외하였다.



북한 여군 포병의 훈련 장면

근무연한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 10년, 여자는 지원시 7년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였다.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10]

부대에 따라 10~30% 비율을 차지하는 여군은 대개 수송, 행정 부서, 위

10_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로 정하였지만, 이 규정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생병·통신병·초병(교량, 터널)으로 근무하거나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를 운용한다.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사고자는 제대 후에 직장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11]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만들어졌다.

표 4-2 **군 간부양성 과정**

계 급	과 정	비 고
징집대상	군사동원부 차출 (특수부대 우선, 해·공군, 지상군 보병순)	특수부대, 특과우선
훈련병	각부대 신병교육대 (일반 3개월~특수부대 9개월)	신병교육기간은 경제난으로 다소 감축
병사	전사→초급병사→중급병사→상급병사	5~7년 경과
하사관	하사관학교 (3개월)하사→중사→상사→특무상사 (사관장) * 경보병, 민경, 저격병들은 우수병사(3~5년 근무) 추천을 통해 5년 이내 하사 진급	대개 10년 거쳐 중사로 제대
소위	군관학교 2년 (지휘자반 : 최우등 시 중위 임명) 4년 (대학반 : 중위)	군관학교에서 정치·군사 교육은 5:5 정도이나 군사대학에서는 3:7 정도로 배분
중위	2~3년 경과 진급	
중대장	4~6년 경과 후 지휘관	
대대장	3~7년 경과 후 김일성군사대학(3년) 졸업	
연대장	이상 김일성군사대학 전술연구반(2년) 수료	장성은 명령만으로 진급

출처 : 유관기관 자료 종합

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 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경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 중대 쟁취운동', 연대급으로는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동', 사/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 쟁취운동'이 있다. 판정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시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11_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군사기밀·당 조직 비밀의 엄격한 유지,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정치 훈련에의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적으로 부모 사망 시 또는 부대 내 물자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군복무기간 중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평균 군복무기간의 1/3~1/2 정도를 건설, 영농 등 비군사적인 노동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한편 부대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주둔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 끼 쌀밥에 야채, 절임 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단별로 임시보양소를 운영하였을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외부지원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다소 나아졌으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대북지원을 외면하자 다시 부대의 급식 상태는 악화되었고 영양보충을 위해 독립소대부터 사단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대들이 염소와 돼지 등을 직접 기르고 있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의관 8~10명, 여군간호병 10여명)에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시에는 사단 군의소(군의관 20~25명, 여군간호병 50여명),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관 60~70명, 여군간호원 포함 민간인 여성 간호사 130명 정도)으로 후송되거나 감정제대[12]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에는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및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국가안전보위부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관

12_북한군에서도 1995년부터 집안사정이 어렵거나 부양자가 없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제대'(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있다.

계를 해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표 4-3 북한 지상군의 정기훈련 및 활동

시 기	계 급
1월 ~ 2월	야외전술 훈련 준비, 병종별 기동훈련, 공병 정찰, 부서 전개훈련
3월 ~	연대/사단급 실탄사격 종합훈련
5월 ~	병영 보수, 도로작업, 부식 밭에 묘종
6월 중순 ~	하기훈련 시작 집체훈련 : 정치상학, 대열훈련, 체육 야외훈련 : 병과별, 반토굴형 숙소
7월 하순 ~	장마철 도하훈련, 전투수영, 행군훈련, 습격/방어 훈련, 실탄사격
10월	월동준비 : 농산물 수확, 야채저장, 화목작업, 병영보수
11월	동기훈련 준비 : 전투기자재 점검
12월	오전 : 실내사격 훈련 등 병영위주 훈련 오후 : 무장강행군, 체육, 대열훈련, 야외 사격 훈련

출처 : 유관기관 자료 종합

3 계급구조 및 당 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원수·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상장·중장·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상좌·중좌·소좌, ④ 하급군관에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① 우리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가 있고 만기 후 장기복무를 하는 초기복무하사, 중사, 상사가 있다. ② 일반병은 상등병·전사로 구분하되, 사기진작과 서열 중시를 위해 다시 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전사로 4등분하고 있다.

북한군 장성 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

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여 7계급 구조로 되었다.

북한에서는 매년 김일성 부자 생일, 당 창건일 또는 휴전협정 체결일 등을 기념하여 장성을 진급시키고 있는데, 북한 장성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진급하였다.

2012년 2월 15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 경험이 없는 박도춘(당 군수담당비서)을 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군수공업책임 제2경제위원장)을 상장으로 보임하는 등 23명의 장령들을 승진시켰다. 이어 김일성 100회 생일(2012.4.15)을 앞두고 최고사령관 김정은 명령으로 70명을 진급시켰다.

그러나 김정은 등장 이후 군 경력이 없는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2012.4)하는 등 군부의 이권사업과 외화벌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군부의 불만과 당·군 관계 등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인민군대 내의 모든 각급 부대에는 군사계통의 참모부, 정치계통의 정치부, 보위계통의 보위부가 존재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이 구성되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이 군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 위원회'가 있고 연대급 이상에 '당 위원회', 중·소대 단위에는 '당 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당 위원회와 별도로 군 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았는데,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13]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 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 정치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 및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견제장치 가운데 지휘관들의 업무와 생활을 평가하는 당 조직부의 권한이 가장 강하다. 인민군

13_중대정치지도원은 월평균 20명 이상의 병사들과 면담함으로써 중대의 공식, 비공식적 상황을 숙지하게 된다.

일반 사병들은 약 20%가 당원이나 특수부대는 약 40%가 당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군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 당사일치黨社一致,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14]

인민군대 내에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의 성격이 전시 국가관리체제에서 영토 및 체제보전 임무를 넘어서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목표 달성과 권력자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수권자의 입장에서도 군대를 분리 통제하는 것이 권력 유지 및 지휘통솔에 유리한 배경도 있다. 이러한 정치, 보위, 군사의 3개 조직이 종횡으로 짜인 북한의 군대는 1인독재체제에 순응하기 쉽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14_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 당사일치(黨社一致)는 노동당원과 비당원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구사로청)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제3절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현황

1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장갑차·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종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에 우리 측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 능력과 고속 종심공격 능력, 선제 기습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1980년대 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 전진배치 등 2~3개월 정도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속전속결형 공세적 군사전략,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 과시, 강대국에도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로서의 비대칭 억지 전략

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을 통하여 인구수가 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GNP의 수십 배가 되는 우리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을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갱도화되어 있어서 우리 측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십 개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量産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표 4-4 **북한 특수부대의 목적 및 역할**

구 분	과 업 내 용
목적	목표물 습격 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소, 미사일기지, 비행장 등 주요전략·전술 거점 무력화
저격여단	주 전선돌파, 82mm 박격포, 방사포 보유 전략 목표물 타격, 국군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저격여단	함선, 레이더 기지, 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 공기부양정 보유
공군저격여단	공군기지 장비, 시설 타격
항공육전여단	병참 시설 파괴, 증원차단, 거점 확보
군단정찰대대	밀로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여단	핵심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 x 6개 중대 (120명) 60mm 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보유

출처 : 유관기관 자료 종합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 전략과 구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0년 말경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 대통로'(땅굴)작업을 명령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전쟁 사례처럼 땅굴 침투부대와 지하당 세력이 연계되도록 하여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대피호를 포함해 8,200여 개소의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1970

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수입한 TBM 장비 300여대(한국은 20여대 보유)가 북한의 갱도, 지하시설 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제5차 당 대회(1970.11.2)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15]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적으로는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상으로나 현실적 능력면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도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지속 역량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요소가 아니라 종합적 전장환경, 병력의 교육수준, 무기의 질, 과학·기술의 수준, 불확실성, 예측불가의 마찰, 우발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16]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를 벗어나 수중전력, 상비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상비전력 및 장비

2012년 1월 기준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병력 63만 9천여 명의 1.9배 규모이다(〈표 4-5〉 참조).

북한의 지상군은 9개 전·후방 정규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

15_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평양), 『인민군』, 1987, pp.43~47. 최근에 들어 북한은 구 소련군이 전차부대의 신속 기동으로 NATO군 방어진지 돌파를 위해 운용하려 하였던 작전기동단(OMG) 개념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게 원용하여 발전시켰다. 그러나 개활지가 많은 서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상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16_현대전은 'Over the Horizon Strike'(초장거리 공격), 'Over-sleeping War'(하룻밤사이 전쟁) 등 단시간의 고강도 공격개념을 구성하고 있고 미래전은 육체에서 대뇌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부, 국경경비총국, 전략로케트사령부(구舊미사일지도국), 11군단(구舊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방지역에는 4개 군단 산하 기존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고 별도로 각각 1개의 경보병 사단을 신편하였고, 지상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강습돌파强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수도 서울이 근접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지상군 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미사일부대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20여만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는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수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격 시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몇 배 규모의 위僞진지와 모의장비를 설치하고 공격 시 이용할 갱도 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 구축함으로써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 신형 전차(T-62/72 등)가 주종을 이루며, T-54/55 전차는 도태시키면서도 일부 구형 전차와 경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표 4-5 남북 군사력 비교

2012년 1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평시)	계			63만 9천여 명	119만여 명
	육군			50만 6천여 명	102만여 명
	해군			6만 8천여 명	6만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5
			사단	46(해병대 포함)	88
			기동여단	14(해병대 포함)	72(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2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200여 대
			야포	5,3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4,8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6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80여 대	300여 대
예비전력 (병력)				32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70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한국의 군사력에 제시된 해군병력은 해병대 28,000여 명을 포함. 지상군 부대(사단, 여단) 및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
* 북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
* 질적 평가 표현은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양적 수준으로만 비교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89.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전차 보유대수 2,400여 대의 1.8배 수준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차와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8,600여 문(구경 76.2/100/122/132/170mm 등)의 곡사 및 평사포와 4,800여 문(구경 107/122/132/240mm)의 방사포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사포 등 11,000여 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천마호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 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하여 폭풍호 전차를 생산하고 23mm 자주 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총 81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 지원정 등 420여 척이며 고속상륙정 90여 척, 공기 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 260여 척, 잠수함(정)은 70여 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먼 바다에서의 작전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 보유와 전진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지, 대함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의 야포 M-46 130mm 훈련 모습

한편 북한 해군은 공기 부양정(고속 상륙

정)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는 40~52 노트 이상의 고속기동능력이 있어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해군 전력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2개 해상 저격 여단, 40여개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수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측 해군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4개의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30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 전투임무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하여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요격 및 대지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외 20여 개의 작전기지, 예비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7년에는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술훈련을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도상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 대비태세와

훈련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전자전 부대도 창설하여 군사전문 해커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된 반면, 부대 내의 정치사상교육은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훈련은 감소되었으나 특수부대와 통신부대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 제일주의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전 대비 해커 대폭 양성, 경보병 부대의 증편, 야간·산악·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전과 정밀 유도무기 회피대책을 강구하고자 전자·전파 교란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3 예비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 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중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교도대를 조직하였으며,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전력 중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만약 교도대에 입대한 대학생이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3학년의 방학기간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

17_2008.7.10 미 하원 군사위 산하 EMP(전자기파) 소위원회는 북한의 EMP 무기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에서 500~600여 명의 해커들이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고강도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 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 병력은 약 60만여 명이다.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개칭함으로써 현역에 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성, 17세 이상 30세까지의 여성 중 교도대 비편성자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어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약 570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의 교내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 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실탄사격 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100만여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구 분	규 모	비 고
교도대	60만여 명	전투동원 대상 – 남자 : 17~50세, 미혼여자 : 17~30세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 예비군 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인민보안부,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계	770만여 명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9.

기타 준군사부대로는 인민보안부, 군수물자를 지원·관리하는 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4 핵개발 및 전략무기

북한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핵실험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불안요인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등을 국제 비핵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 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인력은 고급인력 200여명을 포함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북한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 접어 들면서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19] 핵개발 업무에 종사하다 원자력 관련 질병에 걸린 과학기술자도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18_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2004, p.54.

19_국방부,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p.95.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10.21)를 통하여 대북 경수로 제공 및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완성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 제공을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수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KEDO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그러나 북한은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도 거부(1997.2.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1997.2.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미·북 간의 입장 차이와 미국의 압박 등을 이유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 시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에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강행하였다. 이에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북한은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재처리가 완료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의 용도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함으로써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을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로 인해 6자회담이 표류하던 중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10월 14일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718호가 채택되었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핵 폐기와 금융제재에 대한 미·북 간의 견해차로 성과 없이 폐막되었다. 그 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북 베를린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 재

개가 논의되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 합의)가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미·북 사이에 이루어진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였고, 5개국 간 균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할 경우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북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주요시설 세 곳(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폐쇄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나 목표 시한인 2007년 연말을 넘겨 2008년 6월 26일에야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등 검증 절차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2006.10.14)를 무시하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하고, 엄격한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화물 검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대내결속 및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이의 개발 및 생산에도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려져 화생무기가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 역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강계·용성 등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흥남·만포·아오지·청진 등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20]

화학무기의 종류로는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최루성 등 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무기의 종류로는 콜레라·탄저균·천연두 등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주·문천 등에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기술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 생산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배치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작전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다수를 시험발사하였고, 한국형 이지스함 진수식 당일인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KN-02을 시험발사하였다.[21]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22] 같은 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하였다. 2012년 4월 13일 3년만에 외국의 주요 언론인까지 초청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지

20_미국 「Popular Mechanics」는 2007년 2월호에서 북한은 화학제 5,000t 보유, 32개 지역에 생화학 공장 운영, 20개 지역에 생물무기시설, 12개 지역에 화학무기시설, 미사일, 야포의 30%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국 야전교범 「NBC(생화학무기) 방어 작전의 의학적 전망에 대한 핸드북」에 따르면 전투원 1명 살상에 재래식 무기는 2,000달러, 핵무기는 800억 달러, 생물무기는 1달러가 소요된다고 지적하였다.

21_미국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대니얼 핑크스턴 수석연구원은 2008.2.3, 미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SSI)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거의 자급자족 단계에 이르렀으나 고급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2_유엔 안보리는 2009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자산 동결 등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기로 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결속과 군사강국 과시, 대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3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1만 km로 추정되는 장거리 운반능력을 과시하려 했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은 의회에 제출(2008.3.3)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우려하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있어 필요한 부품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표 4-7 **북한의 미사일 제원**[23]

구 분	SCUD-B	SCUD-C	노동	중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292.

23_대포동 2호 이후의 신형 미사일도 개발 중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급 기술은 파키스탄, 이란 등 회교권 국가와의 협조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과정에서 구 소련으로부터 도입·습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4절 대외 군사관계 및 대남도발

1 대외 군사관계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는 해방 이후 중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전후 한동안 북한은 피폐해진 산업복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다시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7월 11일에는 북경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북·중 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소 조약의 경우 러시아는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인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2001년 4월에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한 데 이어, 8월 4일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탄도요격미사일 ABM 방어 조약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조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북한의 군사대표단과 공군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8월 김정일 방러 시 러시아 극동군의 훈련센터에 들러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 2011년 8월에는 김정일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조난시 수색구조훈련에 합의한 바 있고, 콘스탄틴 시덴코 동부 군관구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다. 2012년 8월에는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공군 간의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하였다.

북한은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의 군사대표단을 상호 교환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오티엔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으며, 환영식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하여 군 간부들만 참가하였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5월에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북·중 군사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핵 관련 입장을 교환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김정일이 군 원로층을 대동하고 중국의 광저우 등 산업지역 시찰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

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의 당면문제를 논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4월에는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 일행이 방북하여 군사 분야의 친선 협조 관계의 발전에 합의하였다.

2007년 8월에도 중국군 친선참관단이 방북하였고, 12월에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장이 방북하여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담화하며, 6자회담 의장국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2008년 12월 12일 양광리에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의 대외사업 담당자들과 만나 양국 군대 간의 상호 교류와 협조 강화를 강조하였다. 2011년 8월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 5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 군사대표단(단장 : 전창복)이 방중하여 양측 군사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2001년 5월에는 북한 공군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항공단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이어 6월에는 고위대표단을 구성하고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위산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이 동향으로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최고위 인사로 농 득 마잉 총비서가 방북(2007.10.16~18)한 사실이다. 북한은 베트남전에 200여 명의 조종사를 파견하였고 그 중 11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7월에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여 농업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있다. 2012년 5월에는 리영호 전 참모총장 등 고위군사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고, 9월에는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군사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북한이 동남아·중동·아프리카·중미지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목적뿐만 아니라 무기판매, 군사기술 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 아랍 국가와 군사협력을 지속해왔고 특히 이란에 핵,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직접대화 형식의 접촉을 요구하고 있는 바, 판문점 대표부 이름으로 유엔대표도 참가하는 군사회담을 제의(2007.7.13)하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2008.1.22)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군사 분야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대화와 실무접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로써 쌍방 함정이 대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상대측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도 제거하였다.

그 후인 2005년 7월 20일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개소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5년 8월 13일부터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남북 군 당국 간 유·무선으로 긴급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교신 및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의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수역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그 후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12.12~14)에서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 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12건의 합의서를 채택하여 왔으나 신뢰구축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합의는 많지 않다. 2011년 2월 8일~9일 개최한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도 천안함, 연평도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으나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남북이 군사대치 상태에서 자의적 또는 타의적 요인에 의한 상호 오인과 오판의 결과는 매우 큰 위기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 정확한 상황

판단,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 대남도발

북한은 지난해까지 반세기 동안 무려 2,953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으며,[24]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전세계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도 상생공영의 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기에 아직도 병사들을 혁명투쟁의 소모품으로 희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역사적 범죄이자 민족적 죄악이다.

북한군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동시에 전형적인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의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적인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년 이상 통일전선전술과 함께 병행하여 왔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함에 있어서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적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변화와 양보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혹은 이와는 반대의 순서, 즉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대화와 협력과 같은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공세'를 선행한 후에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지난 남북관계를 반추해보면 북한이 한국에 행한 각종 대남공작과 침

24_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306.

투도발 사례들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6·25 남침(1950년)이다. 북한은 한국에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기갑부대와 포병, 20여만 명의 보병을 동원하여 휴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7·4 남북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남침용 땅굴을 굴설한 사례(1972년)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아웅산 폭탄테러(1983년)를 감행한 전력도 모두 상기에 언급한 양면전략에 속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 경제지원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잠수정 침투사건과 핵실험(2006년, 2009년)·장거리 미사일 발사(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 등을 감행하였다. 한·일 월드컵이 절정인 시기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공격을 벌인 연평해전(2002년), 쌀·시멘트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2010년) 등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군의 군사공격과 침투·도발 사례로 볼 때 이러한 행동의 근간은 먼저, 스탈린의 아시아 적화 전진기지로 출발한 북한의 호전성好戰性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당의 합목적성 추구를 위해 모든 전술적 수단·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혁명강령'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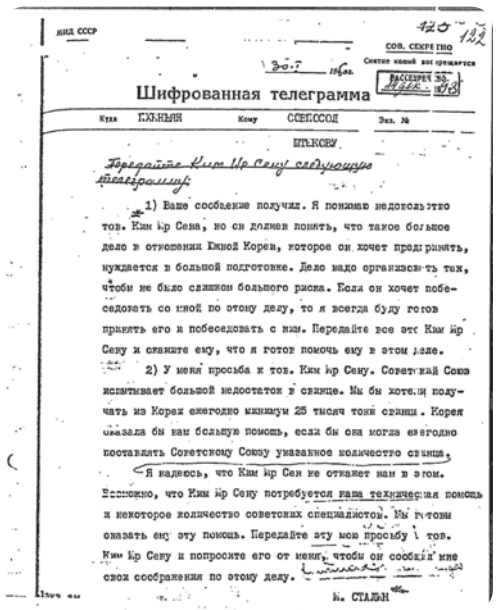
(1) 6·25 남침

북한이 행한 대표적이자 동시에 최초의 침략·도발 사례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벌어진 6·25 남침 전쟁이다. 소련 군정하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무력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은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과 공산주의 혁명이론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남북한 3백만여 명의 인명 사상과 10만여 명의 전쟁고아와 1천만여 명의 이산가족,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한반도 문제가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어 냉전체제의 서막을 만들고 남북분단을 공고화시키

는 시발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전쟁 직전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비밀군사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남북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거나 평화통일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등 위장평화공세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선전포고도 없이 38도선을 넘어 기습적인 전면 남침전쟁을 개시하였다.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단기간에 밀고 내려갈 정도로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북한군이 초기 강세를 보인 것은 최전선 북한군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이 중국 대륙에서 일본군과 교전 경험이 풍부했던 조선의용군, 동북항일련군 출신이었던 반면,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군은 지원 장비도 매우 열악하고 훈련 기간도 극히 짧았기 때문이었다.



Шифрованная телеграмма

Куда ГЛАВНЫЙ Кому СОВЕТСОВ Экз. №

ШТЫКОВУ

Передайте Ким Ир Сену следующую телеграмму:

1) Ваше сообщение получил. Я понимаю недовольство тов. Ким Ир Сена, но он должен понять, что такое большое дело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ое он хочет предпринять, нуждается в большой подготовке. Дело надо организовать так, чтобы не было слишком большого риска. Если он хочет побеседовать со мной по этому делу, то я всегда буду готов принять его и побеседовать с ним. Передайте все это Ким Ир Сену и скажите ему, что я готов помочь ему в этом деле.

2) У меня просьба к тов. Ким Ир Сену.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спытывает большой недостаток в свинце. Мы бы хотели получать из Кореи ежегодно минимум 25 тысяч тонн свинца. Корея оказала бы нам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если бы она могла ежегодно поставлять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указа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винца.

Я надеюсь, что Ким Ир Сен не откажет нам в этом.

Возможно, что Ким Ир Сену потребуется наша техническая помощь и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вет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ы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ему эту помощь. Передайте эту мою просьбу тов. Ким Ир Сену и попросите его от меня, чтобы он сообщил мне свои соображения по этому делу.

И. СТАЛЬН

남침을 승인한 소련 문서(1950.1.30)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1949.3)

이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공격을 불법남침으로 규정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였다. 국군은 38도선을 돌파하여 1950년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력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38도선 일대에서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소련은 유엔을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유엔군이 이에 응함으로써 1951년 7월 휴전 회담이 개최되어 2년여 기간의 협상과 전쟁을 지속했던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최종적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표 4-8 6·25 전쟁 초기 양측의 전력비교

한국군	구분	북한군
103,827명	병력	201,050명
• 육군(94,974명) : 8개 사단, 지원부대 • 해군·해병(6,956명) : 7개 경비부, 해병대 • 공군(1,897명) : 1개 비행단, 7개 기지		• 육군(182,680명) : 10개 사단, 지원부대 • 해군·해병(15,570명) : 3개 위수사, 육전대 • 공군(2,800명) : 1개 비행사단
0대	전차 (장갑차)	242대
(장갑차 : 27대)		(장갑차 : 54대)
1,051문	화포	2,492문
• 자주포 : 0문 • 곡사포(105mm M3) : 91문 • 박격포(81mm·60mm) : 960문		• 자주포(SU-76) : 176문 • 곡사포(122mm·76mm) : 552문 • 고사포(85mm·37mm) : 36문 • 박격포(120mm·82mm·60mm) : 1,728문
2,040문(정)	대전차 화기	550문
• 대전차포(2.36″) : 1,900문 • 무반동총(57mm) : 140정		• 대전차포(45mm) : 550문
36척	함정	110척
경비함 : 36척		경비함 : 30척, 보조선박 : 80척
22대	항공기	226대
L-4 : 8대, L-5 : 4대, T-6 : 10대		YAK-9, IL-10, TU-2, 연습·정찰기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2.

공산군이 도발한 3년 1개월 동안의 6·25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약 14만여 명의 한국군이 전사, 45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공산군 측의 피해는 약 180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또 남한의 경우 생산 시설의 40% 이상이 파괴되어 경제가 거의 마비되었으며, 북한은 대부분의 주요 산업 기반과 자원생산 시설이 초토화되었다. 1948년 신생국으로 새로 출발한 남북한은 불과 2년 만에 발발한 이 전쟁을 통해 주요 산업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을 상당수 소실하게 되었다.

표 4-9 국군 및 유엔군 인명피해

(단위 : 명)

구분	전사·사망	전상·부상	실종·포로	계
한국군	137,899	450,742	32,838	621,479
유엔군	40,670	104,280	9,931	154,881
계	178,569	555,022	42,769	776,360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9.

표 4-10 민간인 피해

(단위 : 명)

학살·사망	부상	납치·행방불명	계	기타
373,599	229,625	387,744	990,968	피란민 : 320만, 전쟁미망인 : 30만, 전쟁고아 : 10만여 명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249.

(2)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대남 군사도발

6·25 전쟁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앞서 기술한 전략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그 전술과 방식을 달리하여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은 남북문제의 주도권 확보와 자신들의 대내외적 실리 추구와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긴장 조성과 공격적 군사행위,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같은 각종 도발을 지속하여 왔다. 북한은 전후 1,959여 건에 이르는 육상과 해상에서의 침투행위를 비롯하여 994건에 이르는 총격과 포격, 습격, 해상교전과 선박 납치, 영공 침범과 미사일 사격 등을 자행하였다.

북한의 대남군사공격을 시기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960년대에는 '남조선혁명론'에 근거한 무장공비 침투를 비롯한 휴전선 등지에서의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1970년대의 동서 데탕트 시기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며, 동시에 화전양면전술을 지속해왔다. 남한과 북한 간에 경제적인 격차가 차츰 벌어지던 1980년대에는 기습적 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전후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960년대부터 '남조선혁명론'에 근거한 대남전략을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국지적인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1968년 1월 21일에 북한군 제124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여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하였으나, 군경 수색대는 31명의 공비 중 1명을 생포하고 도주한 2명을 제외한 28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도 7명의 군경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북한은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 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켰고 군경과 예비군이 약 2개월의 작전 끝에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군경과 민간인 등 20여 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동서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남조선혁명투쟁'을 지속하는 양면전략을 추구하면서 간헐적인 도발 행동을 일으켜 남북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였다.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국군과 미군 병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에 주한 미군 사령부는 전투준비태세 명령을 내렸고 항공모함 레인저호 등을 한국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경 대응태세를 취하였다. 한·미 양국의 단호한 조치에 다급해진 김일성은 8월 21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발생한 우리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총리회담 실무접촉 등 대화를 제기하는 한편,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지속하였다.

북한은 이전의 게릴라 침투방식과는 달리 폭탄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이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할 때 이들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폭발시켜 부총리와 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어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

에 의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승객 및 승무원 115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KAL기를 폭파하라는 북한의 공작 명령을 받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3)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대남 군사도발

1990년대에 북한군의 대표적인 침투·도발행위는 동해를 통해서 발생하였다. 1996년 9월 18일 강릉시 해안가에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좌초하자 전투력이 없었던 승조원 11명은 자체공작조에 의해 피살되었고 군경과 예비군의 소탕 작전에 도주하던 북한 특수부대 13명이 사살되었으며 아군도 11명이 전사하였다. 이어 1998년 6월 22일에 강원도 속초시 앞바다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표류하다 우리 해군 함정에 의해 6월 23일 새벽 동해안으로 예인되었으나 승조원과 공작원 등으로 추정되는 9명은 자폭한 채 발견되었다.

1999년 6월 15일에는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NLL을 넘어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들어와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측 함정에 선제사격을 가하여 남북 함정간 포격전이 발생하였다. 제1차 연평해전으로 불리는 이 전투는 6·25 전쟁 이후 남북의 정규군 간에 벌어진 첫 해상 전투였다.

과거 냉전시기에 북한이 무장공비·특수부대·게릴라 침투공격, 판문점과 휴전선 일대의 국지도발, 민항기 폭파 및 납치 등의 군사행위를 지속했다면, 탈냉전이 도래한 1990년대와 교류협력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는 핵실험 및 화생방 전력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부대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침투도발이 계속되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를 전후로 NLL과 해상에서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군사공격과 충돌을 진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같은 군민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대남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와 대한

민국에 대해 공격·협박을 가하고 위협함으로써, 당면한 남북문제와 국제협상에서 이득을 취하고 보상 또는 태도변화 등을 노린 것이다. 최근에 일으킨 북한의 도발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세습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결합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회담과 남북경협에 호응하여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면서도, 여전히 대남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였다. 2002년 6월 29일에는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제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계획적으로 우리 참수리 경비정 배후를 기습하여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남 위협·압박공세 차원에서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대청해전'이 발생, 우리 해군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북한 해군은 경비정 1척이 손상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1998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2년 4월과 12월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당면 해결과제이자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의 특징은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개발을 병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감시기구들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은 핵 포기의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더욱 더 비정상적인 국가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4)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의 군사도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6·25전쟁의 정전협정 체결(1953.7.27)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을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1953.8.30)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목적에서 우리 측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NLL을 설정하였다. 동해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다. 휴전 직전에는 황해도 섬과 해변지역까지 유엔군의 점령 하에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을 공산군 측에 양보하였다.

부정하는 동시에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에 이 지역의 침범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후에 걸쳐서 침투와 군사공격을 반복적으로 감행하려는 양태를 보였다.

북한이 NLL을 유엔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것으로 강변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한편 NLL수역을 분쟁수역화하여 북한에 유리한 해상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등 해산물 채취를 통한 외화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NLL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정치적 부수효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가치이다.

최근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NLL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한편, 그 규범을 준수해 왔다.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 시 접촉지점을 NLL선상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나포·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NLL은 당연히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지역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해로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전협정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정된 선으로써 우리가 관할해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해왔다. 또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NLL 설정을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시켰다. 북한은 1977년 7월 1일에는 200해리 경계수역을 설정하였고 그해 8월 1일에는 '해상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쌍방의 관할구역을 합의,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이러한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침범해왔다.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잠수함을 침투시켜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킴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였다.

표 4-11 **1999년 이후 북한의 서해해상 도발 주요 사례**

1999.6.15	북한 경비정 6척 연평도 서방 10km 지점에서 영해 침범, 우리 측 경고 무시하고 선제사격, 남북 간 포격전 발생, 우리 해군 9명 경상, 북한군 다수 사상(제1차 연평해전)
2002.6.29	북한 경비정 연평도 근해 NLL 침범, 우리 해군을 의도적으로 공격, 우리 해군 6명 전사, 18명 부상, 북한군 30여 명 사상(제2차 연평해전)
2009.11.10	북한 경비정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무단 침범 남하, 우리 해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격 개시로 남북 간 전투 발생, 북한 함정 파손 및 퇴거(대청해전)
2010.3.26	북한 잠수함정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침투하여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우리 해군 46명 전사
2010.11.23	북한군 연평도의 민가와 군사시설 포격, 우리군의 대응사격으로 50분간 교전 발생, 우리 해병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18명 중경상, 북한측 지역 상당수 피해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p.252~267.

사건 직후 정부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북한군의 잠수함 능력과 폭발지역에서 수거한 물품 등이 북한제 어뢰와 합치한다는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정보분석과도 일치된 결과였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북한은 이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의 민가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 행해진 우리군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방사포 사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의 응사로 50분간의 교

전이 벌어졌고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포탄공격으로 희생되었다.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포탄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간인이 포격으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에 의해 폭침 후 인양된 천안함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조선중앙통신 등의 선전매체를 통해서 NLL 이남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포격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상대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대남 군사공격을 합리화하는 식의 조치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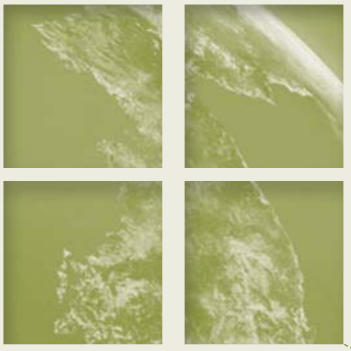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민가

이처럼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자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결과 발표 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자 처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군사행동을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차용하고 있으며, 목표관철을 위해서 폭력과 협상을 양면적으로 활용하는 화전양면전술을 활용해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유도, 대남 압박 공세, 경제지원 요구, 남남갈등 유발 등 다방면에서의 반사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도발행위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국가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표 4-12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구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북한의 공격형태	• 잠수함정을 이용한 어뢰 공격	• 방사포와 해안포로 170여발의 포사격
작전 경과	• 3월 31일, 민·군 합동조사단 편성 (현역 59명, 관 17명, 민 6명) • 4월 12일, 73명으로 재편성 (한국 49명, 외국 24명) • 5월 20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공식 발표	• 14시 47분~15시 15분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50발의 대응 사격 • 15시 12분~29분 북한군은 방사포와 해안포 20여 발로 2차 공격 • 15시 25분~41분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30발의 대응 사격
피해 현황	• 승조원 104명 중 46명 전사	• 해병 2명 전사, 18명 중경상 • 민간인 2명 사망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건물 133동(전파33, 반파9, 일부파손91)과 전기·통신시설 파손, 10군데 산불 발생
사건피해 조사 결과	•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	
북한 입장	•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 남측 날조 주장	• 남측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 주장
대북 조치	• 우리 정부, 남북 간의 교역과 교류의 전면 중단과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 발표 • 유럽의회,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6월 17일) • G8 정상회의, 북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 •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 규탄(7월 9일)	• 우리 정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강력 요구, 국회도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비인간적 도발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



북한 이해

2013

NORTH KOREA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기조
제2절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제3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V

Key Point

+ 01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체제유지와 더불어 경제회복도 도모하는 이원전략하에 과거의 자력갱생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과 같은 전통적 경제정책 기조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선군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 02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9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 이후 경제회복정책, 대외원조의 증대, 남북경협의 확대 등에 의해 미미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유지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내지 침체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03

북한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2012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놓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 놓겠다고 하며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추진해왔지만, 산업생산력이 아직 1980년대 후반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하반기 이후 시장통제정책과 2009년 11월 화폐개혁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2000년대 이래 민생경제가 가장 악화되어 있다.

+ 04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양극화되어 있는 북한 경제와 초인플레이션의 해소, 산업의 정상화,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경제관계의 다변화 등의 경제적 문제들을 안고 있어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실현을 강조하며 여전히 선군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경제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의 기조

북한 경제체제는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국 등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재정의 위기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체제에는 제도와 경제현실 간의 갭gap이 발생하게 되었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작동이 곤란해지면서 비계획경제 부문이 주민경제생활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경제난 현실을 반영한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다시 기존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모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는 이원화된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로서, 북한 내 모든 부의 형태와 생산된 재화들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협동농장 및 사회협동단체에 의한 협동적 소유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부문도 철저하게 중앙집중적 계획관리하에 놓여지고 배급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

적 소유는 사실상 전인민적 소유형태와 다를 바 없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사유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됨으로써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되자 북한은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주었다. 즉 사회협동단체들이 토지, 선박, 농기계, 중소공장·기업소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개인들에게 텃밭 경작과 같은 개인부업 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개인 소유물의 상속을 허용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장사나 각종의 개인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제도적으로 결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을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명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사적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계획경제 시스템도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중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경제난과 재정의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북한당국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 부문들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용해오고 있다.[25]

그리고 전략적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단위들에 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과하고 있다. 각 경제단위들은 본래

25_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183.

의 생산활동 목적과 상관없이 '액상지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므로, 시장을 활용해 금액지표를 달성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즉 공장, 기업소들이 형식적으로는 국가계획을 수행한다는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시장을 활용한 불법적 경제활동을 행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가납부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북한 경제체제는 본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이탈되어 가고 있다.

2 경제정책의 기조

북한은 1960년대 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한 이후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의 기조로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 군사 부문과 경제 부문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군사·경제 병진 노선'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3대 핵심기조는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인 선군노선에 맞추어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이후 경제건설의 기본정책노선으로 삼아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이다. 북한에 따르면,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26]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발전 노선에 따라 대외경제 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는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은 북한 경제를 국제분업 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closed economy형으로 만들었고, 국내 산업도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26_ 사회과학출판사(평양), 『경제사전 (2)』, 1985, p.208.

무시된 구조로 고착시켰다. 국내 자원에만 의존한 산업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세계기술 발전 추세와 격차가 큰 경제구조가 구축되었으며, 북한 경제가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이러한 한계들을 인식하고 1970년대 들어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매개로 한 선진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1980년대에는 합영법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개방정책이라기보다는 국내 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외경제 관계의 부분 활성화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북한의 '자기완결적 자력갱생정책'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는 구소련이 에너지, 기초 원자재들의 상당 부분을 조달해 줌으로써 '자기완결적 자력갱생정책' 추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들 요소들을 자본주의 경제권과의 관계를 확대하여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1991년도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경부터는 남한 자본의 제한적 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김정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사다 써서 노력과 자재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27]라고 말할 정도로 국제분업 질서를 인정하는 '개방형 자력갱생정책', 이른바 '21세기형 자력갱생정책'으로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7.1 조치 시행 당시 신의주 행정특구(2002년 9월), 개성공업지구(2002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2002년 11월) 지정을 발표하여 경제특구 지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 중 신의주 행정특구 설치는 중국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개성·금강산 지구만 남한의 단독 자본투자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북한은 2000년대에 1990년대의 '모기장식 개방'보다 확대된 대외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9년 2차 핵실험, 연이은 대남도

27_김일성대학보 2006년 가을호.

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1년 설치 이후 그동안 별 성과가 없었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2010년 1월 특별시로 승격시켜 다시 개발함과 아울러, 2011년 6월에는 황금평·위화도도 경제특구로 새롭게 지정해 중국과 북·중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이후 경제특구법 및 각종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들을 해외자본 유치가 보다 용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외경제 정책방향을 중국의 1980년대 초반 대외경제 개방정책처럼 세계시장 경제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경제의 개방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자력갱생건설 노선 구호를 견지하면서 과거보다 좀 더 개방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체제유지를 목표로 삼고 국내 경제 시스템과 유리된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일이 2010년 8월 초 동북 3성 방문시 중국의 개혁개방을 높이 평가한 것과 달리, 2010년 9월 18일자 노동신문에서 "외세 의존에서 살길을 찾는 것은 후대야 어찌되건 자기 세대만 잘 살아보자는 이기적인 관점의 발현이다. 대외의존과 사대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없는 위력한 자력경제, 주체사상화된 경제를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하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최근에도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 담보이다."(2012년 10월 21일자 노동신문)라고 강조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2) 선군경제건설 노선

소련·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남한과 체제경쟁을 해야 했던 북한도 1960년대 중반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건설 노선을 수용해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채택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대 중반 사회주의 진영 내 이념분쟁 및 중·소 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창하며,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군사·경제 병진 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지금까지 북한의 기본 정책기조로 유지·강화되어 오고 있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 북한 총예산에서의 군사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66년까지만 해도 북한 총예산에서 군사비 비중은 약 10% 정도였지만, 1967~1971년 사이에 30%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총예산에서 군사비 비중을 14~17% 사이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 연구기관들은 북한의 실제적인 군사비 지출이 총예산의 30~50%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경부터 추진된 군사·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첫째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즉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민수산업은 '제1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군수산업은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구조는 제1경제(민간경제)와 제2경제(군수경제)로 이원화되었다. 둘째는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어 오늘날까지 민생경제 부문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군수산업이 단순히 국방경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민수산업의 일부도 전용하고 경제적 잉여를 얻기 위한 독자적 경제공간의 성격으로도 발전하면서 북한 경제 내에 '군 경제'라는 특권 경제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 속에서 군 경제 부문은 전체 북한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에 공식 출범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오히려 이 노선을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변형·강화하였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노선의 지속을 천명하고 있다. 즉 2013년 신년사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 따르면,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란 "군사를 선행先行의 원칙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취급하는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군수공업의 활성화·발전 문제를 우위에先次 놓고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의 정상화·활성화 문제를 배치하는 정책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선군경제건설 노선은 군사·경제 병진 노선하에서의 산업정책을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시킨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군사·경제 병진 노선하에서는 항상 군수공업과 이에 계열화되어 있는 중공업 발전이 우선시되면서도 때로는 경공업, 농업 등 민생경제 부문의 균형발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군경제정책하에서는 군수공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을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수립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공업 우선 발전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도 실현할 수 있다."[28]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 발전을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았다.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은 1990년대 초반 경제난의 영향을 받아 잠시 '3대 제일주

28_사회과학출판사(평양), 『경제사전 (2)』, 1985, pp.715~716.

의'(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정책을 추진한 시기 외에는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로 유지되어 왔다. 즉 김정일 시대 들어와 군사·경제 병진 노선을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으로 변형하여 확대·강화시키면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도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변화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경제난이 도래하면서 북한의 전반적 산업생산력은 1980년대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전반적 경제위기는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는 군수산업 및 군 경제에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져왔다. 이에 김정일 시대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군사문제가 항상 우선이라는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내세워 축소된 국가의 재원을 국방공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제기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국가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방공업 부문에 대한 최우선적 자원배분의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난 이후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국방공업 부문을 경제회복의 토대로 삼아야 북한의 기존 경제구조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 부문들도 회복되고 '단번 도약'도 가능하다는 논리로도 국방공업 우선 발전 주의를 주장해 왔다. 주민들의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공업·농업의 발전은 국방공업의 물질적 조건들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만 보장된다고 하는 논리를 내세웠다.[29]

그러나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은 과거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확대, 변형시킨 것으로서 북한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부문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자체가 한정된 투자재원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투자하게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산업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북한주민들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게 만들었는데,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9_조선노동당출판사(평양), 『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2005년 참조.

일반적으로 공급경제가 위기이고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된 경제하에서는 비교우위에 따라 우선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생산의 정상화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력 회복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부문부터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산업노동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식량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아직 기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내세워 1998년~2022년간 5차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며, 사실상 국가재원의 대부분을 군수산업 및 이와 연관된 과학기술 부문에 집중 투입해왔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계금속, 석탄, 전력, 철도운송 등 이른바 4대 선행 부문에 대한 우선 재원 투입정책도 시행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군수공업과 연관된 산업연관 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의 결과, 현재의 북한 경제는 민생경제 부문은 여전히 산업연관관계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방공업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능력 강화를 지속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선군경제건설 노선 강조 포스터



국방공업 우선 정책 강조 포스터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 기조는 3대 세습정권인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의 최초 문건으로 알려지는 이른바 '4.6담화문'에서 김정은이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열병식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서는 안된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기조 유지라는 큰 틀 내에서 인민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해보겠다는 것인데,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 기조가 수정되지 않는 한 인민경제 부문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

북한은 1965년 이후 공식적으로 거시경제적 총량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끔 국제사회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 때 그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통계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발표하는 경제통계들은 통치목적에 따라 체제선전 차원에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1990년부터 자본주의적 추계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발표하는 북한의 거시경제적 통계가 그나마 유의미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과 1인당 국민소득을 추계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입수되는 북한의 산업별 생산량 추계치를 토대로 하면서도 남한의 물가·환율 통계치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가가치 및 화폐가치가 남한보다 현격히 낮고 물가구조도 국정물가와 시장물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남한의 물가와 환율을 적용한 한국은행의 거시경제적 통계는 사실상 과대추계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추계치는 1990년 이후 북한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적 통계치를 통해 북한 경제의 거시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1) 경제성장률 및 산업성장률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통계에 의거해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90	'95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4.3	-4.4	-0.9	6.1	0.4	3.8	1.2	1.8	2.1	3.8	-1.0	-1.2	3.1	-0.9	-0.5	0.8
(9.3)	(8.9)	(-5.7)	(10.7)	(8.8)	(4.0)	(7.2)	(2.8)	(4.6)	(4.0)	(5.2)	(5.1)	(2.3)	(0.3)	(6.3)	(3.6)

주 : ( )내는 남한의 경제성장률
출처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표 5-1〉을 보면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1998년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었다. 1990년대의 공장 가동률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당시 지방공장과 같은 거의 대부분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부 기간산업 및 군수공장만 겨우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석유, 원자재 등 주요 수입국가였던 구소련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의한 공급을 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외경제 부문을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중단 및 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북한 경제는 전시경제가 아닌데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축소재생산을 겪게 되었고, 단기간 내에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 경제는 극단적인 축소재생산 추세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지만, 회복 추세는 선순환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애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2000~2005년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약 2.2%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지만,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서 2006~2010년간 -0.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2011년에는 성장률이 0.8%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산업별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북한의 실물 산업생산력 부문에 약간의 불균등 성장구조가 존재함을 보게 된다.(표 5-2 참조)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2	1994	1997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어업	-10.5	-3.3	2.8	-2.7	9.2	-5.1	4.2	1.7	4.1	5.3	-2.6	-9.1	8.0	-1.0	-2.1	5.3
광업	-5.6	-5.7	-5.2	-15.8	14.2	5.8	-3.8	3.2	2.5	3.1	1.9	1.5	2.4	-0.9	-0.2	0.9
제조업	-3.2	-18.3	-3.9	-18.3	7.9	1.4	-1.5	2.7	0.3	4.8	0.4	0.7	2.6	-3.0	-0.3	-3.0
(경공업)	-0.9	-7.6	-0.1	-14.2	2.9	6.3	2.7	2.7	-0.2	3.8	-0.6	-2.2	1.3	-2.1	-1.4	-0.1
(중공업)	-4.1	-21.3	-5.5	-20.3	10.4	-1.0	-3.9	2.8	0.4	5.4	1.0	2.2	3.2	-3.5	0.1	-4.2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3.5	10.5	2.1	0.4	6.1	-11. 5	-1.5	1.1	0.8	0.3	3.9
서비스업	0.7	0.8	2.3	1.0	-1.7	1.1	-0.2	0.6	1.3	1.3	1.1	1.7	0.7	0.1	0.2	0.3

출처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즉 2006년 이후 전반적 마이너스 성장세 추세와 달리, 2003년~2008년간 북한의 광업 생산 부문은 연평균 2.4%, 중공업 부문은 연평균 2.5%, 경공업 부문은 연평균 0.8%의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2000년대 중반 이후 실물 산업생산력 부문에 있어서 단기간 미미한 회복세 추이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2006~2007년간 마이너스 성장은 식량생산량의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농업성장률 때문이었고,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플러스 추세 속에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식량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8% 늘어나게 되자, 북한 경제는 3.1%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2003~2008년간 광업 및 중공업 부문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미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회복세를 보였던 것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동 기간 동안 북한이 식량, 비료 등 많은 무상원조를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이 무상원조에 기초해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에 따라 재정자금을 전략산업·기간산업 등 이른바 선행 부문에 집중 투입시켜 이를 중심으로 미미하지만 산업연관관계의 회복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과거와 같은 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1998년부터 현재 3차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 「기간공업 3개년 계획」(2006~2008년) 등 부문별 중기 계획도 세워 전략산업, 기간산업 등 위주로 산업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행하였다.

둘째, 2002~2005년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민생경제 부문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계획 부문에 이전시키도록 하는 이원적 선군경제건설 전략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풍부한 강수량, 1990년대 후반부터 주력해 왔던 중소형 및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연이은 완공, 1990년대 중반 홍수 피해를 입었던 석탄광산의 부분적 회복, 6자회담 대가에 의한 국제사회의 중유지원 등등 요인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2003년~2008년 동안 연평균 5%씩 증대[30]된 것도 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999년도 이후 매년 대규모로 유입되는 남한 및 해외로부터의 무상지원,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외화의 유입 등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북한의 전반적 공장가동률은 1990년대보다는 약간 증가된 약 3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북한의 산업생산력은 〈표 5-2〉에서 보듯이 다시 연평균 마이너스 2.1%의 추세 속에 머물러 있다. 이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와 남북경협의 위축, 시장통제의 강화 그리고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및 3대 세습 구축을 위한 평양 위주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재원집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0_통일연구원, 『2008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2009, pp.21~24 참조.

다만 〈표 5-2〉를 보면 산업생산력의 재차 마이너스 성장추세 속에 경공업 부문의 하락세가 중공업 부문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한당국이 2008년 이후 경공업 및 농업 정상화의 핵심인 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2010년 이후에는 경공업과 농업을 경제정책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여 재정지출을 보다 늘린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1년을 '경공업의 해', 2012년을 '인민의 해'로 규정하고 경공업과 농업에서 '함남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하며, 먹는 문제 해결과 경공업의 정상화를 2000년대 상반기때보다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난의 지속과 내부자원 동원의 한계, 석탄에너지를 활용한 경공업 부문 정상화전략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공업·농업 분야 산업연관관계는 석탄→석탄화학공업→경공업·농업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에 북한은 2009년부터 이른바 석탄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공정을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에 설치해나고, 2010년도에는 16년만에 2.8비날론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주체섬유, 주체비료라고 부르는 이 기술공정들은 전력소모가 상당히 소요되는 비효율적 기술로서, 이 공장들의 정상화를 아직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2) 기초 원자재 생산 현황

북한이 지속적으로 산업생산력의 회복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산업의 주요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이 199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초 원·부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기초 원자재 생산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간재 생산 부문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최종 소비재의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몇 가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통해 북한의 기초 원자재 생산력 실태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을 보면,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등 주요 기초 원자재 공급량이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서서히 회복 추세를 보이더니 2009년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3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년도·분야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91	816.8	22.7	316.8	516.9	108.1
1993	476.3	16.4	185.9	398.0	121.2
1996	344.0	11.6	120.8	379.0	72.1
1998	289.0	9.7	94.5	315.0	52.7
2001	420.8	9.2	106.2	516.0	54.6
2002	407.8	8.7	103.8	532.0	50.3
2003	443.3	9.4	109.3	554.3	41.6
2004	457.9	9.8	106.8	563.2	43.4
2005	491.3	10.7	116.8	593.0	45.0
2006	504.1	8.6	118.1	615.5	45.4
2007	512.6	9.2	122.9	612.9	40.5
2008	531.6	9.4	127.1	641.5	47.9
2009	495.5	9.1	125.5	612.6	46.6
2010	509.3	9.2	127.9	627.9	45.9
2011	523.2	9.1	122.5	645.2	47.1

출처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광석 생산의 경우 2003년~2008년간 연평균 3.3%씩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었다. 이는 중국이 늘어난 원자재 수요

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에 설비자재, 기계부품, 광산노동자의 식량 등 일부 생산요소를 조달해 주고 수송수단도 지원하는 투자를 한데 따른 효과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광석 생산은 2009년도에 전년 대비 6.8% 하락하고 2010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2008년 수준보다 하락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화조달을 위해 철광석의 대중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력 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이고 있다.

강철 생산의 경우 코크스 원료의 부족과 설비의 노후화·근대 설비의 결여로 쉽게 회복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생산 부문과 달리 2005년에 와서야 2008년까지 잠시 3년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더니 2009년은 전년 대비 -1.2%, 2010년은 전년 대비 1.9%, 2011년은 전년대비 -4.2% 식으로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8년부터 철강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이른바 '주체철 생산공정'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철 생산기술 공정'이란, 무연탄을 사용해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공정으로서 비날론 생산기술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에 사양화된 기술공정이다. 무연탄을 활용한 철강 생산기술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철강제품을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해외자본을 도입해 철강산업을 정상화하기가 어렵게 되자, 국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을 활용해 철강 생산을 정상화하고자 했었다. 그리하여 우선 이 기술공정을 천리마제강에 먼저 도입하고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등에 차례로 시행하려 했지만, 전력 부족, 설비자재의 부족, 기술적 실패 등 때문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날론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까지는 북한의 매체에서 주체철 생산 관련 구호와 선전이 많더니,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언급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상황이다.

시멘트 생산의 경우 원자재 생산 부문 중에서 유일하게 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부문으로서, 2001년 이후 이미 1990년대 초반 생산량 수준을 넘어서고 2011년 현재 1991년 대비 24.8% 증가된 생산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멘트 생산 부문이 상대적으로 자본투자 규모가 적게 요

구되고, 북한의 대표적 시멘트공장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 해외자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주민을 총동원해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 10만 세대 아파트 건설 등 각종의 건설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게 되면서 시멘트공장 부문에 대한 설비투자를 우선 시행했었다.

반면, 비철금속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20만 톤대 생산력을 보였는데, 2000년대 내내 9만 톤대 생산력 수준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인프라와 노후화된 설비, 전력 부족 등이 생산력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료 생산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 100만 톤 생산력 수준에서 급격히 하락해나가 2000년대 내내 40만 톤대 생산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활용한 '무연탄 가스공정화' 기술, 일명 '주체비료' 기술을 2010년 남흥청년화학기업소에 그리고 2011년도에는 흥남비료공장에 도입하여 비료 생산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전력 및 석탄의 부족과 석탄의 낮은 질, 생산설비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따라서 북한의 원자재 생산 부문은 시멘트를 제외하고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비료 등의 생산이 여전히 1990년대 초반 수준도 회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91년도에 비해 2011년도 생산량이 철광석의 경우 64%, 비철금속의 경우 40%, 강철의 경우 38.6%, 비료의 경우 43.5%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원·부자재 생산 부문의 정체 및 미미한 생산증가율은 북한 제조업이 2009년부터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아직 산업연관관계의 연결고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초 원자재 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은 과거 소련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사실상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수 및 대체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설비들이

31_통일연구원, 『2010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2011.1월, p.24.

폐기 처분되거나 현대설비들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1998년부터 과학기술 부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부문에서의 기술개선 및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족한 투자재원과 전력난으로 인해 사실상 대체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정비·보수에 그쳐왔다. 2008년부터 중국에서 일부 설비자재들을 수입해 대체투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생산공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연관되어 있는 전반적 생산공정의 정상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국내 원료인 무연탄을 활용한 기초 원자재 생산 부문의 정상화를 시도하고도 있지만, 이 기술공정 자체가 전력의 소모가 많고 불안정한 기술공정이기 때문에 생산의 정상화를 유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북한의 기초 원자재 부문의 생산력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문제의 해결, 해외자본의 도입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 하겠다.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 에너지 생산 현황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의 산업가동률을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식량난과 더불어 북한 경제 회복의 최대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의 절반도 안됨으로써 북한이 1980년대 수준의 산업생산력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 추이와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천배럴, 억kWh, %)

구분	1989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석탄	3,508 6.3	3,315 −23.4	2,920 −5.8	2,540 −6.3	2,100 −11.4	1,860 −9.7	2,250 4.6	2,190 −5.6	2,280 2.2	2,468 2.6	2,410 −2.3	2,506 1.5	2,550 1.7	2,550 0	2,550 0
원유 도입	–	18,472 –	11,142 −19.5	6,670 −33.0	6,861 −14.6	3,694 −1.2	2,851 22.7	4,376 3.1	3,900 7.0	3,841 0.2	3,834 0.1	3,878 1.1	3,795 −1.7	3,854 1.5	3,840 −0.4
발전량	294 4.2	277 4.2	247 −6.1	231 4.5	213 −7.4	170 −11.9	194 4.5	190 −5.7	206 5.1	225 4.4	237 5.3	255 7.4	235 −8.2	237 0.8	211 −10.9

출처 :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표 5-4〉를 통해 2000년대 북한의 에너지 공급사정을 살펴보면 석탄공급량은 1990년 대비 1998년도에 56%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 약 75%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고, 전력생산량은 1998년도에 1990년 대비 61% 수준까지 감소되었다가 2011년도에 75% 수준만 회복되고 있다. 반면 원유도입량의 경우 2011년 현재 도입량이 1990년 대비 약 20.8%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300만 배럴대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1980년대 후반 수준의 원유도입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냉전시절에 구소련의 원유공급 역할을 그 어떤 나라도 대체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절에 구소련은 북한 원유도입량의 80% 정도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즉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구상무역 방식으로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원유도입 결제 방식이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급격한 원유도입량의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최저한도의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 북한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300만 배럴대 수준의 원유는 아마도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운송분야 그리고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착화용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용 및 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아주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원유도입에 애로를 겪게 되자 북한은 산업연관관계의 회복 및 경제의 정상화를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두고 노력해왔다. 북한은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32]이라고 강조할 정도이다. 그러나 〈표 5-4〉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2000년대 10년간 기껏해야 약 11% 정도만 증가했을 뿐이었다. 이는 북한의 석탄 생산 부문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부터 자력갱생발전 노선에 따라 산업에너지 체계를 석탄에너지에 의존하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을 취해왔었다. 즉 석탄에너지에 토대를 둔 공업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80년대에 북한의 석탄 생산은 이미 심부화深部化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채탄장비의 노후화, 신규설비 투자의 부족, 자재의 공급애로까지 겹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다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 일어난 대규모 홍수는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많은 탄광들을 파괴시켰는데, 이 당시 수해를 입었던 탄광들 중 많은 탄광들이 아직도 과거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5-4〉에서 2003년 이후 북한 석탄생산량이 조금씩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은 홍수 피해를 입었던 일부 탄광이 복구되고, 중국이 일부 탄광에 설비투자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탄광에 대한 설비 및 수송 투자는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의 급증 요인이 되고 있다.

원유도입량과 석탄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당연히 심각한 전력난으로 연결되어 북한 공업 시스템의 토대를 붕괴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전력생산량 또한 1980년대 후반 수준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4〉에서 보듯이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2003년~2008년간 연평균 5%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도에는 특히 전년 대비 10.9%나 감소하여 북한 산업생산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그간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 전력생산량의 회복이 관

32_민주조선, "어버이수령님의 경제강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2011.7.5일자.

건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중·소형 수력발전에서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로 전환하고 이를 빠른 시간 내 조기 완공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리하여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2~4호, 양강도 삼수발전소, 평안북도 태천발전소 4호, 황해북도 예성강 2호 발전소 등이 준공되었지만, 건설자재 부족으로 주로 자갈, 진흙, 모래 등을 사용하여 건설함으로써 준공 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의 상징적 경제사업으로 자강도에 30만 kW급의 희천발전소를 2012년 4월 완공하였지만, 희천발전소의 전력은 평양에만 공급됨으로써 산업정상화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33]

북한의 전력난은 1980년대 중반경에 '한 집 한 등 켜기 운동'을 할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 1980년대 후반 발전소 가동률도 40%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수준의 전력 생산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북한의 발전소 가동률은 30% 내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즉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을 세우고, 북창, 평양 화력발전소 등 핵심 석탄 화력발전소들의 노후화된 발전설비들의 교체 및 기술개건·보수, 전력 및 석탄 생산에 자본·노동력·수송 등의 집중 재정배분, 일부 탄갱의 기술개선 및 설비 현대화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메탄가스 등 대용연료의 개발 및 풍력·태양열·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활용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전력문제 해결의 주요 핵심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들은 강우량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산업생산 부문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어렵고, 대부분 자체 제작된 발전설비들을 사용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_북한은 원래 희천발전소 완공 시기를 2022년으로 보았는데, 이것을 10년 앞당겨 2012년에 완공하려 한다며 2008년부터 각 시·도 인민위원회, 내각의 성 및 기관들, 심지어 여맹에까지 건설비용 부담과 노동력 동원을 독려하여 건설하였다.

(2) 식량 생산 현황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 도입되었던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영농 생산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침체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경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여만 톤 정도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이미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하여 배급하고 있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일부 자체 수입능력의 유지 등으로 기근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의 감소,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원자재 생산의 급락, 연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도 400만 톤 이하로 급락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표 5-5〉에서 보듯이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1997년간 식량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해 감량배급(1인당 546g) 기준으로 식량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표 5-5 **북한의 식량수급량 추이**

(단위 : 만 톤)

연도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량 수요량	534	529	530	504	518	524	536	542	548	545	560	543	540	548	546	534	540
전년도 생산량	413	345	369	389	422	359	395	413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25	445
부족량	121	184	161	115	96	165	141	129	123	114	106	95	139	117	135	109	95

주 : 식량수요량은 농촌진흥청 추계시 감량배급(성인 1일 546g) 기준(1995~2010), WFP/FAO 추계시 1일 최소 기준량(1인당 458g)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출처 : 농촌진흥청(1995~2010), WFP/FAO(2011~2012)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양호한 기상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지원과 국제사회의 농업지원 그리고 북한당국의 식량 증산 독려정책 등에 힘입어

2003년~2011년간 연평균 428.5만 톤의 생산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평균 428.5만 톤의 식량 생산은 감량배급 기준(1인당 546g)으로도 매년 평균 116만 톤의 식량 부족을 겪게 하는 수준이다. 유엔 기구는 북한의 식량 최소수요량을 1일 최소기준량(1인당 458g)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추산해보면 북한은 매년 평균 60만 톤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00년대에도 이렇게 매년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기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개인경작지 증대, 식량의 시장거래 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유입되는 식량 밀무역과 전국적 규모로 발달된 장마당은 2008년 이후 국제사회 및 남한의 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도 북한에서 두드러지게 기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북지원단체들 및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이 2010년 이후 일부 지방과 계층을 중심으로 심지어 하급 군인들까지 식량애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당국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철폐하려던 정책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화폐개혁은 북한주민들의 보유화폐 축소와 급격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식량구매에 어려움을 조성함으로써, 최근 2년여 사이 일부 지역·계층들에 부분 기근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량문제에 대해 북한당국은 나름대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었다. 우선 20만 정보에 이르는 토지정리사업(1999~2005년), 식량작물 위주 및 밀식재배로 대표되는 주체농정의 수정, 「기간공업과 농업 3년 연속계획」(2006~2008년)에 의한 농업 예산지출 증대 등을 시행했었다. 7.1 조치 도입 당시에는 협동농장의 부분분권화 조치, 400평까지 개인경작지의 확대, 최종 노동단위가 3~4명 수준인 이른바 '포전圃田담당제'의 실험, 협동농장의 일부 경작지를 기관·기업소에 나누어 주어 경작케 하는 '6개월 농사제' 등을 실행해보기도 했었다.

분조관리제는 1966년에 모든 협동농장에 도입한 제도로서 협동농장의 기층단위인 분조(10~25명)에 일정 면적의 농경지와 생산도구 등을 주고 국가가 해당 분조의 정보당 수확량을 정하여 그 수행 정도에 따라 분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96년 식량난 심화로 곡물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분조의 규모를 축소(7~8명)하고 분조에 목표 생산량의 초과분에 대한 현물 처분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바꾸었다.


북한의 다락밭

그러나 북한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를 후퇴시키면서 이 제도들을 폐지하고, 개인밭 경작물마저 식량수매에 포함시키는 과거 전통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했었다. 전통적인 집단영농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실험조치들조차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은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후 식량문제 해결이 체제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협동농장 운영방식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외부적으로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농업정책들은 여전히 집단적 영농방식 및 계획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적 측면 내지 생산의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된 정책으로서,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이고 당일꾼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고 하며, 식량문제 해결을 당일꾼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가생산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1980년대 중반경에 비로소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유념에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중국처럼 농가에 생산 및 판매의 자율권과 토지이용권을 부여하는 소유제 개혁밖에 없는 것이다.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1) 무역규모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발전 노선을 정책기조로 삼아왔고 냉전시절에는 구소련이 원유 등 전략물자들을 사회주의 우호무역에 따라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기본적으로 거의 10%가 넘지 않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난 직전 가장 무역규모가 높았던 1990년도의 무역규모가 47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는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북한은 새롭게 자본주의 경제권과 대외무역 관계를 구축하여 필요 원자재들을 수입해야 하는데, 북한은 1차 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상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과 무역관계를 맺는 나라는 주로 주변국인 중국, 일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그림 5-1〉를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탈냉전 이후 1998년도에 14.4억 달러까지 급락했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지속된 1990~1998년간 무역규모 하락률은 연평균 약 11%로서, 연평균 약 4.1%씩의 하락률을 보인 국민총소득GNI 하락률의 2.6배나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 특히 이 기간의 수출 하락률은 연평균 약 10.2%인 반면, 수입 하락률은 11.8%로 수입의 감소율이 더 컸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한 국민총소득GNI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는 1999년부터 회복조짐을 보여, 2000~2011년간 북한의 무역규모는 2000년대 전·후반기로 기복을 보인 경제성장률과 달리 매년 연평균 18.3%씩의 성장세를 나타내게 된다. 북한의 대외무역통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북한과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규모를 수집해서 추산하고 있으며, 남북교역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동 기간 동안의 남북

교역액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북한의 대외무역 성장률은 연평균 24.4%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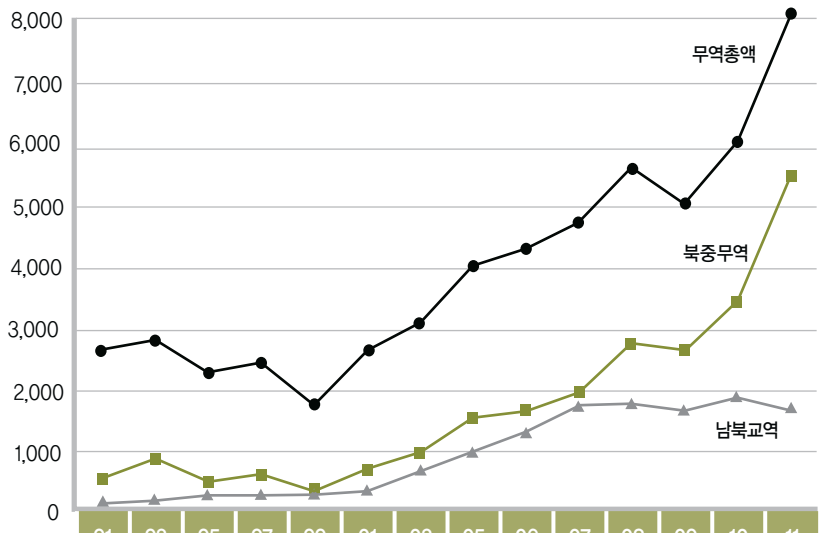
이러한 무역 증가세는 동 기간 동안 국민총소득GNI의 연평균 2%대 성장률, 특히 2000년대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률 추세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 5-1〉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2006~2007년간 잠시 30억 달러(남북교역 제외)대에서 정체된 적이 있지만, 2008년도에 다시 38.2억 달러로 증가하더니 2011년도에는 사상 최대인 6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9년도에 북한의 대외무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화폐개혁 등의 여파로 2008년 대비 10.5%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0년도 이후 북·중 간 경협강화로 최근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인 성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경제의 기초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둔 무역의 확대가 아닌,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및 전형적인 후진국 무역형태로 구조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규모와 적자규모가 같이 확대되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고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1999년간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2011년간 연평균 10.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내부에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은 1차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수출이 수입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특히 2005년도에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계속 10억 달러 이상 적자폭을 나타내었는데, 2011년도만 사상 최대의 광물자원 수출 증가로 7억 달러대의 적자폭을 보였다.

그림 5-1 북한 대외무역 추이(남북교역 포함)

(단위 : 백만 달러)



	91	93	95	97	99	01	03	05	06	07	08	09	10	11
무역총액	2,695	2,833	2,339	2,485	1,813	2,673	3,115	4,057	4,346	4,731	5,635	5,093	6,086	8,030
북중무역	610	899	549	656	370	737	1,022	1,580	1,699	1,974	2,787	2,680	3,472	5,629
남북교역	112	186	287	308	334	403	724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둘째, 북한의 무역규모 증가는 중국과 남한에 편중되는 구조,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빠르게 증대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1999년도에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을 합한 비중은 38.8%였지만, 2011년에는 91%(북중무역 비중 70%, 남북교역 비중 21.2%)로 거의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교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북중무역 비중은 증가함으로써 북한 대외무역의 북중무역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 마디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양적 무역증대는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이 전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북중무역이 압도적 비중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교역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상 북한 대외무역은 곧 북중무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교역을 제외하고 북한 대외무

역에서 북중무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 비중이 1999년만 해도 25%였는데 2011년도에는 89%에 이르고 있다.

표 5-6 북한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의 비중

연도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중(%)	25.0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78.5	83	89

주 : 남북경협을 제외한 비중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그런데 다른 한편, 북한은 남북교역에서는 흑자구조를, 북중무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북중무역의 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중무역의 비약적 증대는 다음 네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2005년 이후 증대하기 시작하고 이에 힘입어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② 북한이 노후화된 산업설비의 기술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장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대중국 수입수요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③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대로 중국산 공산품의 북한시장 지배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④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국가로 중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북중경협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무역구조의 문제점은 산업생산력 회복이 더딘 가운데 진행된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는 무역구조를 기초 원자재·공업완성품 및 에너지·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고, 수출은 1차자원(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 등) 및 위탁가공 제품에 압도적으로 편중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즉 〈표 5-7〉을 보면 2000년도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광물자원(광물성제품 및 비금속제품) 비중은 50%에 못미쳤지만, 2011년 현재 그 비중은 70.3%나 되고 있다. 여기에 농림수산물 제

품까지 합하면 1차 자원 수출 비중이 75.2%나 된다. 섬유가죽 제품들은 대개 위탁가공 제품들이므로 결국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공산품 비중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2011년 대중국 수입에서 원유, 석유 관련 제품, 식량 등 곡물이 약 23%, 기계·전기전자·수송 관련 제품이 21.7%, 섬유 관련 제품 5.4%, 플라스틱·화학제품 8.6%로 1차 산품부터 공업품,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입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원유, 석유 관련 제품, 식량 등을 1/3 정도 변함없이 수입하는 경직된 구조와 모든 제조업 제품들을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표 5-7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비중**

구 분	광물성 생산품	비금속 및 그 제품	농림수산	섬유. 가죽	목재, 펄프, 종이	기계, 전기전자	화학, 고무, 플라스틱
2000	16.5	26.9	15.6	7.2	26.8	2.5	4.6
2002	7.9	11.1	58.8	16.1	3.5	2.3	0.3
2004	19.5	19.9	47.3	9.5	2.6	0.8	0.3
2005	41.7	18.3	21.6	13.5	3.1	1.0	0.9
2006	48.6	12.7	13.3	15.6	5.7	1.1	0.9
2007	59.4	13.5	7.7	12.4	3.6	1.5	0.6
2008	58.3	15.5	7.6	12.1	1.0	1.5	1.3
2009	60.5	13.8	7.5	12.6	0.0	1.0	2.7
2010	57.1	15.5	6.5	16.0	0.0	1.8	1.6
2011	59.4	10.9	4.9	11.5	–	1.5	–

출처 :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북한은 구조적으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식량, 에너지 등을 수입해야 하는 요인을 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산업생산력의 파괴로 인해 공산품 및 소비제품과 더불어 경제회복을 위한 기계설비·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대중 무역편중 현상, 후진국형 무역구조, 만성적인 무역역조 현상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2) 재정규모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제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재정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국영기업소의 자본형성 및 투자 외에 운영자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 social consumption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이 비중이 매우 높아, 김정일이 2001년 10월 3일 담화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사회적 공짜'가 재정지출에서 거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표 5-8〉을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식량난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1994년 191.7억 달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8〉을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5~1997년과 2002년도에 두 번이나 보고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995~1997년 동안에는 심각한 식량난과 대홍수 그리고 곳곳에 멈춰버린 공장 등 계획경제기능 자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이고, 2002년의 경우에는 7.1 조치로 재정항목들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8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연 도	달러표시(억 달러)	북한원화표시(억 원)	대미환율(원)
1990	165.9	355	2.14
1992	184.5	393	2.13
1993	187.0	402	2.15
1994	191.7	414	2.16
1995~1997	–	–	–
1998	91.0	200	2.20
1999	92.2	200	2.17
2000	95.7	210	2.19
2001	98.1	217	2.21
2002	–	–	–
2003	22.3	3,234	145
2004	25.1	3,488	139
2005	29.0	4,057	140
2006	29.7	4,193	141
2007	32.6	4,406	135
2008	34.7	4,510	130
2009	35.9	4,815	134
2010	51.3	5,210	101.6
2011	57.6	5,665	98.3
2012	62.1	6,238	100.4

주 : 2012년 재정규모는 계획규모
출처 : 통일부

위의 〈표 5-8〉을 보면 북한의 재정규모는 2012년 약 62.1억 달러로서 1990년대 가장 높았던 1994년과 단순 비교해 보면 약 32.4%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 원화 표시로는 1994년 대비 2012년에는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7.1 조치 당시 환율조정을(1994년 대비 2003년 약 67배 상승) 감안하면 경제난 이후 북한 재정의 축소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대략 절반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규모의 축소는 북한의 계획경제기능이 전반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부문에서 계획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왜곡되거

나 변형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고 있다.

재정의 위기가 지속되자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면서 더 이상 사회주의적 지출 및 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정의 개혁도 함께 실시했었다. 즉 북한은 7.1 조치를 계기로 재정관리체계를 지출위주에서 수입위주로 바꾸고 재정의 확충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즉 7.1 조치를 계기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가격편차보전금, 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 및 배급제를 축소 시행하였다. 반면, 예산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료, 시장이용료, 국가납부금, 국가재산판매수입금 등 새로운 조세항목을 신설하고, 2003년 5월 10년 만기의 인민생활공채(복권방식)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06년도에 토지사용료를 부동산사용료로 개편하고 사회보험료를 기업에게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북한의 재정은 2003~2011년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18.2%의(달러기준) 명목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난은 여전히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재정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비, 인민군대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보급, 시·군 단위에서의 도로 및 공공건물 건설, 평양 10만 세대 아파트, 희천발전소 등 강성대국 건설 대상 부문에 요구되는 원자재 조달, 여기에 동원된 노동력의 식량지원 등 각종의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수요들이 주민들로부터 각종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준조세들로[34]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11월 30일 시행한 100:1 화폐교환조치의 배경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도 하나의 배경이었다.

34_이 준조세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서 7.1 조치 당시 발표 기준 1인당 월평균 2천원~3천원 임금의 몇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적어도 2012년까지는 1980년대 후반 수준의 산업생산력을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목표를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2000년대 상반기에는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을, 하반기에는 시장통제 및 총동원정책을 실행했었다. 또한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제한적 개방정책도 시행해왔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 경제정책의 이러한 추세는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인민경제의 향상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1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정책

(1) 선군경제정책과 7.1 조치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마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국영기업소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계획지표'가 아닌 '기업 자체의 지표'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는

암시장이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선군경제정책에 기초한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계획기능의 분권화와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재정의 위기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여타 경제 부문들은 불가피하게 자력갱생논리, 즉 부분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여타 경제 부문들로부터 경제적 잉여의 이전이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셋째, 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시장공간을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렵고 제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의도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즉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민수생산 부문의 경우 분권화 조치와 일부 시장경제기능의 도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실리사회주의'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의 성과에 있어서 최대의 실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7.1 조치는 ①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분권화, ② '번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지표의 변경, ③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의 현실화, ④ 협동농장 분조의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의 확대, ⑤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 허용 및 종합시장의 개설, ⑥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치로서, 2005년 10월경까지 추가 보완조치를 해나가며 실험되었다. 그러나 7.1 조치는 "계획적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이라는 취지가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5년 10월 이후 7.1 조치들을 후퇴시키고, 2010년 4월에는 중앙집권적 계획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였다.

(2) 시장화 현상의 확대와 시장통제정책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는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부터 고려하면,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역사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난이 도래하자 1993년경부터 과거 10일마다 열리는 농민시장이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인 '장마당'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경에 심각한 식량난이 도래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발달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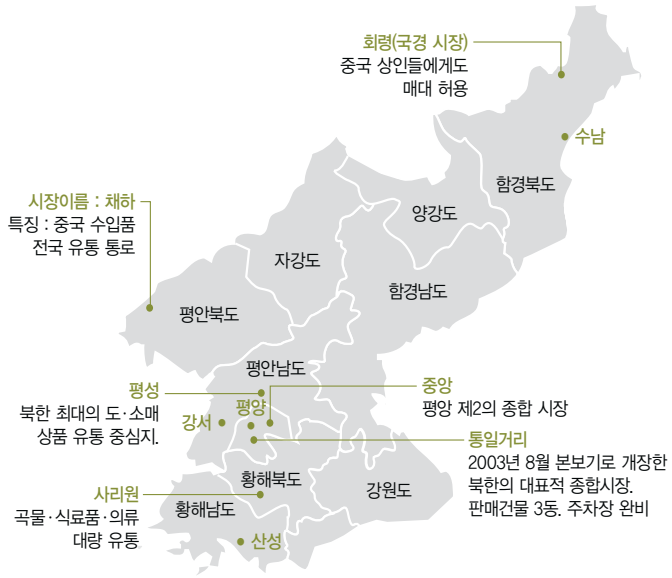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주민들의 장사형태가 '되거리장사', '달리기장사'에서 상설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장사'로 정착되고, 전국에 약 300개 이상의 상설시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가운데 소비재가 거래되는 종합시장, 중간재가 거래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수입원자재가 거래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등을 도입한 7.1 조치는 전국적 유통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음 〈그림 5-2〉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시·도 종합시장들이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발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소도시까지 유통망이 네트워크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의 장마당

이와 같은 북한시장의 구조적·질적 발전에 따라 북한의 시장은 생계형적 형태에서 부의 축적공간으로 발전되어 나갔고,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중간계층들도 형성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경제활동(임노동, 장사, 개인 경작, 개인 가정교사, 개인 식당운영, 개인 숙박업 등)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 현상이 확대되어 나갔다. 나아가 계획경제 부문이 점차 시장경제 부문에 침식당하거나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인민경제 내에 군 경제, 당 경제 등 특권경제 부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권경제기관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합법을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시장에서 더욱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부패경제의 확대 현상도 나타났고,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공식경제가 아닌 '장마당경제'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림 5-2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이에 북한당국은 심각한 체제위협 의식을 갖게 되어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7.1 조치의 후퇴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시장통제정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제한, 장사 연령의 제한, 매대 장사품목 수의 제한, 메뚜기 장사꾼(종합시장에 고정 매대가 없는 장사꾼)의 단속 등의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종합시장마저도 철폐하려는 조치를 취해나갔다. 하지만 시장을 없애려는 북한당국의 조치는 북한 경제의 현실에서 이미 시장이 불가역적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 공식 임금은 있으나마나 한 금액이므로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매개로 한 개인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조차도 재정난의 지속으로 사실상 시장을 활용해 '변용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9년도에 들어와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

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하며 대규모 도매시장의 대명사인 평성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압적으로 시장을 철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총동원정책과 화폐개혁

북한은 2007년도 말에 15년만의 '전국지식인대회', 14년만의 '당세포자대회'를 열고 2012년도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는 가시적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더니 정권수립 60주년이 되는 2008년을 '전환의 해'로 삼아 2008년부터 총동원정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은 2012년이 5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므로 과거와 같은 총동원방식의 경제건설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2008년도에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①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②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 ③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 발양 등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개건해나간다는 원칙, 내부원천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 등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2008년도 이후 남한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한 정세변화와 북한의 일방적인 6자회담의 중단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9년도에 일명 150일전투·100일전투라는 대대적인 총동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대중동원 방식으로 노동력을 중점 대상건설 부문에 투입하고, 각 경제 부문에 축적되어 있는 자원도 이 부문에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북한은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경제건설을 해왔다. 그러나 대중동원 방식의 경제건설 방식은 비중점 경제 부문을 위축시켜 산업의 불균형과 자원의 낭비,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심화시켜 경제발전에 장애를 가져왔다. 게다가 2009년도에 다시 부활한 돌격대식 노력동원 운동은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생산력 증산에 기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민간에 보유되

어 있는 화폐자산을 총동원할 목적으로 결국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시행하기까지 하였다.

화폐개혁의 내용

- 신구화폐 1:100 교환(저금소 저축은 1:10 교환)
  - 가구당 10만원 상한 교환 → 후에 50만으로 상한선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짐.
- 화폐개혁과 동시에 시행된 조치들
  - ① 종합시장 폐쇄, 농민시장으로 강제 전환
    - 상인보유 물자, 화폐 모두 국영상점으로 이관 및 국가기관 납부
  - ② 외화사용금지
    - 개인의 외화 상거래 불법, 보유외화 모두 당국에 헌납
    - 기업소·무역회사 외화수입은 24시간내 은행 입금
  - ③ 노동자·농민의 임금 종전 수준대로 지불
    - 1인당 500원 배려금 지불, 농가 가구당 15만원 현금 분배

화폐개혁은 위의 표에서 요약된대로 갑작스럽게 신구화폐를 1:100으로 교환하는 조치였다. 만일 북한당국이 이 조치만 내렸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통제 목적의 화폐개혁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 조치와 함께 가구당 북한 원화 10만원(후에 50만원으로 조정)까지만 교환해 주고, 종합시장 철폐, 외화사용거래 금지 조치들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복원을 의도했다. 그리고 민간에 유통되는 모든 화폐들을 회수하여 국가가 다시 발행하는 화폐만 사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발권능력 회복과 함께 재정의 확충도 노렸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군 경제, 당 경제 산하에 무역회사들이 난립하고 국가재정에서 파악 안되는 외화가 이들 특권경제기관들에 축적되는 것을 금지, 국가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요컨대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시장화 현상을 차단하고 강성대국 건설자금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수준과 같은 체제수준을 회복해 3대 세습 구축의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시행되자마자 북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왔던 경제정책들에 많은 차질과 타격을 가져왔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 원화가치의 추락과 북한

경제의 위안화·달러화 현상을 가속화·고착시켰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장마당, 종합시장에서 북한주민들은 북한 원화보다는, 특히 위안화를 선호하고 교환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고 한다.

둘째, 북한의 시장물가가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치 주가가 변동하는 것처럼 심하게 변동하고 급격한 물가상승이 야기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시장물가는 화폐개혁 2년이 되는 2011년 11월 말에 이미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었고, 그 이후 더욱 상승세를 이어와 2012년에는 초인플레이션 현상마저 초래되었다.

셋째, 화폐개혁은 단기적으로 북한당국의 재정능력을 확충시켜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장마당경제의 침체와 그럭저럭 작동되고 있었던 국영기업소와 계획경제 부문마저 경제활동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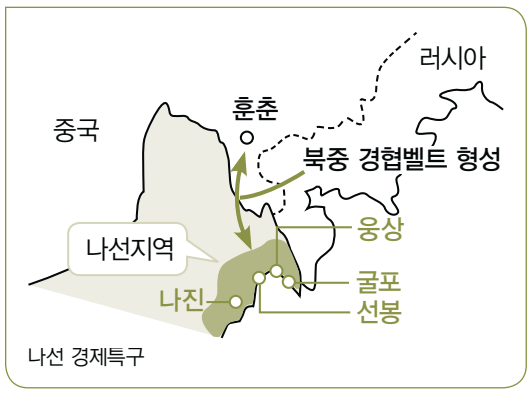
화폐개혁은 북한 경제에 깊이 확산된 시장화 현상에 제동을 걸고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졌으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북한 경제의 현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오히려 시장활동이 제한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자재공급 및 배급제 시스템의 붕괴로 국영공급망을 결코 정상화할 수 없는데 이를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2010년 5월경부터 북한의 종합시장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보유화폐도 빼앗긴데다 급격한 물가상승마저 겪음으로써 2000년대 이후 가장 심한 민생고를 겪고 있고,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던 일부 주민들은 다시 빈민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은 정부의 그 어떤 경제정책도 불신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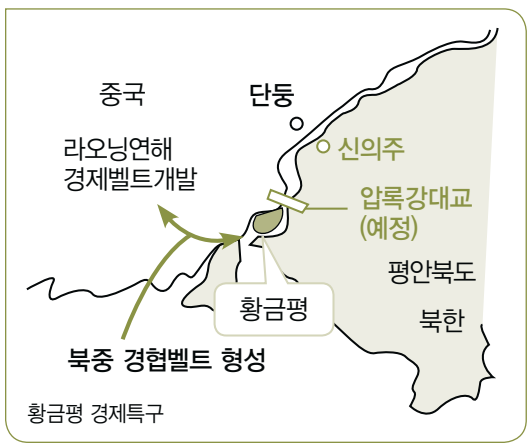
결국 북한당국은 2010년 1월 말 김영일 내각 총리가 화폐개혁의 잘못을 인정하고, 2월 초 이후 다시 종합시장 및 외화거래를 허용하고 특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의 활동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당국은 화폐

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던 시장세력을 위축시키는 일부 목표를 달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화폐개혁의 부정적 영향들은 역설적으로 북한당국이 2005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시장통제정책의 기조를 무력화시키고, 북한 경제에 있어서 시장이 없애기 어려운 존재임을 보여준다.

3 제한적 개방과 대중국 개방확대 정책

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 1990년대의 '모기장식 개방' 정책을 벗어나 보다 확대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은 것 같다. 내부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한 것이다.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할 당시 신의주와 개성·금강산 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설정하고, 특히 개성·금강산지역은 남한자본 전용 경제특구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신의주의 경우 중국의 비협조로 아예 추진되지도 못했으며, 금강산관광특구는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이라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에 4년 넘게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만 남북한 상생의 공단으로서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개발 추진 및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 때문에 공단의 유지·발전이 늘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는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 아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대만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조차 거부한 채 단지 외화획득 차원에서만 남북경협을 활용하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마저 겹쳐지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강성국가 건설을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화시키게 된다. 1991년도에 개설된 이래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해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의 다리,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계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2010년 1월에 나선시의 특별시 격상, 나선 경제특구법 개정,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 2010년 7월에 합영투자위원회 설립, 2010년 12월 중국과 나진, 황금평 공동개발 MOU 체결, 2011년 6월 나진,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 2011년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2012년 10월 나진-원정 도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신의주-단동 간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북한이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개발하려는 데는 정치적 요인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북·중 간 경제적 수요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제1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2005~2010년) 추진 이후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동북 3성 지역을 삼았는데, 동북 3성 지역 개발에 주변 접경지역 즉 몽골,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계 발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9월 국가전략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의 개발에는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결국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수요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 수요가 일치함으로써 북·중 간 접경지역 공동개발이 추진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간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은 북한을 좀 더 개방화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적극 도입되지 못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중국 자본 역시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북·중 간 공동개발은 향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간 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시장개혁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외부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경제성장의 승수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내경제 부문과 대외경제 부문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1) 북한 경제의 문제점

북한 경제의 현실은 제2절에서 살펴본 거시경제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볼 때, 2012년말 현재 1980년 후반 수준의 평균 약 60% 정도만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2012년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놓고, 적어도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산업생산력을 복원하겠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자원배분을 국방산업에 우선 투입하는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견지하면서 제한적 개방정책만 추구하며, 민생경제 부문은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대 상반기에 시장이 북한 경제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는지 목격하였으면서도, 2000년대 하반기 이후 시장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를 대변해왔던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게 되자, 2011년도에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를 '강성국가'라는 단어로 격하시키고,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아예 '강성부흥 구상'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기존에 주장해왔던 강성대국 건설이 장기적 목표였음을 내비쳤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의 지표로 2008년도에 제시했던 석탄, 식량, 철강, 비료 등 각종의 생산량 목표의 달성 대

신, 몇 가지 상징적 경제건설 업적으로 전환하여 2012년 '4월의 행사'를 치렀다. 즉 30만 kW급의 희천수력발전소 건설, 평양의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아파트·인민극장 등) 건설, 평양의 체육관, 유희장, 공원 건설 및 개보수, 평양 광복지구상업중심(대형쇼핑몰) 등 평양 위주의 각종 건설사업 중심으로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를 치렀다.

그러나 이런 평양 위주의 경제건설 사업으로 그친 2012년 강성국가 전략의 실패는 새로이 출범하는 김정은 정권에 몇 가지 경제적 문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첫째, 극심하게 확대된 경제의 양극화 해결과 함께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의 정상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정일 시대 선군경제건설 노선과 시장통제정책은 민생경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특히 2012년 강성국가 전략이 주로 평양 위주의 경제건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일반 주민들 및 지방 주민들의 민생고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도에 초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소득 하락은 200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동안 북한당국은 2012년 경제강국의 의미를 "인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따라서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주민들에게 민생고를 더 이상 인내하라고 강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경제관리 시스템을 개혁함과 아울러, 내각경제를 정상화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시장이 2000년대에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특권기관들에 의한 렌트rent 소득 추구행위 및 부패경제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기적인 시장통제정책이 일반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어렵게 한 반면, 특권기관들에 의한 부의 축적을 오히려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통제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black market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시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

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은 대중국 경제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의 의존도를 높였다.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중 대중국무역 비중이 2011년에는 89%나 되고, 북한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90% 정도가 중국산일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외경제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선 국방위원회가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김정일 시대의 국가생존전략이었던 선군노선을 여전히 계승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음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은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군경제 노선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의 최초 문건이라고 하는 이른바 '4.6담화문'에서도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정리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과제들을 외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열병식에서 행한 김정은의 연설문에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서는 안된다."라는 언급이 있는가 하면, 2012년 11월 9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군대에 있어서 원민援民은 결코 부차적인 사업도 아니며, 실무적인 문제도 아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사활적인 과업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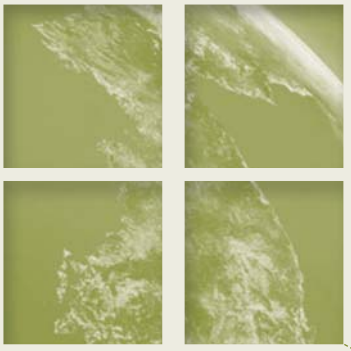
김정은 정권은 출범하면서 이른바 '강성부흥전략'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경제건설 목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대북소식통은 2012년 북한당국이 협동농장의 분조단위 축소 및 생산물 일부 자율판매 허용, 서비스·상

업 분야에서 개인투자 부분적 합법화, 국영기업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품 생산기지의 활성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합영·합작사업의 확대,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발표한 2013년 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우리식 사회주의경제를 고수하면서도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의 공식매체들은 개혁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2년 하반기에는 '70년대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우리식 경제부흥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정권의 한계로 인해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기조 위에 경제관리 시스템을 일부 개선하고 대외개방을 보다 적극화하는 방향으로만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리방식의 부분개선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야 알 수 있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수준 이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가운데 대외개방은 거점식 특구를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중국,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북한의 전반적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일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 사례는, 기존 전통적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전략 즉 군사·경제 병진 노선과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 대신, 세계 시장경제 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비교우위 발전전략과 대내경제개혁을 지향하는 대외개방전략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과 인프라가 사실상 파괴 수준에 이르러 외부자본의 유입이 있어야만 '빈곤의 늪'에서의 탈출이 가능한 북한의 경우, 이러한 발전전략의 채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실현을 위한 경제정책과 우리식 발전전략을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북한체제의 딜레마라는 제약조건 속에 머무를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 이해

2013

NORTH KOREA

제1절 북한의 교육
제2절 문학과 예술

북한의 교육과 문학·예술

VI

Key Point

+ 01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해 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상의무교육은 유명무실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해야 하며,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후, 출석률 저하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 02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정은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 03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다.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학습시키고, 과학기술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가르치며,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을 위한 체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04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는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전달하는 선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과 예술작품은 국가의 독점적 통제 하에 미美를 추구하는 대신 당성·인민성·계급성을 강조한다.

제1절 북한의 교육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 교육목표

교육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북한은 이에 주목하여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제도의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 전 교육, 무상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의 교육제도는 형식상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무상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심지어 학교건물관리에서 교육 기자재,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들이 학생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난 이후 북한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정, 부패의 일탈행위 등이 교육에도 반영, 부정입학과 성적조작 등의 각종 교육비리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로써 무상의무교육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그 의의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교육 기자재 파손, 교육시설 낙

후,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교권 하락 등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교육운영의 파행화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 분야의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는 한편, 경제재건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교육법」 등 북한의 교육 관련 법령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와 이념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교육법」 제1장 3절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에 명시된 인재의 구체적인 인간형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타나 있다.

>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다. 북한교육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이 갖추어야할 요소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혁명사상이다.

북한교육에서 혁명사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 당 정책 및 혁명전통 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등이고, 과학기술교육은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체득시켜 주기 위한 교육이며,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목표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 그리고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낙관주의를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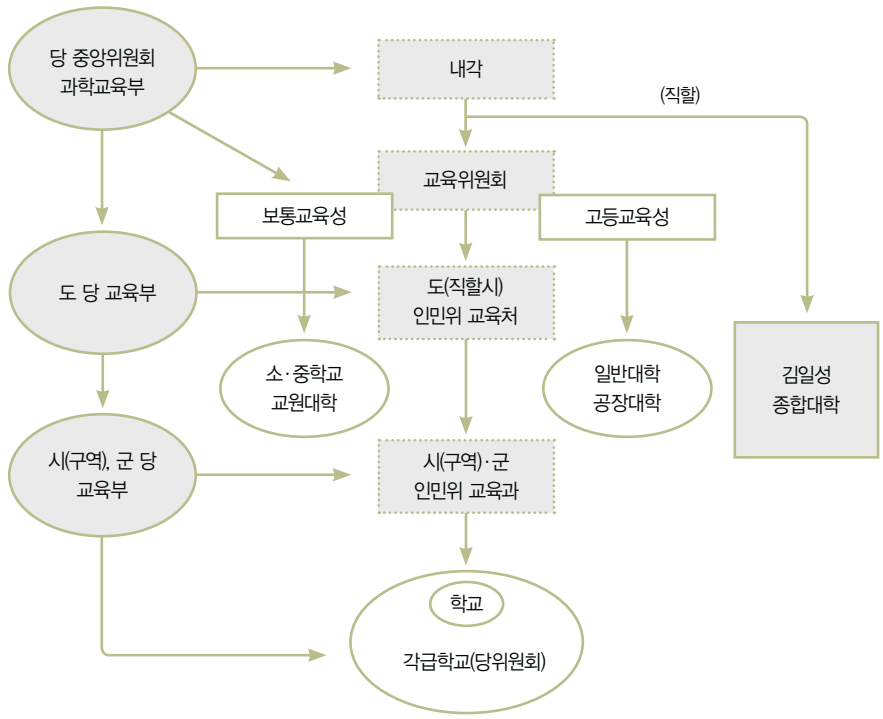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발달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교육행정은 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북한은 당-국가의 사회주의 체제로서 최고의 권한을 지닌 당이 일체의 국가기구와 사회조직을 통제하고 이들 기구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수립과 총괄적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정책의 집행 및 교육과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내각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그리고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그림 6-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당은 지시와 감독을 하고, 내각은 당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며, 학교는 교육을 실시한다.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① **노동당** 교육과 관련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 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인사나 교육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지만, 실권은 학교에 파견된 당 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이 장악하고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며 교수교양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② **내각** 행정적·실무적인 업무는 내각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대학을 관장하며, 고등교육성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지침을 각 도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한다. 교육지침이 최종적으로 각급 학교에 하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이 실시된다.

③ **학교**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행정 조직은 학교장과 학교단위 초급당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장, 그리고 각 분과와 경리주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학교에서는 교과별 분과가 조직되어 있고, 소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분과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학교 당 위원회가 있고 이 당 위원회 산하에 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 등의 사회정치활동 조직이 있다.

당 우위의 통치체제에서 당의 통제력은 실제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행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당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학교 관리·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의 권한을 능가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교육 부문에 당의 개입이 제도화된 교육의 당적 통제체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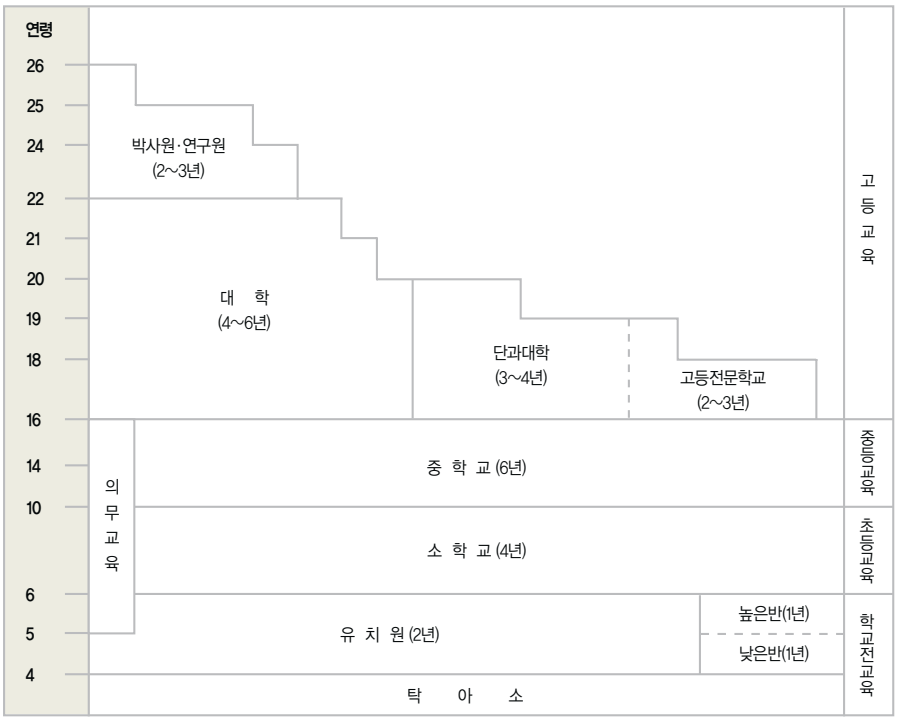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6-4(6)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집권 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 발표로 인해 향후(2013~15년부터 단계적으로) 소학교는 5년으로, 중학교 6년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성분에 따른 특수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특수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이고,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이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운영되고,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인문과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 최근에는 자연과학부의 졸업연한이 1~2년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9월 1일에 시작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개학

날이 4월 1일로 환원되었다. 방학은 여름방학(8.1~31), 겨울방학(1.1~2.16), 봄방학(3월 말 1주일)이 있으며 3월에 학년말 시험을 치르고, 4월 1일 새 학년이 시작된다.

그림 6-2 북한의 학제[35]



① 보통교육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종래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 과정을 포함한 6년제 인민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 후 수차례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제의 골간은 1972년부터 유지해오던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유치원과 초중등 단계를 포괄한 11년제의 의무교육이다.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인적 교육을 위하여

35_향후 북한의 학제는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 공포에 따른 학제개편에 의해 소학교가 4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 6년이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될 것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모든 자원이 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정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더구나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 육성을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하여 학생들을 각종 근로지원 활동에 동원시키고 있어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근로지원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있다.

소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일반중학교 학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1~4학년) 내지 10주(5~6학년) 동안 농사 지원이나 건설현장 지원을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행해지는 '김매기 전투', 모내기를 하는 '봄 전투'와 가을걷이를 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되어 20~30일씩 계속된다. 또한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시설 개보수 등 학교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등의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결석률의 증가와 취학률의 급감과 함께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수준도 저하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은 북한의 선전과 달리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평등주의적인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적인 내용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 분야의 과목에, 농촌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 분야의 과목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엘리트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와 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난으로 부족한 자원을 선택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수재교육과 외국어·컴퓨터교육 등 특수교육은 실제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일부 지역의 특수계층에게만 기회가 부여될 뿐 일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실한 교육 운영 속에 교육 외 각종 노력동원과 가중된 세외부담 등으로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당국의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서도 이 같은 실정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내실있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국가적 동원 이외의 무질서한 동원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 등에 과도한 사회적 과제부여 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고등교육

북한에서의 고등교육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설립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25 전쟁 후 3개년 복구건설기(1954~1956)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에는 경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70) 기간에는 공장대학이 증설되었다. 이어 제2차 7개년 경제계획(1978~1984) 기간에는 부족한 각급 학교 건설을 위해 소규모의 공장대

학·통신대학·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 및 일반 단과대학과 함께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 등 산업체 부설 현장대학이 설립되었다.

북한의 대학진학은 보통교육과는 다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보통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므로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으나, 대학진학은 대학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 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각 교육위원회가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해주고, 시·군 인민위원회의 대학모집과는 도에서 할당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통해 대학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 정도이며, 이 중 시험에 합격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이른바 '직통생'이라 한다. 시험에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사회인으로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보통 시험성적 순에 따라 결정되나, 성품이나 소질도 중시돼 일종의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별 성적 차를 인정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가 실시되어 지역별 학력 차를 감안하여 합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부정입학, 성적조작 등의 교육비리가 확산되면서부터 대학의 입학요건은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 교재, 교복, 숙식비 등의 각종 교육경비와 학교시설 정비, 유지와 같은 학교운영경비 등을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이 부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명문대학 내 당·정 간부, 외화벌이 지도원 등 권력부유층 자녀들의 부정입학 사례가 많다고 한다.

③ 특수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학교가 있으며,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에 소질을 가진 특기자를 가르친다.

북한은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옳게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남포·개성·청진·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로 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마다 1개교씩 추가 신설하도록 확대되었다. 주로 과학·수학·물리 등 이과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성분만이 아닌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제1중학교에서는 일반중학교와 다른 특수교재(전문대 수준)를 사용하여 자연과학, 컴퓨터 및 영어 등을 배우고, 졸업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대 1 교육을 받으며, 농촌지원 활동, 군입대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수재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인재의 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 북한당국의 수재교육 강화는 "정보산업시대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제건설과 국가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이 북한이 경제난 이후 학교운영에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수재교육의 강조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과 함께 부족한 교육예산을 선택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

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 학원의 입학자격은 소학교 졸업자로 혁명 유자녀, 영웅칭호 수여자 및 영예군인 자녀들 가운데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다. 최근 북한은 보통교육법 제정(2011.1.19)에 이어 고등교육법 제정(2011.12.14)을 통해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일꾼양성과 함께 기초과학기술과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어져 '새 세기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견인하는 인재양성을 포괄하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결정(2012.9.25)을 발표하였다.

혁명학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교육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유자녀대학,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소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8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로 입학자격은 혁명 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이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모두 기숙사 생활과 엄격한 군사조직 아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 속에 최고 대우를 받으며 졸업 후 군 또는 특수요직에 진출한다.

2 교육과정과 방법

(1) 교육과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가르치고, 과학기술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가르치며,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교육의 경우 〈표 6-1〉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특히,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사상교육·과학기술교육·체육교육·예능교육·국방교육·외국어교육 등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도화공작의 순으로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표 6-1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어린시절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수 학	6	6	6	6
6	국 어	6	6	7	8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영 어			1	1
13	컴퓨터			1	1

주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했으나, 북한의 교육과정자료 미공개로 수업시간 수는 변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 1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 말 1주일 간 봄방학)

중등교육의 경우 〈표 6-2〉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의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학교 과목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교육과 과학기술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 영어와 중국어가 그동안 제1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들도 영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표 6-2 북한의 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 어	5	5	4			
9	문 학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2	3	4	4	4
16	화 학			2	3	3	4
17	생 물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1	1
20	미 술	1	1	1			
21	제 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주1)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확인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했으나, 북한의 교육과정 자료 미공개로 수업시간 수는 변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영어교육의 강화에 이어 최근 외국어교육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시켜 외국어 실기능력과 일상적인 외국어회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목의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강의도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자연


금성 제1중학교 컴퓨터 수업

과학 부문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외국어 교수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북한이 외교관 및 무역일꾼 등을 키워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 금성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여,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국가와 당이 교육의 전반을 관리·통제하는 북한교육에서 개별학교 및 학생에게는 교육의 내용은 물론이고 교과목의 선택권이 없었으나, 2001년 4월 1일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제가 중등교육에 도입되었다. 예컨대, 농촌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교육, 어촌지역에서는 어업 관련 교육, 산간지역에서는 임업 관련 교육, 그리고 경공업 공장지역에서는 경공업 관련 교육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광업·기계·임업·식료·피복·약전弱電(통신공학) 등 6종의 교과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르나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있다.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의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과정은 전공학과의 특성에 맞게 지정한 과목과 전대학에 규정된 공통과목으로 구성되며, 전공기초는 전공에 필요한 준비과목으로 강좌별로 결정되고 전공은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에 법률대학을 설치하는 등 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률대학에는 법학과, 국제법학과, 정치학과 등 3개의 학과가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법에 우선하는 북한의 현실에

서 법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부나 철학부에 흡수되어 있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였다.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즉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 등의 교과목을 배우며,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역사〉 그리고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이 핵심내용이나, 경제난 이후 자본주의 요소 유입에 대한 경계와 핵과 미사일 등의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미대결과 투쟁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계급교양도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대미 적대 및 투쟁의식은 청소년에 대한 반미교육과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침투를 배격하는 교육의 강화와 함께 청소년·학생의 군 입대 장려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볼 때 북한의 교육과정은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사상교육 강화는 교육을 사상혁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교육과 정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기초기술교육과 실습 또는 생산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고 있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36]

(2) 교육방법

북한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된 다섯 가지의 사회주의 교육방법에 기초하고 있다.[37] 첫 번째 교육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으로, 학생들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교수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방법에는 설명을 통한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문답

36_조정아, 「북한의 교육 : 체계와 문화」, 2005년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pp.330~332.

37_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32』, pp.389~398.

식 학습을 통한 교육, 직관을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교육, 긍정 감화 교육 등이 있다.

설명을 통한 교육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은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폭넓은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답식 학습방법은 같은 책상에 앉은 학생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시험에 대비한 문제집을 교사가 미리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답안집을 만들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데 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교수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실물적인 학습수단을 많이 활용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장견학과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 감화 교육은 사상학습과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대중 앞에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총화하고 분발하도록 이끄는 사상교육방법이다. 북한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인 '…따라 배우기' 운동이 이 교육방식의 예이다.

두 번째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이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 필요한 방식이다.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방법은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이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학생들은 학생소년단, 청년동맹조직에 가입하여 녹화근위대 활동, 사회주의건설지원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네 번째 교육방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후대 교육을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학교 이외에 학생소년

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사상 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 등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교육방법은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이 어릴 때 형성되어 일생 동안 공고히 발전된다는 전제 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일생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학교전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각각의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교육방법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보화·세계화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북한은 단순한 지식습득만이 아닌 지적능력과 지식탐구 방법의 향상을 위해 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암기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험을 암기테스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실시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인 지능교육을 위해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을 실시하고,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 발표회, 교수방법 토론회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한 교사에게 '새 교수방법 등록증'을 수여하고 우수교원에게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는 김정일이 2003년 무봉중학교 현지지도를 실시한 것을 기념하여 우수교원에게 칭호를 수여한 제도이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물적 토대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도 북한교육이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원하는 구성원, 즉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 소기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 과외활동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1~3학년이 6시간, 4~6학년이 7시간이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한다. 소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20분간의 「업간체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30여 분간 점심시간을 갖는다. 중학교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의 오후 교과시간이 있어 1~2교시가 더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교과 운영은 소학교와 유사하다.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 반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 마치고, 1시 반부터는 점심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4시에 시작하여 1강좌를 하고 5시 반에는 정규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는다. 고급관리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을 초대해 부정기적으로 자녀의 지도를 부탁하기는 하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 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

원의 지도를 받는 보충수업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소조·외국어소조·예체능소조 등이 있으며, 매일 방과 후 2~3시간 정도 실시된다.



소년단 입단식

북한 학생에게 특징적인 과외활동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결합되어 있어 모든 학생은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소학생은 연간 2~4주, 중학생은 연간 4~10주,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그리고 대학생은 연간 12~14주로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기간이 길어진다.

북한의 주민은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 하므로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중학교 5학년이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 소년단 일원의 상징이었던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또한 청년동맹 가입 후 바로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들어가게 된다.

군사교육훈련은 남녀학생 모두에 해당된다. 대학생이 되면 준군사조직인 대학교 교도대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게 되며, 교도대 복무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연대로, 학부는 대대로, 학과는 중대로, 그리고 학급은 소대로 편성된다.

(2) 학생의 일탈과 처벌

북한 학생들은 학교 규칙과 조직생활(소년단, 청년동맹 등)에 의해 규율통제를 받지만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일탈행위를 하기도 한다. 북한 학생의 일탈행위는 주로 결석을 비롯한 각종 학교규율 위반과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이성교제 등의 생활규율 위반이다. 경제난 이후 특징적

인 규율위반 행위는 절도와 마약(빙두)거래·복용 등 불법행위와 장발, 쫑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쓰인 옷 등 '자유주의', '황색바람' 등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문화유입에 따른 모방행위 등이다. 이 같은 학교규율 위반 현상은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 이후 가족해체와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통제이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규율 위반학생에 대한 처벌 권한은 청년동맹에 있다. 물론 교원들도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이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만, 교실 밖에서는 소년단이나 청년동맹에서 벌을 준다. 수업을 받으면서 방과 후 교양을 받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양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시·군·구역별로 문제학생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교양을 하기도 한다.

(3) 북한의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며, 대학교원의 경우 교수라고도 하는 점은 우리와 같다. 일반 교원의 경우 임금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을 받고, 대학교원인 경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등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적 혜택이 줄어들고 학교 관리와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면서 교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나빠졌다.

한편 교원들도 끊임없는 업무와 배급중단에 따른 생활고로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원들은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여 마음대로 조직생활에 빠질 수 없고 장사에 나서거나 퇴직할 수도 없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경제난 이후 교원은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다.

도시지역의 남성교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

고, 농촌에서는 뙈기밭 농사로 연명한다고 한다. 미혼여성들은 병,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여성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결근하기도 하여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시·군 당 교육부 모르게 7~10일씩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몇 개의 학급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몇몇 교원들은 성적 조작과 입시부정과 같은 불법행위나 비밀 과외학습지도 등을 통해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사범대 출신 중 성분이 좋은 집 자녀들은 학교졸업 후 보위부나 안전부 혹은 시·군 교육기관이나 군당지도원으로 빠져나가고 주로 성분 나쁜 학생들이 교원직을 수행한다고 한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원양성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양성대학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마다 1~2개씩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을, 교원대학은 3년제로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 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원의 재교육도 실시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다.

교사의 주 업무는 물론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부진 학생 혹은 우수학생의 학습지도 외에 월요일에는 학습과 총화시간을 가지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모임을 갖는다. 나머지는 교재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중학교 교원의 분과모임은 수업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서,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들은 여러 종류의 노동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철도공사 지원, 주변농장 지원, 식수, 국토정리 등 각 시기마다 제기되는 노력동원과 봄과 가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제2절 문학과 예술

1 문예정책

(1) 목표

북한의 문학예술은 문학을 비롯한 음악·미술·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장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북한은 목적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예정책은 예술성보다는 당국이 지향하는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즉,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홍보와 선전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창의를 중시하는 예술적인 가치는 배제되고 단순히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였다.

북한당국이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여 동기부여,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 확보, 그리고 북한에 의한 통일의 정당성 확보이다.

첫째, 북한의 문학예술은 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북한의 문인과 예술인들은 시기별 당의 노선에 따라 초기에는 토지개혁

등을 찬미하고, 1950년대 후반에는 '천리마운동 영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창작·보급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과 지도자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숨은 영웅'을 발굴하여 선전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소련의 붕괴, 동구권의 체제전환 등 사회주의권이 급변하는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지키세〉, 〈어머님은 붉은 기와 함께 계시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등과 같이 북한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결속시키고 사회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둘째, 북한의 문예정책은 지도자(수령)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나름대로 미적 측면을 추구하고 있었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계열의 문인이 대거 숙청되고, 김일성의 반제항일투쟁을 주제로 하는 '항일혁명투쟁'작품만이 정통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 이른바 5대 혁명가극(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 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5대 혁명연극(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 그리고 〈불멸의 역사〉 시리즈이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은 1920년대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안석영·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 문예단체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는 1980년대에 이르면 김정일의 우상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총서인 〈불멸의 향도〉 등 이른바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통치자에 대한 정당성 고양에 역점을 두는 작품은 경제난 등 총체적인 체제위기에 처하게 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되어 〈나는 첫 세대다〉, 〈받으시라 인민의 환호성을〉,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등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찬양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진다. 2000년대에는 "문학예술작품은 마땅히 시대정신에 맞아야 하며 시대의 숨결을 담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 집권 이후 주창되고 있는 선군정치와 이를 정당화하는 선군 영도업적을 작품에 반영하는 '선군혁명 문학예술'의 창작이 독려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문학예술 소재에 다양성을 보이면서 시문학의 서정화 경향이 나타났고 도시와 농촌의 갈등, 세대 간의 문제, 여성문제,

애정문제 등 다양한 현실문제들이 소재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이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고 반자본주의적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북한에서는 문학예술 작품에 한국사회의 부패상,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 특히 주한미군의 병폐를 집중 부각시켜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정책은 선전선동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문예이론

북한에서는 초기 KAPF 계열의 문학을 계승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예술에 무게를 두기보다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창작의 형식 면에서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내용면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성, 즉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속도전 이론, 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

관, 기본 이념, 창작방법 등 모든 문학예술의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에서 찾는 이론이다. 유일사상의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에 입각한 문학예술의 기본원리와 창작방법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작품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하여 대중성도 가미되고 있다.

북한 문예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종자론'은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 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종자론은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고,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서, 이에 의거한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군중예술론'은 창작의 주체가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여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는 이론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은 문학예술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수준을 전문 작가예술인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 문학예술을 전문예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바수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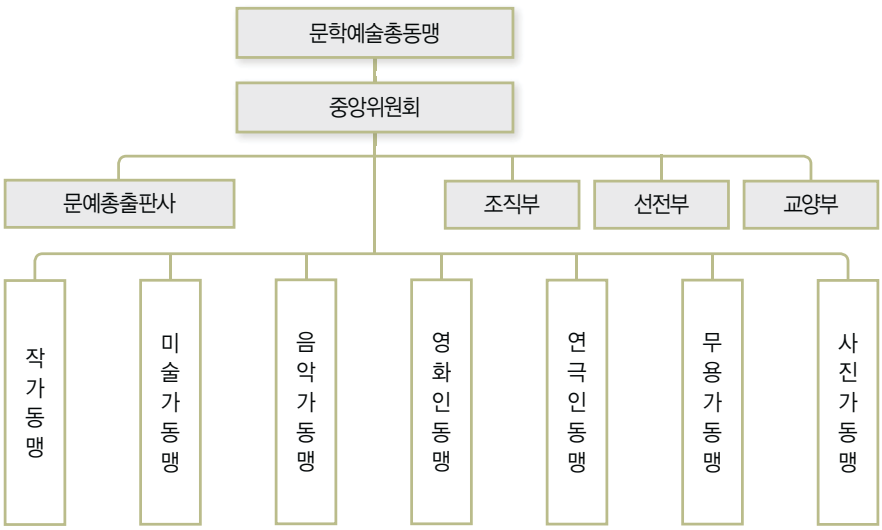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창작제도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에 걸맞게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집단적 창작은 김일성이 제안하고 김정일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3위 1체 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3위 1체 체제란 당, 행정기관, 그리고 문학·예술인(혹은 그 단체)이 공동으로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당은 작품의 내용이나 작가의 활동을 감독하며, 문화성과 같은 행정조직은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되어 작품을 창작한다. 즉 문학·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정권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며, 예술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문화성과 문예총 산하 해당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림 6-3 문학예술총동맹의 조직



주 : 각 동맹 중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 지부가 있음.

창작의 집단화를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이 단체에 소속되어야 작가·예술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문예총은 〈그림 6-3〉에 제시되어 있듯이, 작가동맹·미술가동맹·음악가동맹 등 분야별 문학·예술인 단체를 산하에 두고 있다.

공장·기업소·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 근로인민대중의 예술활동은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이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각 동맹의 후보맹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됨으로써 직업적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외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전업작가의 약 40%가 문학통신원 출신인데, 이는 직장인으로 현상모집에 응모하여 작가의 길에 들어선 경우이다.

2 분야별 실태

(1) 문 학

북한에서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 인식된다. 이는 문학이 모든 장르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학을 "주민들에게 혁명적 락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문학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창작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작품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술성보다는 얼마나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옹호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70년대 초반부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작품들을 장편소설로 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는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지주와 자본가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가 모범적·긍정적인 인물로서의 노력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 문학의 소재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 중앙'(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 가계를 소재로 하여 일방적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생활 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러한 변화상이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지만 줄거리는 남녀의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 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 등 4개의 새로운 문학개념이 나타났다. 추모문학은 김일성의 사망을 추모하는 문학으로서, 김만영의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여기에 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년대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군릉을 발굴·복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문학개념으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인상을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2000년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잇는 개념으로서, 김정일의 선군혁명업적을 문학작품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를 미화시키기 위해 전우애를 강조하거나 강성대국 건설을 군이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출하는 작품이 눈에 띄고 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인 〈라남의 열풍〉, 〈조국찬가〉를 비롯하여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서정시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등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군문학의 본보기 작품으로 김정일 외 김일성, 김정숙 등 소위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 창작이 강조되어 2009년 김일성의 업적 등을 형상화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인 〈번영의 시대〉와 〈대박산마루〉 등이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과 유머 등 간단한 읽을거리는 물론 성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삶을 다룬 작품인 김성욱의 〈나의 멋〉과 〈유치원마당가에서〉 등이 있고, 〈조선예술〉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등의 유머란에 다양한 유머를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홍석중의 〈황진이〉는 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음 악

북한의 음악은 인민의 계급의식과 공산혁명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양 및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음악은 서사적인 음악과 성악음악, 사실적인 음악과 민속음악, 단순한 화성적 음악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발간한 노래집의 절반 정도는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국민가요식의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단조로워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으며, 창법에서는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요는 당 정책선전 가요, 서정가요, 혁명가요, 조선가요 등이 있으며, 김일성 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문학예술년감〉(1998)에 실려 있는 보천보 전자악단, 왕재산 경음악단, 인민군 협주단, 만수대 예술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76곡의 악보를 보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음악이 52곡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합주하도록 하는 등 전통음

악의 양악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음악은 비정치적인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노래들도 많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통 민요의 발굴에 역점을 둔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2003년에 나온 〈황해산타령〉, 〈새타령〉, 〈느리개타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다. 계몽기 가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 아래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음악가동맹 주관으로 계몽기 가요를 발굴·정리했으며 2000년 190여 편의 노래가 수록된 '계몽기 가요집'을 펴내기도 했다. 북한은 "민족의 수난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가요들"이라며 〈고향의 봄〉, 〈반월가(반달)〉,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일제시대 불렸던 계몽기 가요를 편곡하여 보급하고 있다.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음악이 창작되어, 김일성의 사망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쳐 선군정치가 완성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선군장정의 길〉과 민요풍의 대중가요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북핵문제 등으로 미국과 대결을 강조하면서 「조국애」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널리 불리고 있는데 대표곡으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결전의 길〉 등과 같은 전시가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20대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나는 알았네〉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등이라고 한다. 〈나는 알았네〉는 전쟁영화인 〈월미도〉의 주제가이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선군정치를 주제로 한 노래이며,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는 북한의 주요 기념일 행사에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3) 무 용

북한의 무용은 가극의 한 부문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여타 예술 분야에 비해 독자적 정체성이 미약하고 음악·재담(코미디)과 곁들여 소부문으로 삽입되는 정도이며, 아동무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의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나 무용형식에서는 신체미, 율동미, 시적인 메시지보다는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동작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아리랑 공연 연습중인 북한 어린이들

1970년대 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으로 불리는 현대무용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의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 수만 명을 동원하여 화려한 집체예술로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쳐 7차례 공연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아리랑'은 2002년 김일성 생일 90돌을 맞아 체제결속을 위해 기획되어 4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5·1 경기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음악과 무용뿐 아니라 매스게임, 카드섹션, 체조, 서커스 요소까지 포함되어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서장과 4개의 장, 10경,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8월에 개막된 아리랑 공연에서는 5장 '친선 아리랑'을 새로 창작하고 '6·25 전쟁 및 중국 참전 60주년' 기념 내용을 반영하여 7장 14경이었으나 2011년에는 1장 5경이 추가되어 총 8장 19경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의 공연에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백두산모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하였으며 과수, 양어 등 인민경제 부문의 발전을 과시하는 내용 등을 새롭게 담고 있다. 2012년 공연 역시 8장 19경으로 구성된 가운데, 김일성 출생 100년을 기념하여 '주체조선 100년 시작과 번영'을 형상화하고, 김정은의 영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보다

화려한 배경대와 조명, 음악, 색상 등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아리랑 공연은 북한 전역의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관람을 유도함으로써 강성대국, 선군정치의 우월함을 선전함과 동시에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고양하기 위한 동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고된 장기훈련과 동원에 따른 인권유린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4) 미 술

북한에서는 전통미술을 배척하고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항일혁명미술을 참된 미술로 평가한다. 전통미술은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했을 뿐 계급투쟁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반면, 항일혁명미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참다운 인민적 미술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돼야 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북한 미술에는 '기념비 미술'이라는 명칭의 작품이 많으며, 노동자들이 망치 들고 노동하는 장면, 농민들이 벼이삭을 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술에서는 '추상은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상화나 추상조각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북한에서는 미술을 재료와 기법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눈다.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 유화, 벽화, 출판화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것이다.

조각에는 환각, 부각, 투각 등이 포함되는데, 애국열사릉·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은 사실주의적이면서 분노와 비탄, 투쟁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만년화'라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모자이크화처럼 그려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이며, 김일성·김정일 부자 관련 조형물을 만드는 데 주로 활용된다. 2004년도에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대형 병풍 형식의 작품 〈백두산천지의 216봉우리〉는 이른바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5) 영화 및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

북한에서 영화는 다른 어느 예술장르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조선중앙년감〉에서 〈영화년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09년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영화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영화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영화가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적 모든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 장르로서 대중에게 호소력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크게 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도 하고 정서 교양도 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지침으로 삼는 〈영화예술론〉 (1973)에 의하면, "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 감정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배우는 단순히 연기자가 아닌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감정, 생활체험 등을 미적·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재현하는 노동계급적 예술가로서 연기하도록 요구된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 악역은 미군, 일제, 반당분자, 지주, 자본가 등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

는 내용이 강화되어,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오류를 시정하는 스토리도 주요 테마가 되었다.

영화는 1960년대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제작되는 등 방대한 작품 제작에 치우쳤다. 그러나 시리즈물이 해외 영화제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1987년에 제작된 〈보증〉도 기존 북한 영화의 틀을 깨뜨리고 북한사회에 만연되어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권위주의, 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차별 등을 표현하였다. 신申 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그러한 변화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김정일의 지시로 50부작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에 다시 100부작으로 제작이 확대되어 2006년 70부작까지 제작되었다.

최근의 북한 영화는 〈선군혁명 문학예술론〉에 따른 선군정치를 반영한 작품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군사 관련 영화이다. 2003년도 대표작으로는 〈이어가는 참된 삶〉이 있다. 이 영화는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당시 전사한 병사의 자녀와 그 주변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이 외에도 〈그들은 제대병사였다〉와 〈여병사의 수기〉 등이 2003년에 제작된 대표적 영화이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영화작품으로 〈그는 대좌였다〉와 〈젊은 여단장〉 등 이른바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실천하는 모범 군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제작되었다. 또한 2006년에 상영된 〈한 여학생의 일기〉와 같이 경제난 이후 자본주의 요소 투입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사상이완 세태를 반영한 영화 등이 사상교육 강화 차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2009년에는 김정일의 선군혁명업적을 기리는 김정일 일대기를 그린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1-3부) 제1부 〈조선을 빛내이리〉,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이시며〉, 제3부 〈온 사회에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려〉를 잇따라 제작하였다. 김정일 생애에 대한 기록영화 제작은 〈위대한 력사〉 제21부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시여〉 등 소위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의 제작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3대 세습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대를 잇는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서는 신상옥·최은희 씨가 북한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7편과 이훈구의 시나리오로 만든 〈봄날의 눈석이〉, 〈생의 흔적〉, 〈자연에게 물어보라〉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들이 사실주의적인 데다 비교적 정치성·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연극은 가극에 비중을 두고 있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용과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는 북한 연극은 1980년대에 들어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 만국회〉, 〈딸에게서온 편지〉, 〈3인 1당〉 등이 대표작이다. 이들 연극들은 모두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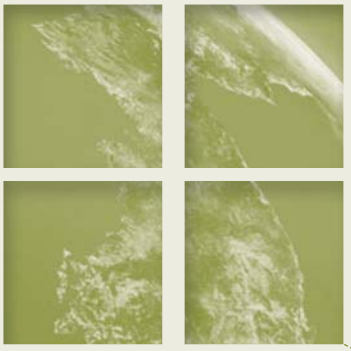
1978년 6월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하여 대규모 무대에서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공연된 〈초식〉, 〈어머니와 아들〉 등의 연극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주제와 사상을 심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단막극, 경희극 등과 같은 가벼운 코미디인 희극공연이다. 희극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웃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서 활발히 공연되고 있다.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코미디극인 〈우리〉(2005년, 인민군 4·25예술영

화촬영소 제작)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영화보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비슷한 것으로 텔레비전 소설, 텔레비전 연속소설, 텔레비전 연속극, 텔레비전 단막극 등이 있다. 텔레비전 소설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이며, 텔레비전 단막극은 텔레비전 드라마로서 텔레비전 소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연속극은 단막극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 영화도 있는데 텔레비전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로서 일반 예술영화와 달리 등장인물도 적으며 상영시간도 길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텔레비전 영화의 경우도 단편보다는 시리즈 형식이 많다.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심 주제는 지도자 가계에 대한 것과 함께 지도자를 도와 항일혁명에 참가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도 생활 속에 드러나는 부부간 갈등이나 세대차이 등을 생활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연속극 〈엄마를 깨우지 말아〉(3부작, 2002년)와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한 〈가정〉(9부작, 2001년)은 이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북한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연속극인 〈따뜻한 우리집〉(2부작, 2004년), 〈수업은 지속된다〉(8부작, 2006년) 등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드라마 편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이해

2013

NORTH KOREA

제1절 계층구조
제2절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제3절 일탈과 사회통제
제4절 북한의 인권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

VI

Key Point

+ 01

북한의 계층구조는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은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적 불평등 구조이다. 성별 불평등도 구조화되어 있는바, 북한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 02

북한주민은 당국이 지향하는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야 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자신의 이해에 부합된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은 하루생활과 생애과정이 매우 획일화되어 있으며, 의식주 생활도 원칙적으로 중앙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 03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일탈과 범죄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화되었다. 북한당국은 집단주의 학습과 조직생활을 통해 자발적 동조를 유도하는 한편, 군이 사회통제에 가담하는 등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 04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북한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주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제1절 계층구조

사회구조란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 중에 드러나는 정형화된 질서를 의미한다. 일상적 상호작용이 규칙적·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그 상호작용은 유형화되며 따라서 예측 가능한 질서를 이루게 된다. 사회질서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체제 지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제도는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제도이다.

사회계층이란 물질적 혹은 상징적 보상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의미한다. 계층 개념으로 계급이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없다. 다만 막스 베버의 계층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차원(소득과 부 등)을 계급, 정치적 차원(영향력 등)을 권력, 그리고 사회적 차원(교육과 직업 등)을 지위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 북한의 계층

(1) 출신성분에 의한 계층 분류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

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 조사사업은 북한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주민에 대한 성분 조사사업의 진행과정은 〈표 7-1〉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 7-1 **북한주민 성분 조사사업**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적대위의 사상결속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 (직계 3대·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갱신으로 불순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체계화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 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공민증 교체 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332.

북한이 계급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한 것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그리고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 사이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그리고 '공민증 갱신사업' 등 계기 시마다 꾸준히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차별적인 성분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하에 실시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만이 주민들의 소속부류를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부류를 조정할 따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 하였다.[38]

(2) 성별 계층

북한은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듬해인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는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피상적 관찰일 뿐, 북한 여성 노동력의 진입과 퇴출 과정, 성별 직종격리 현상, 그리고 여성의 비공식적 지위를 분석해 볼 때 북한 여성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이라는 이념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주체형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라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동원된 결과일 따름이다. 해방과 동시에 '민주여성동맹'이 창립되었고,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다양한 정치사상 운동에 북한 여성이 대거 동원되었다. 경제적으로 북한 여성은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산업예비군'의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경기가 비교적 좋았을 때는 여성의 대규모 노동시

38_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p.330~331.

장 진입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자 여성은 직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점차 악화되면서 개인부업적 성격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이 운영되고, 여기에 여성 '유휴노동력'이 대거 동원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른바 '밥 공장'이나 '반찬 공장' 또는 탁아소와 유아원 증설은 여성해방이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

공식적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노동(가사노동) 또한 거의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여성은 공식적으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활동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혁명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부장제가 아직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상당한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가계유지활동에서 여성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지위도 어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하늘처럼 모시던' 남편들도 집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엄격한 가부장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부분적 변화를 근거로 북한 여성의 지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차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참다운 인격체로서 사회참여를 장려하였다기보다는 노동력 착취와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는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 계층이동과 계층구조의 특징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계층이동이라고 한다. 수직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을 지칭하며, 수평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 간 또는 직업 간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 중 북한주민의 계층이동은 주로 수평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층적 지위가 의미있게 변했다고 결론짓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의 계층이동은 성분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통제되며, 거주 지역과 직업은 주로 성분정책에 의하여 배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사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이나마 계층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적대계층 주민이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층이동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임대농과 고용농의 분리, 전주錢主의 등장도 북한에 계층이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북한의 계층구조를 복잡하게 하였는바, 계층을 구분함에 있어서 경제적 지위 또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통한 계층이동이 활발하다고 결론짓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정치적 배경과 사적 연줄망, 기술 수준, 물질적 신분상승 욕구 등이 주요 요인이며, 이들 요인은 기존의 성분정책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39]

북한의 계층구조는 인위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계층은 출신성분과 '당성'黨性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보통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측정되지만, 북한의 경우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인위적 성분정책의 결과일 따름이다. 즉, 상위계층일수록 고

39_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정영철 등,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한국방송, 2005, pp.162~229.

등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지위가 높고 권한이 큰 직업을 배정 받으며, 분배에서도 특혜를 받게 된다.

둘째, 북한의 계층구조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에 근거한 폐쇄체제closed system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사회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핵심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핵심적 지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지위는 후손에게도 이어진다. 반면 출신성분이 나쁘면, 개인적 능력에 관계없이 상위계층으로의 진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기본계층이 핵심계층으로 또 복잡계층이 기본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성'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토지를 소작농, 빈농, 고용농 등에게 무상분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적 국유화(집단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의식주 관련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기관의 통제하에 분배함으로써, 북한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당국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직된 성분정책은 북한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통제 수단으로, 절대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계층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급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는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구조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 목표와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지속해야 하는 모순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지배층은 그 조직을 안정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일차적으로 제도적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하루생활과 여가 등 일상생활도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획일화는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된다.

1 북한주민의 가치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과 김일성의 권력 강화, 김정일 및 김정은의 권력 승계, 그리고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배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정치교육을 통해 이런 논리의 전파에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의도에 따라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새로운 가치관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북한이 발전시켜온 가치관의 논리들은 크게 사회주의 혁명(건설) 논리, 사회 안정논리, 위기 극복논리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건설) 논리는 구체제인 봉건주의와 타도대상인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리에 의하

면, 봉건주의는 '썩어빠진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 착취 사회로서 혁명의 대상이 된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로서 집단적 노력을 통해 건설되어야 하는 이상사회이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말 김일성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주로 사회 안정논리를 전파해 나갔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김일성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북한주민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한다. 수령(뇌수)-당(몸통)-인민(팔다리)으로 구성되는 혁명적 수령관, 수령(어버이)-당(어머니)-인민(자식)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대가정, 그리고 사회정치적 생명의 부여자라며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김일성의 전체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김일성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김정일의 권력세습이 결정되면서, 김정일 세습 및 우상화 논리도 개발되었다. 유교사상이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 핵심 요소인 충효사상과 가부장적 가치관도 동원하였다. 북한주민은 수령에 대해 끊임없이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하며, 김정일에 대해서도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야 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발전이 정체되고 급기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등 새로운 논리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1세기 태양'으로서, 결사옹위정신·총폭탄정신으로 무장하여 목숨으로 보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켜 왔으며, 김정은도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김일성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야 했다. 이들 가치관은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체제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적 가치관ideal valu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이런 가치관을 전적

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당국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반면 내면적으로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현실적 가치관real value을 발달시켜 왔다. 결국 북한주민의 행동양식은 이상적 가치관과 현실적 가치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주민의 가치관은 이중성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사경제활동이 심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돈과 금전적 이익 중심의 시장 경제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집단주의보다는 가족주의적·개인주의적 성향도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실정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1) 평등주의와 차별 의식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토지, 자본,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하였으며, 이념적으로는 평등주의를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은 평등주의 가치관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하는 평등이념은 사회주의 혁명 및 권력의 일인 집중을 정당화하는 수사rhetoric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차별과 불평등 의식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사회가 불평등 사회이며 그 불평등 구조는 인위적인 성분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악성 불평등 사회이다. 북한주민들도 당 간부의 전횡과 성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당연시한다. 3대 세습체제는 권력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불평등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능력이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 취업뿐 아니라 결혼, 거주지까지 영향을 받으며, 특히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계층과 일반 주민 간에는 의식주 확보, 교

육, 경제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사회적 신분상승 등 조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회와 삶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집단주의와 사회적 나태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를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본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정치·경제·문화·도덕 등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이다. 헌법에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집단주의에서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 능력이나 생산성보다는 동지애·의리를 중시한다.

집단주의는 공동의 노력과 공동의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사회적 나태'social loafing 현상을 보인다. 사회적 나태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는 비례해서 작아지는 현상이다. 북한주민이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성취도가 낮으며, 이러한 사회적 나태현상이 북한 경제 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획일주의와 선호위장(選好僞裝)

북한은 당의 혁명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이익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북한주민 모두가 단일 이데올로기 하에서 단일 생활양식을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획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상통제, 조직생활 통제, 그리고 당·정·군에 의한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수단을 동원한다. 북한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획일주의를 대표하는 현상이다.

획일주의와 사회통제의 결과는 실생활에서의 '선호위장'으로 나타난다. 선호위장이란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간의 괴리 현상으로,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

하는 이중적 가치관이다. 북한사회가 표면적으로는 단결되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 조직이 취약한 것은 선호위장의 결과이다.

(4) 수령중심주의와 집단사고

북한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로서 권위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은 수령과 함께 하도록 요구된다. 북한주민은 '수령의 교시' 및 '지도자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슴에 단 뱃지('초상휘장')에서부터 가정, 직장, 사회 등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수령과 같이' 생활한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야 하며, 집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모든 교과서에는 각 단원별로 '수령의 교시'나 '지도자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생활총화에서도 '수령의 교시'나 '지도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비판해야 한다.

수령중심주의는 결과적으로 집단사고groupthink를 가져왔다. 집단사고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본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나 대안을 무시하고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북한사회의 경직성은 수령과 체제에 대한 충실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논란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2 하루생활과 생애과정

(1) 하루생활

북한주민의 통상적 하루 일과는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북한주민은 대체로 6시를 전후하여 기상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일반 주

민은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적인 반찬이며 계란 프라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주민은 생활형편이 나은 경우에 속한다.


궤도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평양시민

북한주민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을 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사항 전달, 그리고 강연회 등 당 정치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노동신문을 보면서 토론하는 등 약 30분간 진행한다.

정규 작업은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그리고 14시에서 18시까지 4시간을 합해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을,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직장에 인접한 동료 집에서도 먹는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먹기도 한다. 주로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먹으며, 여유가 있는 집안은 김밥에 감자볶음, 소시지를 먹기도 한다. 상당수의 여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밥, 빵, 꽈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 바구니에 나물, 돼지풀, 채소 등을 채취하고 집에 도착하면 집짐승(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며,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잔일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13시에서 14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침시간을 가지며, 오후 일과는 14시에 시작하여 18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장원의 경우 일의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는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총화 시간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한

다. 생활총화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비판'과 동료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하는데, 비판의 기준으로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이 후에도 추가 노동을 하거나 학습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평일에 개인적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인 일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잡담을 하는 등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일과 후 잔업도 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갖는데, 전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개인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 수선을 하고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자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가서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땔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2) 생애과정

① **출생** 아기가 출생하면 세대주는 주거지 분주소(파출소)에 가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받아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민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등록을 하며, 다시 분주소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구역·군) 안전부에서 확인을 받아 직장 식량 취급자에게 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그리고 민족별 등을 기록한다.

② **유아기** 백일잔치는 하지 않지만, 돌잔치는 치르려고 노력한다. 아이는 생후 3개월이 지나면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높다. 나이가 4세에 이르면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5세가 되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높은 반에 편입된다.

③ **아동기·청소년기** 6세가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서 4년간 교육을 받으며, 10세가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높은반(5세)에서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가 북한에서 말하는 '전반적 의무교육기간'으로서 그 기간은 모두 11년이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소년단에 편입되며, 중학교 5학년이 되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편입되어 집단생활을 하면서 정치학습을 받는다.

④ **성년기** 중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대학진학, 군 입대, 그리고 직장배치 등 3개의 진로가 있다. 남자는 대부분은 군대에 가며, 여자는 주로 직장배치를 받는다.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직통생'은 중학교 졸업생의 12.5%이다. 직장생활 혹은 군대생활 중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배치된다.

⑤ **결혼** 북한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은 연애혼을 위주로 하지만 농촌지역에는 중매혼 전통이 많이 남아있다. 배우자를 찾을 때 결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해지면서 그 기반도 출신성분보다는 사랑과 경제적 능력으로 변하고 있다. 혼수는 대체로 여자가 장만한다. 예식장은 따로 없고 공공회관이나 신랑의 집에서 식을 올린다. 결혼식이 끝나면 공원이나 김일성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린다. 신혼여행은 없으며 신랑의 부모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휴가는 1주일이지만 보통 3일 쉬고 출근한다.

⑥ **노년기** 1960년대는 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이란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갑이 사라졌으나, 1970년대 부활되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결혼과 회갑 등의 행사를 간소하게 보낼 것을 권장한다. 북한의 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없으면 공원 등에서 소일하거나 손자를 돌보

기도 한다. 노년층은 배급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⑦ **사망**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1990년대 후반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점차 회복되어 2008년에는 약 68세에 달하고 있다. 북한도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약 7년 길다. 장례는 보통 3일장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고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1~2일장이 보편화되었다. 장례를 치를 때 남자는 검은 완장, 여자는 흰 리본을 꽂는다. 1970년대는 화장이 강요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장이 일반화되었다.

3 의식주 생활

(1) 식생활

북한주민의 식량 조달은 크게 2가지 방법 즉, 배급에 의한 방법과 스스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배급에 의한 방법은 북한주민의 전통적·제도적 식량 조달 방법이다. 북한에서는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식량공급 급수를 책정하며 이 급수에 따라 식량을 차등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식량공급 급수는 모두 9급으로 되어 있으며, 급수에 따른 1일 공급기준은 〈표 7-2〉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영아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량 부족으로 인해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배급을 줄 경우에도 등급별 정량이 지켜지지 않는다.

표 7-2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공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전업주부(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1~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미만의 유아

배급표는 모두 15개의 조각('배급눈깔')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조각에는 배급시기(상순 혹은 하순)와 날짜, 공급 급수(1~9급), 그리고 공급량(100~900g)이 적혀 있다. 직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지난 15일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한 횟수를 합쳐 해당하는 분량만큼 배급표의 작은 조각('눈깔')을 떼어내고 준다. 무단결근 하루와 3회 지각에 각각 1일치의 배급량을 공제한다.

연로보장을 받는 노부모와 직장에 배치되기 전의 자녀들, 세대주의 부양을 받는 전업주부(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준다. 세대주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배급량을 공제 당한다 하더라도 피부양인들의 배급량은 15일치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를 통해 배급을 받는다. 각 농민이 받는 결산분배량은 작업반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작업반에서 원래 계획의 80%를 달성하면,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는다. 따라서 분배량은 작업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작업반에서는 같은 양의 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량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애국미 명목으로 10%를 감축하고 다시 전쟁비축미 명목으

로 12%를 감축하는 등 그 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배급도 한 달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두 달씩 건너뛰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1995년 말에 이르면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중단하였다.

1990년대 중반 배급체계가 와해된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식량의 국정가격을 현실화(쌀 kg당 8전→44원)함으로써 종래 '무상에 가까운 배급제'를 '적절한 가격의 배급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4년 3월 군·보위부·보안성 등 체제보위 계층을 제외한 주요 기관·기업소에서의 식량 자력조달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배급제 정상화 선언 이후에는 평양 등 일부지역에서 개인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국가가 식량공급소를 통해 독점적으로 식량을 판매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식량 배급은 도시근로자·당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북부 산간지역 또는 농민 등 일부 계층은 시장 구매나 텃밭, 뙈기밭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2009.11.30) 이후 계획경제 복원의 일환으로 국가배급망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준비 부족 등으로 배급의 실시·중단이 반복되거나, 평양과 지방의 지역적 배급편차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체계가 평양시민과 일부 군부대 등 특수계층을 제외하고 와해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농장에서 식량을 훔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변에 공터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당 30평 정도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소나 감자 등을 심는 텃밭으로 활용한다. 돼지나 염소를 키우는 농민도 증가했다. 도시주민들도 텃밭을 갖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식량을 구입하는 곳은 주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으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생필품은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장마당은 대다수가 암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물자는 다양하고 풍족하지만 값이 비

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은 2009년 11월 말에 전격 실시된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보유화폐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식량 조달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화폐개혁과 함께 금지되었던 장마당은 다시 허용되었지만 극심한 인플레 현상을 보이면서 일반 주민들의 식생활은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2) 의생활

배급제도는 의생활 분야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다.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의복 또한 식량과 마찬가지로 당국에서 배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중앙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누는 등 급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의복을 배급해 왔다. 중앙공급대상자는 고급 모직물을 배급 받는다. 특히 예술가와 기자·교원 등 특수집단과 당 및 내각의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히 좋은 옷감과 의복을 공급한다. 그러나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그보다 질이 나쁜 옷감을 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판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한다.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의 공급은 사실상 식량보다 먼저 중단되었다. 의복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데 익숙한 북한주민들은 의복은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구해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학생복은 아직도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2년에 한 벌씩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최근에는 국정가격으로 공급한다. 국정가격은 장마당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지만, 공급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생복 구입도 대체로 장마당에서 이루어진다.


파마머리를 한 북한 여자 아나운서

북한주민의 의생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명목으로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을 입고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블라우스와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인과 해외교포의 왕래가 많은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많이 하였다. 1980년대에는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게재되고, 1990년대 들어 그 영역이 머리모양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북한주민의 복장이 변화된 계기는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일명 평양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주민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외국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새를 흉내 내는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졌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다양한 헤어스타일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당국에서 '민족전통'을 강조하면서 매체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칭송하는 등 전통적인 복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북한 여성의 옷차림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옷을 여러 벌 구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일반 주민들은 점퍼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 일반적이며, 주로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젊은 여성의 경우 머리를 손질하고 가볍게 화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이 든 여성들의 경우 머리 모양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3)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한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한다. 예를 들어, 1호로 분류되는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그리고 협동농장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 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 문화주택을 배정받는다. 2호인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를 배정받으며, 3호인 기업소 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 단위 부부장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는다. 4호인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온방, 베란다 시설이 달린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리고 특호로 분류되는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주택을 배정받는다. 주택배정은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경우 주택을 다시 배정받기도 한다.


농촌 문화주택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률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체육인에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위치한 원통형 아파트와 함께 개인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 일반 주민의 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신혼부

입사증이란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이다. 북한에서 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가가 배정하며, 새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입사증이 있어야 한다.

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2세대가 더불어 사는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택문제 중 하나는 그 취약성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색도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정식으로 입사증을 받아 주택을 배정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선 동거인으로 등록한 뒤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써서 주택을 거래하는 식이다.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는 원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주민들은 주택의 소유권은 없지만 돈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사진기 또는 녹음기 등을 말한다. 가구는 개인별로 장만해야 하는데, 권력층의 경우 5장 6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외제 가구와 가전제품을 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경우 5장 6기를 다 갖추기는 힘들다. 신부가 시집을 갈 때 2장 3기만 갖춰도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이다.

제3절 일탈과 사회통제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은 규범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사회일탈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는 보상하고 일탈행위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탈행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북한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통제의 대상이며, 통제는 인권 억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매체의 특성상 신문·방송 등에도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는 그 정도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계량화 작업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1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1)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 유형

북한 형법은 근본적으로 혁명성(사회주의 혁명)과 계급성(노동자 계급)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형법의 제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데 있다.

북한의 형법은 200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등 모두 7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 범죄명은 〈표 7-3〉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2004년 개정 형법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새로운 범죄가 대폭 추가되는 등 기존의 형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그리고 형벌 불소급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범죄행위의 처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개정 형법이 새로운 범죄를 대폭 추가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의 범죄를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반국가 범죄에 시위와 습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하나의 조항이었던 마약 관련 조항은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그리고 마약밀수·밀매죄 등 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는 새로이 출현한 범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다. 즉, 예전에는 비교적 북한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회통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변혁기를 거치면서 기존에 없었던 범죄가 새로이 생겨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질서 침해 범죄인 탈세죄, 상행위죄, 고리대죄, 밀주죄 그리고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인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도박죄가 여기에 속한다.

표 7-3 북한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과 범죄명

대분류	중분류	범죄명 (일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반국가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반민족범죄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범죄 불신고죄
경제 침해 범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침해 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 파손죄, 과실적 파손죄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	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 상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 외화벌이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질서 침해 범죄	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 남도벌죄, 산을 개간한 죄, 과실산불죄
	노동행정질서 침해 범죄	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문화 침해 범죄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도굴죄, 마약밀수·밀매죄
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일반행정질서 침해 범죄	집단적 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
공동생활질서 침해 범죄		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죄
생명재산 침해 범죄	생명, 건강, 인격 침해 범죄	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 성교죄
	개인소유 침해 범죄	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주 : 북한 형법상 범죄의 대분류는 모두 7개 유형인 바,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는 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 법률출판사(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 대중용』, 2004, pp.784~840.

(2)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북한은 고도의 조직사회이며 통제기제가 잘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일탈과 범죄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범죄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당국자들이 문제시 해왔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자는 반당·반혁명적 요소의 발호,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 풍조, 그리고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유약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이는 범죄와 일탈행동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① **경제범** 경제범은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서 절도죄, 밀수죄, 고리대죄 등 북한 형법상 주로 경제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범은 북한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절도는 가장 발생 빈도가 증가한 대표적 경제범이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국가 소유의 재산은 양곡 창고와 기타 생필품 배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그리고 문화재 등이 있다. 개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절도는 주로 장마당이나 역, 그리고 기차 등에서 상인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두부, 콩나물, 운동화와 옷 등 공산품, 그리고 공장 자재나 부품 등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거의 모두 절도의 대상이 된다.

북한-중국 국경을 통한 밀거래도 빈도가 증가하였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는 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 등 1차 상품도 있지만, 대체로 부피가 작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2차 상품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전기선·전화선을 절단한 구리銅, 공장 부품, 도굴품 등이 속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으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비롯하여 신발과 옷 등 의류품, 소금, 치약 등 생활용품, 그리고 안경, 필름 등 기호품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경제적 목적의 범죄와 일탈행위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갈 및 사기범죄도 확산되었으며, 불법 상행위는 단속과 묵인을 반복할 정도로 하나의 일상사가 되었다. 주민들이 '국주'(국가에서 제조한 술)와 '민주'(개인이 제조한 밀주)를 구분할 정도로 밀주도 일반화되어있다. 축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도용하기도 하며, 권력층 및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한다.

② **사회범** 사회범이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신체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침해한 범죄로서 주로 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를 들 수 있다. 대표적 대인범죄로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그리고 미성인 성교죄를 들 수 있으며, 대표적 문화침해범죄로는 외부의 문화를 반입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북한사회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사회범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변혁기를 맞으면서 사회범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주민들 간에는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인민반 생활이나 장마당 등에서 약간의 감정이 상해도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이권을 둘러싸고 종종 패싸움이 벌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신매매도 북한당국을 긴장시키는 신종 범죄이다. 인신매매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인신매매단은 주로 '결혼'을 미끼로 북한의 여성들을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 동포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챙긴다.

이른바 퇴폐적 문화반입·유포죄와 적대방송청취죄는 북한당국이 우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침해범죄이다. 북한주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노래를 부르며 우리 드라마를 시청한다. 노래는 처음에는 '연변가요'로 알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드라마는 주로 중국에서 밀수된 DVD를 통해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한방송 청취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직접 청취한 경우가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과반수가 직접 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0]

③ **공공질서위반 범죄** 공공질서위반 범죄는 성적性的 특성과 도덕성이 관련된 범죄로서, 여기에는 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죄는 가해자 외에 뚜렷한 피해자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희생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의 형법상 공동생활질서 침해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 사례금·이익금 유용죄 등이 포함된다.

40_성숙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방송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42~44.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변혁기를 거치면서 성性을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매매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매춘행위는 장마당이나 역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장마당의 경우, 젊은 여자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며, 역에서는 '대기숙박업'을 하면서 매춘행위를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북한의 신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남녀관계의 유형중 하나는 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에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혼이 증가해왔다. 부화(간통) 및 사실혼의 증가는 결국 이혼율의 증가로 연결되며, 높은 이혼율 때문에 가정해체가 증가해 왔다.

도박 및 미신행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범죄이다. 도박은 상인들이 주로 하며, 전문적인 도박조직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미신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운세, 건강, 장사와 관련하여 점을 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권력자들도 가담하고 있다.

④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포함된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사회를 일컬어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발급 등 이권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 무단 이동, 교통 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당·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농작물이나 생필품을 훔쳐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권력자들은 또한 국가재산이나 배급물자를 유용하기도 하며, 일부는 고리대금업을 통하여 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례금 착복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비공식적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비리는 보도매체를 통해서도 간접 확인되고 있다. "일부 준비되지 못한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인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특수계층화되고 있다."거나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은 당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해독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은 북한에 권력형 범죄가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2 사회통제

북한은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제동조 이념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 조직생활통제, 그리고 당과 정권기관을 통한 물리적 통제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북한은 능라인민유원지, 유경원 등 주민 대상의 대규모 위락·편의 시설을 개관하고, 공연·방송에서 미키마우스 등 미국문화의 대표적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등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체제이완을 차단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전국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 개최 등은 물리적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1) 체제동조 이념

① **집단주의와 조직생활** 북한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려는 사회이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이념은 정치경제적으로 '군중노선'으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공산주의적 미풍'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등 군중노선은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적 미풍'의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체제동조 이념을 몸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고아 입양을 장려하고, '영예군인'(상이군인)과의 결혼을 권장하며,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고향에서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 현지지도시 제시한 북한 경제 관리의 기본지침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해 나가자는 것이다.

속도전은 1974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으로 1950년대 '평양속도', 1960년대 '비날론 속도' 등 속도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100일 전투', '200일 전투',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 '1990년대 속도창조운동', 2009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속도전의 중심내용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고취,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낡은 사상 배격, 전격전·섬멸전 적용, 기술혁신운동과의 결부 등이다.

집단주의적 가치는 유아시절부터 시작하여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거치면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학습되고 장려된다. 북한의 어린이는 생후 빠르면 3개월부터 탁아소에 수용되어 집단주의를 배우기 시작하며,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다음 〈표 7-4〉는 북한주민의 생활을 집단화하기 위한 조직체의 일부이다.

② **주체사상과 변용** 북한사회에서 반복·주입되는 집단주의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 자체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표 7-4 **북한의 주요 사회조직**

단체명	가입대상	조직규모	구성방법·활동	창립일
민주여성동맹 (여맹)	여성 : 31~60세	약 20만 명	•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 당 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11.18
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협동농장원 : 31~65세 (여 : 60세)	약 130만 명	•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상교양, 농촌사업 지도	1946. 1.31
직업총동맹 (직총)	노동자, 사무원 : 31~65세 (여 : 60세)	약 160만 명	•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 9개의 산별직업동맹 •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경쟁지도	1945.11.30

출처 : 통일원, 『1995 북한개요』, p.8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53.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념적 도구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이며, 노동계급의 당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이다."라는 명제를 주장함으로써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관계로 변질되었다.[41] 이제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며, 북한주민은 수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념적 도구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심각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무사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킬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는 건설과정 중 한 번도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허구'라고 비판하던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동강 유역의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종국적으로 '대동강문화'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대동강 유역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아득한 태고로부터 태를 묻고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며 인류의 초기 문화가 싹튼 유서 깊은 역사의 성지였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북한의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식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처럼 붕괴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체연호는 김일성이 출생한 해를 기점으로 계산하며,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다. 북

41_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실을 보았다』, 한울, 1999, pp.369~393.

한의 개정 헌법(1998년과 2009년)에서는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그리고 201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김씨 일가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그 어느 체제(자본주의 체제든 동구 사회주의 체제든)보다도 우월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이를 대표한다고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2) 사회통제 기관

북한의 사회통제는 전통적으로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행정기관이 담당하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질서가 급격히 이완되고 선군정치가 실시되면서 군이 직접 사회통제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통제 체제는 당·정·군의 3원구조를 이루고 있다.

① **당**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북한사회의 전 분야를 조직하는 중추기관이다. 모든 기관에는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나간다. 일반 주민을 직접 통제하는 당의 하부조직으로는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말단에는 당원 5~30명까지 통제하는 당세포가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통제한다.

② **행정기관** 북한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들은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른바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형사재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전담기구로서, 정치사상범

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위부는 또한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공장·기업소의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들의 동태감시는 물론 김씨 일가 부자 세습 체제 구축에서 야기되는 제반 분야의 저항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보위부는 중앙으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상주시키며, 기관·기업소는 물론 군부대의 중대단위에도 요원을 파견한다.

인민보안부는 공공질서의 유지·강화뿐 아니라, 국가의 재산 보호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또한 개개인의 신원조사를 하고 사생활을 감시한다. 인민보안부는 평양에 본부를 두고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말단조직으로는 분주소(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중에서 출신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제6기 최고인민회의(1977.12)에서 주민통제 강화필요성이 제기되자 신설한 사찰기관이다. 이 기관은 개인이나 기관, 단체들의 준법분위기를 확립토록 하는 과정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북한주민의 생활은 5호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이중삼중으로 통제되어 왔다.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충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규제토록 하는 통제제도이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으며, 그 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인민반(도시)과 분조담당제(농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인민반은 통상 20~30세대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감독한다. 인민반은 월 2회 '생활총화'를 하며,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원질서 유지, 안전사고 방지 외에도 목욕, 이발 등 세세한 일상생활까지 통제대상으로 삼고 토론과 자아비판을 하게 한다.

③ **군사기관** 김일성이 "총창 위에 사회주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주장했듯이, 군사 기관은 당의 지도 밑에서 대남적화 임무를 전담하여왔다. 그러나 경제난과 사회일탈의 증가 등 체제 위기 요인이 증대되자, 이른바 '선군정치'를 명목으로 군대가 직접 사회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군 요원이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각 대학에 군 요원을 상주시키고 대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인민무력부가 직접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당국자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조치로서 민간 기관으로는 효과적인 통제가 어렵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제4절 북한의 인권

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에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적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수령중심의 일당독재체제를 통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인위적 계층정책을 통해 성분에 따라 차별정책을 실시할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실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억압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차별정책,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생명권의 침해 내용으로는 공개처형과 탈북자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 중에서는 성분에 의한 적대계층·월남자가족·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격리수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자유권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쟁점이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의 자유 침해 등에서 문제시된다.

(1) 공개처형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적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사회가 안정적이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고 이념적 동조가 약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5년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영화 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처형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고, 1997년에도 서관희 노동당 농업담당비서가 공개처형되었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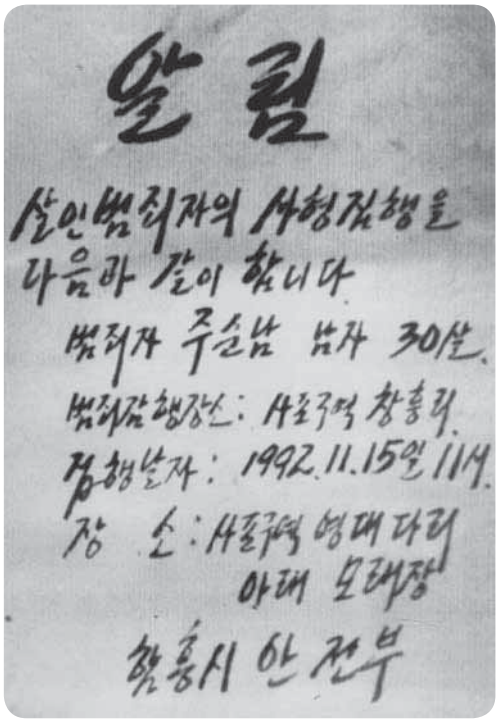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서도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다.[43]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를 중국인에게 팔았다는 죄, 성인용 녹화물을 판매한 죄, 소를 잡아먹었다는 죄,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가 강냉이를 훔쳤다는 죄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마약(속칭 '빙두') 밀수 및 밀매자, 국가수출물자 횡령자, 나무 밀수꾼이 공개처형 되는 등 공개처형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

42_김병로,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57~58.

43_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67~91.

처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처형된다.



공개처형 공고문

공개처형은 그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 처사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44] 첫째,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집행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하에 집행해야 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2) 정치범수용소

이른바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활동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까지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 회령, 청진 등

44_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70~71.

6개 지역 수용소에 약 15만 4천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5]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 위반자, 북한탈출기도자, 일부 납북인사들과 이른바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용자들은 일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탈당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불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강제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6시 작업장 출근, 7시 작업을 시작하여 오전 작업은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이후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 개간 등 중노동이며, 철저하게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대다수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뱀, 개구리, 쥐, 그리고 새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영양보충 육류라고 한다.

정치범수용소 내에는 또 다른 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을 설치하여, 규율을 어긴 자, 도둑질한 자, 성행위를 한 자, 그리고 감독의 지시 위반자를 수용하고 있다.[46] 수용소는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탈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4m 높이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곽에는 함정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장경비원이 경비견을 대동하고 부단히 순찰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사면될 때까지 무한정 갇히게 된다.

45_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124.

46_강철환, 『수용소의 노래(상권)』, 시대정신, 2003, pp.176~189.

(3) 기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북한은 체제 자체가 수령중심의 전체주의 사회로서 개인적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며,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적시하기 힘들 정도이다. 예를 들면,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거주이전은 직장 이동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되며 직장배치 자체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이전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행도 원칙적으로 시(구역)·군 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반장부터 시작하여 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 국경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며, 평양을 사적으로 여행하기 위한 승인번호는 좀처럼 받을 수 없다.

북한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따라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거나 기껏해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행위로 간주하면서 종교활동을 탄압해왔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종교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등 일부 종교시설이 1980년대부터 세워졌지만, 이는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전용 시설일 뿐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시설이 아니다.

참정권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적으로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에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포스터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할 뿐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한다. 북한주민은 라디오, TV, 녹음기 등 매체를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봉인이 뜯겨져 있을 경우 불법으로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존권 침해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공개적으로 외국에 식량지원을 호소한 1995년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일정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400만 톤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수요량을 최대 540여만 톤으로, 최소수요량을 460여만 톤으로 가정하면 해마다 60만~140만 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재원을 세습독재체제의 구축 그리고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정치·군사적 용도에 집중시키면

서 식량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다.

가용한 식량은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60만~110만 명가량의 주민이 아사하는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47]

2002년 7.1 조치가 내려지면서 배급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국영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조치에 의해 생활비(임금) 또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식품가격이 40~50배나 상승함으로써 생활비만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월 말 단행된 화폐개혁은 시장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으로 대북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북한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식량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 직업선택의 권리 침해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에서의 직업 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장배치시 선발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제들은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도 힘들뿐더러 주로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이른바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이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47_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등에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간부의 자제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적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차별적 특혜가 주어진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주민들은 노동단련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제도적으로 하루 결근 혹은 3일 지각에 하루치 식량을 공제하여 왔지만, 배급이 중단되면서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대신 자신의 농사에 전념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무단결근하는 자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물론 배가 고파서 결근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돈이 있는 경우는 뇌물로 해결하기도 한다.

(3) 기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북한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주민의 사상을 철저히 통제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고, 다른 사상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문학·예술 등 문화적 활동도 전적으로 당이 통제한다. 노동당은 모든 출판물을 직접 검열·통제하며, 대부분의 출판물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화와 권력 강화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문학·예술활동은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을 통해 통제되는 바, 작품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내용 묘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검열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가 힘들며,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해도 약은 스스로 구해야 한다. 병원 자체가 간부전용 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병원의 경우도 간부과와 일반과로 구분하여 진찰하도록 되어 있다.

3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원인은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수령중심의 일당독재, 경제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 조직적 통제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였고 그 체제는 인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48]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식 인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문화상대주의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 국가 주권의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49]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관으로 북한의 인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둘째는 인권의 배타성으로서, 인권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48_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평양), 『조선말대사전』, 1992.

49_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49~53.

북한의 인권관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인권위원회UNCHR와 총회를 통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왔다. 특히 2004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문타폰Muntarbhorn 보고관은 2008년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의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6가지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9년에 제10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제63차 유엔총회부터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등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협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09.12)시 제기된 권고사항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2011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과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하면서, 인권보고관의 현지조사를 촉구하였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체제안보적 관점과 현실적

필요 등 2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인권 공세' 및 '인권 소동'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불과하며,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의 일환'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방북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관심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오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벗어나야 할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 내 인권 보장을 홍보하는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인권 압력에 부응하여 법을 개선하는 등 형식적이나마 대응을 해왔다. 1998년에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8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런 규정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선된 규정 자체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요약하면, 북한은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체제의 특성상 인권이 경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후진국가이다. 그리고 외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상대성과 배타성을 주장하면서, 인권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찾아보기

ㄱ

가부장제 228
강성대국론 52
개성공업지구 140, 176
개혁·개방 21, 180
결산분배 240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17, 159, 168, 170
경제범 249
경제의 군사화 9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63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69, 115
공개처형 259
공산주의적 인간 18, 186, 191
과학기술교육 186. 195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145, 149
과학적 사회주의 232
교도대 111, 204
9·19 공동성명 71
국가계획위원회 16, 138
국가안전보위부 227, 255
국방공업 우선 발전 정책 143
국방위원회 45, 95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98
군사·경제 병진 노선 142
군사칭호 100
군중동원 노선 27
군중예술론 210
금강산관광지구 140, 176
기간공업과 농업 3년 연속계획 159
기초 원자재 150
김일성–김정일주의 30, 42, 56
김일성민족 57, 254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44, 102, 204

ㄴ

나선 경제특구 177
남북군사회담 121
남북기본합의서 130
내각 46, 188
노농적위군 112
노동당 36, 188, 255

ㄷ

단군릉 254
단기 속전속결 전략 103
당 규약 28, 36, 38, 42
당 대회 38
당 대표자회 39
당 비서국 41
당 정치국 39, 41, 55
당 중앙군사위원회 43, 55, 96
당 중앙위원회 39
대기숙박업 251
대남도발 122
대동강문화 254
대량살상무기 113
독보회 236

ㅁ

만년화 218
무리배치 264
무상의무교육 185
무연탄 가스공정화 153
문학예술총동맹 211, 265
물리적 통제 252
미·북 제네바 합의 66
민족공동체 11
민주여성동맹 44, 227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38

ㅂ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 70
배급눈깔 240
배합전략 105
법무생활지도위원회 256
벼랑 끝 전술 62
부서제도 101
부자 세습 27, 30
북·러 공동선언 83
북방한계선(NLL) 129
북조선인민회의 25
북중무역 163
북·중 정상회담 80
북한인권결의안 86, 267
북한 존재의 이중성 11
분조관리제 159
분조담당제 256
불평등 233
붉은청년근위대 112, 204

ㅅ

4대 군사노선 93
사회범 250
사회적 나태 234
사회정치적 생명체 15, 37, 23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86, 195, 200
사회주의 대가정 18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 14, 35
사회통제 252
3계층 51개 부류 226
3대 세습 41, 53
3대혁명소조운동 50, 253
생활총화 237
선군경제건설 노선 141
선군사상 32
선군정치 32, 51, 92
선호위장 234
성별 계층 227
성분 조사사업 226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 243
소년단 204
소조활동 203
속도전 253
수령중심주의 235
수재교육 192, 194
시민적·정치적 권리 258
10·3 합의 71

ㅇ

아리랑 공연 216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 157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31
영원한 수령 15
5장 6기 245
5호담당제 256
완전통제구역 261
우리식 사회주의 30, 53, 254
우상화 29, 54, 200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70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 73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087호 74
유엔인권선언 258
유엔 인권이사회(유엔 인권위원회) 86, 267
유일독재체제 13
6·25 전쟁 123
6자회담 68
이상적 가치관 232
2·13 합의 71
인민반 256
인민보안부 256
일당독재체제 14, 35
일반공급대상자 242
일·북 수교회담 75
일·북 평양선언 75
일탈 204, 246
입사증 244

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139
자발적 동조 231, 252
장거리 미사일 발사 73, 116
장마당 171, 241
전원회의 39
전체주의 사회 18, 35, 258
정치범수용소 260
정치사상교육 195, 200
조선민족제일주의 254
조직생활 204, 252
종자론 53, 210
종파사건 26
종합시장 172
주체농법 158
주체문예이론 209
주체비료 150
주체사상 28, 51, 253
주체섬유 150
주체연호 254
주체철 152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 143
중앙공급대상자 24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6
직통생 193, 238
집단사고 235
집단주의 18, 234, 252
집단체조 216

ㅊ

천안함 폭침 사건 131
청산리방법 253
체제동조 이념 252
총정치국 43, 95
최고검찰소 47
최고인민회의 45
최고재판소 48
출신성분 225

ㅌ

태양절 254
통일 지상주의 11
특별독재대상구역 261
특수교육 193

ㅍ

평등주의 233
포전담당제 17

ㅎ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66, 114
핵실험 62, 70, 73, 114
핵심계층 230
혁명적 수령관 232
현실적 가치관 233
협동농장 159, 240
화생무기 116
화전양면전략 122
화폐개혁 159, 174, 241
확산방지구상(PSI) 68
황금평 경제특구 81, 141, 177
획일주의 234
희천발전소 157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

_____, 『2000 북한개요』, 1999.

_____, 『2004 북한개요』, 2003.

_____,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 2006.

_____, 『남북한 교육 비교』, 2006.

_____, 『북한의 대남전략』, 2010.

_____,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_____,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1.

_____,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_____,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_____,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

_____,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2012.

_____,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2.

_____, 『북한권력기구도』, 20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 연도

_____, 『월간북한동향』, 각 연도

_____, 『통일정책연구』, 각 연도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각 연도

_____,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_____,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_____, 『북핵문제의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2009.

_____, 『2009 북한개요』, 2009.

_____, 『북한주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인식』, 2011.

_____,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_____,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_____,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01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 연도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계간), 각 연도

_____, 『2012 국제정세전망』, 2012.

국방부, 『국방백서』, 격 연도(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계간), 각 연도

_____,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군』, 2008.

_____,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2008.

_____,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2009.

_____,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1.

국방대학교, 『정보시대 전쟁의 이해』, 2004.

_____, 『2012년도 안보정세 전망』, 2011.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각 연도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2002년』, 2003.

_____, 『북한총람, 2003년~2010년』, 2011.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연도

2013

북한 이해

발행처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발행일 2013년 2월
디자인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한동문화사 02-2265-1775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